KINU 연구총서 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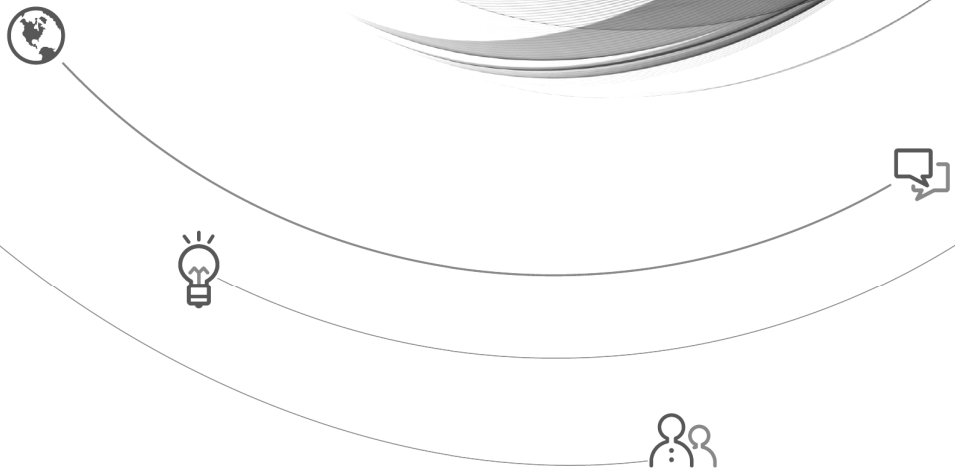
오경섭 · 김진하 · 한병진 · 박용한

KINU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연구책임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병진 (계명대학교 교수)
박용한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KINU 통일연구원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KINU 연구총서 18-23

발 행 일	2018년 12월 15일
저 자	오경섭·김진하·한병진·박용한
발 행 인	김연철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 페 이 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계문사(02-725-5216)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I S B N	978-89-8479-949-3 93340
가 격	12,000원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 약 ····· 11

Ⅰ. 서론 | 오경섭 ····· 1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
2. 선행연구 및 주요 개념 ····· 25
3. 연구방법과 내용 ····· 29

Ⅱ.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운영 ····· 31

1.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 | **박용한** ····· 33
2. 군사경제 운영 | **박용한** ····· 49
3. 김정은 정권의 군수산업 동향 | **오경섭** ····· 60

Ⅲ.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 77

1. 군수산업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 | **김진하** ····· 79
2. 군수산업 비대화의 구조 | **오경섭** ····· 114

Ⅳ. 소련 군수산업 전개와 특징 | 한병진 ····· 157
1. 소련 군수산업 경제와 정치 ····· 159
2. 소련 군수산업 정책과 발전 ····· 176
3. 소련 군수산업에 대한 평가 및 북한과의 비교 ····· 183

Ⅴ. 군사경제 비대화의 영향과 군수산업 실태 ····· 197
1. 군사경제 비대화의 경제적 영향 | 박용한 ····· 199
2. 군사경제 지속가능성 | 박용한 ····· 204
3. 군수산업 현황과 실태 | 오경섭 ····· 209

Ⅵ. 결론 | 오경섭 ····· 243

참고문헌 ····· 24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65

표 차례

〈표 Ⅱ-1〉 군사비 관련 용어 추이 ····· 36
〈표 Ⅱ-2〉 국방비 구성 ····· 37
〈표 Ⅱ-3〉 북한 군사비 변화 ····· 39
〈표 Ⅱ-4〉 북한 주요 군사력 변화(5개년 단위) ····· 42
〈표 Ⅱ-5〉 김정은 집권 5년 공개 활동 ····· 61
〈표 Ⅱ-6〉 북한 주요 핵시설 현황(확인시설) ····· 66
〈표 Ⅱ-7〉 북한 핵시설 현황(미확인시설) ····· 67
〈표 Ⅱ-8〉 북한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 69
〈표 Ⅱ-9〉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현황 ····· 70
〈표 Ⅱ-10〉 군사기술정보수집 ····· 73
〈표 Ⅱ-11〉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부 지시사항 ····· 74
〈표 Ⅱ-12〉 2012년 국방위원회 지시사항
(핵잠수함용 특수강판, HY-150) ····· 74
〈표 Ⅲ-1〉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와
제도적 자기재생산의 연속순서(Sequence) ····· 87
〈표 Ⅲ-2〉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결정적 시기와 결과 ····· 88
〈표 Ⅲ-3〉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결정적 시기와 정치적 파급효과 · 104
〈표 Ⅲ-4〉 제2경제위원회 각 국별 주요 업무 ····· 135
〈표 Ⅳ-1〉 소련 엘리트의 조정과 정치변동 ····· 171
〈표 Ⅳ-2〉 소련 당 독재와 북한 개인 독재의 조정게임 ····· 188

〈표 Ⅴ-1〉 북한 경제성장과 국방예산 증가 비교 ····· 202
〈표 Ⅴ-2〉 제2경제위원회 총국별 전문 무기생산 분야 ····· 210
〈표 Ⅴ-3〉 제1총국 산하 군수공장 ····· 211
〈표 Ⅴ-4〉 북한군 전차·장갑차 ····· 217
〈표 Ⅴ-5〉 제2총국 산하 군수공장 ····· 217
〈표 Ⅴ-6〉 북한군 야포·다련장·방사포 ····· 220
〈표 Ⅴ-7〉 제3총국 산하 군수공장 ····· 221
〈표 Ⅴ-8〉 제4총국 산하 군수공장 ····· 225
〈표 Ⅴ-9〉 제5총국 산하 군수공장 ····· 232
〈표 Ⅴ-10〉 북한의 수상함정·잠수함정 ····· 234
〈표 Ⅴ-11〉 제6총국 산하 군수공장 ····· 235
〈표 Ⅴ-12〉 제7총국 산하 군수공장 ····· 237
〈표 Ⅴ-13〉 소속 총국이 불명확한 군수공장 ····· 240

그림 차례

〈그림 Ⅱ-1〉 북한경제의 4대 경제부문 ····· 56
〈그림 Ⅱ-2〉 북한 군사경제의 자금 흐름도 ····· 58
〈그림 Ⅲ-1〉 결정적 시기와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심화 ····· 89
〈그림 Ⅲ-2〉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결정적 시기와 권력집중도 · 113
〈그림 Ⅲ-3〉 권력집중과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심화 ····· 113
〈그림 Ⅲ-4〉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 핵심 구조와 작동 ····· 117
〈그림 Ⅲ-5〉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 세부 구조와 작동 ····· 120
〈그림 Ⅲ-6〉 군수산업 관련 핵심 기관들 ····· 127
〈그림 Ⅲ-7〉 제2경제위원회 조직체계 ····· 134
〈그림 Ⅲ-8〉 국방과학원 조직체계 ····· 140
〈그림 Ⅲ-9〉 국방과학원 무기연구·개발 과제 선정 ····· 142
〈그림 Ⅲ-10〉 북한 산업 분포 ····· 145
〈그림 Ⅲ-11〉 북한 군수산업 분포 ····· 145
〈그림 Ⅲ-12〉 26호공장 지형도 ····· 147
〈그림 Ⅲ-13〉 26호공장 조직체계 ····· 148
〈그림 Ⅲ-14〉 11호공장 조직체계 ····· 149
〈그림 Ⅲ-15〉 제351호공장 당 조직체계 ····· 150
〈그림 Ⅲ-16〉 제351호공장 행정·생산 조직체계 ····· 150
〈그림 Ⅲ-17〉 26호공장 소재분공장 조직체계 ····· 152
〈그림 Ⅲ-18〉 11호공장 수정편직장 조직체계 ····· 153

〈그림 Ⅳ-1〉 개인독재권력의 정도에 대한 공식 ····· 165
〈그림 Ⅳ-2〉 소련 개인독재권력의 추이 ····· 165
〈그림 Ⅳ-3〉 소련의 당의 제도화와 개인독재권력의 추이 ····· 168
〈그림 Ⅳ-4〉 소련 군수산업 시스템 ····· 181
〈그림 Ⅳ-5〉 독재 권력과 정책 변동성의 관계 ····· 193
〈그림 Ⅳ-6〉 거부권자와 현상유지편향 ····· 194
〈그림 Ⅴ-1〉 공인분공장 조직체계 ····· 228

요 약

이 연구는 북한의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운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 경제적 결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명했다.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은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전형적인 경로의존형 제도화 때문이다.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는 국제정세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수령유일체제를 구축했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은 국제정치적 위기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각 단계에서 권력집중을 견인하는 매개물로써 기능했고, 제도적 경로의존성은 시기를 거치며 강화됐다. 결국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경로의존적인 확대재생산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버린 군사경제는 북한 권위주의체제의 권력집중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군사경제 비대화를 구조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가 구축되면서 군수산업 비대화가 고착·심화됐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수령의 수직적 권위에 의존해서 지배하는 행정적 통치체계다. 수령과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은 수직적 논의를 통해 군수생산을 진행한다. 수령의 명령과 지시는 수직적 논의를 통해 조정된다. 유관기관들은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조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수평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유관기관 간 수평적 논의의 부재는 수령의 군수생산 명령과 지시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앤다. 유관기관은 수령과 수직적 논의를 통해 기관이기주의를 관철하기에 골몰한다. 군사경제 비대화는 구조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가 군사경제 비대화를 심화시키면서 군사경

제 비효율이 커졌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군수산업 지도체계의 원형인 소련 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소련과 북한의 군수산업을 비교할 때 당 독재와 개인 독재의 질적 차이가 핵심적이다. 당 독재 질서를 반영하여 소련의 당정에 설치된 군수산업 관련 협의체는 말 그대로 관료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엘리트의 조정기구인 소련 군수산업위원회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2경제위원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공산정치질서가 수령의 직할통치로 엘리트와의 권력분담이 작동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소련과 북한의 차이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소련에서 당 독재가 정착되는 초기에는 군수산업 정책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이후 당 독재가 보다 공고해지고 군산복합체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 군수산업의 정책적 우선성이 확고히 보장된다. 소련 말 총서기장이 군수산업 개혁에 앞서 정치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당 독재 하에서 주요 이익집단인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산당 내에 자리 잡은 거부권자로서의 군산복합체가 없는 북한은 수령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군수산업의 고도화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령이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수령의 정책적·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당–국가의 동요와 반발은 당 독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노선이 야기한 소련의 보수적 당 엘리트의 반발과 정책혼란이 북한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경제 비대화는 북한 경제발전에 부담을 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한정된 자원을 군수산업에 우선 배분하는 정책은 한계를 보였다.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정책은 비탄력적·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잠식한다. 그러므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지속가능성은 비관적이다. 북한정권은 전체 경제에서 군수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제재는 지하자원, 임가공, 농수산물 수출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군사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줄일 것이다. 북한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군사경제 비대화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군사경제, 군수산업, 군수공업, 북한 군사력, 군수공장, 수령유일체제

Abstract

Cause and Current Status of Bloated Military Economy in North Korea

Oh, Gyeong Seob et al.

This research analyzes and discovers the cause and structure of North Korea's bloated military economy, its economic implications, and its sustainabilit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level of bloated military economy and its operations. The cause of the bloated military economy is an institutionalization grounded in a typical path of military industry-first policy. Kim Il-sung and Manchuria Group had utiliz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domestic politics, removed the opposition forc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industry-first policy, and established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Suryong* system). In fact, the strengthened munitions industry-first policy served as a mechanism that drove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each stage of ruling. In addition, institutionalized dependency on such policy had been reinforced over time. After all, expanded reproduction of munitions industry-first policy-dependent path and the abnormally bloated military economy thereof are the result of power concentration of North Korea's authoritative regime.

Industrialization of the military industry–first policy has created a *Suryong*–led monolithic guidance system in the military industry. The *Suryong*–led monolithic guidance system in the military industry has aggravated the bloatedness of military industry. It is because the *Suryong*–led monolithic guidance system in the military industry is an administrative governing system that operates solely in accordance with the vertical authority of *Suryong*. In fact, *Suryong* and military industry–related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the military production through a vertical discussion. In other words, *Suryong* orders the military production and provides directions to organizations in charge. Such organizations undertake the orders and follows directions of *Suryong*.

Relevant organizations do not proceed a vertical discussion between themselves—a discussion designed to adjust *Suryong's* orders and directions. In fact, the lack of vertical discussions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adjusting *Suryong's* orders and directions regarding the military production. Relevant organizations only focus on practicing organization–oriented collectivism through a *Suryong*–centered vertical discussion. It inevitabl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ineffectiveness of the military industry. The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the military industry has deepened since *Suryong* began providing a monolithic guidance solely to the military industry. The cabinet had allocated more resources primarily to the military industry as

opposed to the people's economy. As a result, the military industry has become bloated and the people's economy has increasingly suffered from the lack of resources.

The bloatedness of the military economy has had a negative impact burdening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s policy of primarily distributing limited resources to the military industry has reached some limitations. Its military industry–first policy encroaches on the economic growth by causing inelastic and ineffective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refore, the prospects of sustainability of the bloated military economy are deemed pessimistic. The North Korean regime is expected to seek to maintain the status quo by primarily allocating resources to the military industry among the entire economic sector. Strong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however, will decrease exports of underground resources, toll processing, and agro–fishery products and thus reduce the total amount of resources that could be invested in the military economy. To that end, North Korea might find itself in a situation where it can no longer maintain the bloatedness of the military economy if it fails to break away from the international sanctions.

Keywords: Military economy, Military industry, Munitions industry, North Korea's military power, Munitions factory,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Suryong* System)

I

서론

오경섭 (통일연구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재래식무기와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선언·평양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군사적 긴장해소,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축을 통해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향후 단계적 군축 단계에서는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감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단계적 군축에 대비해서 북한의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생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 비핵화 이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군사경제와 군수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군사경제 비대화는 심각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으로써 인민경제 발전을 저해했다. 북한정권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 구조조정과 민수전환을 통해 비대한 군사경제를 축소해서 민수분야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이 얼마나 비대하고, 군사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연구는 한국정부의 안보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한국의 안보정책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실태, 김정은 정권에서 군수

산업 동향, 핵·미사일 개발 실태 등을 분석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연구는 북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에서 일어난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군사경제 축소와 군수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를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방정책·경제정책이 변하면, 군수산업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중대한 정책변화를 천명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은 군수산업에서 핵·미사일 생산체제를 확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이하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핵무력 건설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1] 북한은 2013년~2017년 사이에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를 추진했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군수공장들이 핵·미사일 개발·생산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앞으로 핵무력 건설을 지속한다면 군수산업을 축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한다면 군수산업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대내외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했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다. 경제정책 변화도 선언했다.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4.1.

총력집중'을 새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2] 김정은은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통해 경제건설을 독려했다. 2018년 7월 17일 로동신문은 9면에 걸쳐서 어랑발전소 등 8곳에 대한 김정은 현지지도를 보도했다. 김정은은 팔향언제건설장을 돌아본 후 언제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내각을 질책했다.[3]

그러나 아직까지 군수산업을 감축한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 군수산업 정책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추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건설에 집중할 경우, 비대한 군사경제 축소와 군수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국방정책·경제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도 필요하다.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성채기·탁성한·임강택 등 일부 전문가들이 선행연구에서 군수산업 실태, 군사경제 운영체계, 군사경제 규모와 군사비 추계,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다뤘다.[4] 그러나 북한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방부·국정원은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자료를 축적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밀자료이므로 학계에서 활용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로동신문』, 2018.4.21.

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어랑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7.17.

4) 성채기,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서울: KIDA출판부, 2003); 탁성한, "북한의 군수산업: 북한 경제에의 영향과 향후 전망,"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12);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가 있다. 또 선행연구에서는 북한 군사비 추계를 바탕으로 군사경제 비대화를 다뤘다. 그러나 군사경제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과 구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군사경제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과 구조를 다룬다는 점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적·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군사경제 비대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북한은 군사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 군수산업으로 자원쏠림이 발생하는지,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는 무엇인지, 군사경제 비대화가 인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군사경제 비대화는 지속가능한지, 군수산업은 어떤 실태인지 등에 의문을 가졌다.

나.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군사경제 비대화의 수준과 운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군사경제 비대화가 인민경제에 미친 영향과 지속가능성, 군수산업 실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정권이 왜 군사경제 비대화의 방향으로 갔는지, 왜 군사경제 비대화를 수정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한다.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은 더글러스 노스(Douglas C. North) 등의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접근법과 대내외·정치 연계분석에 방점을 둔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 등의 이차원적 권력게임론(Logic of Two-Level Power Games)을 원용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은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전형적인 경로의존형 제도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

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경로의존적 제도화를 이용했다. 이러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제도화는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로 구조화된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군수산업 부문으로 자원쏠림을 고착시킴으로써 군사경제 비대화를 촉진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첫째,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군사경제 운영을 분석한다.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북한경제 통계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북한 국가예산과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한다.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은 북한의 재정수입과 GNI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총 세입 대비 군사비 비중, GNI 대비 군사비 비중을 판단하고 비대화 수준을 가늠한다. 이러한 군사비를 운용하는 군사경제 작동 메커니즘은 북한의 4대 경제부문들에서 자금 흐름, 전체 국가재정에서 군사경제로의 자원배분 원리(군사경제 자원배분 우선권), 군사비 지출 내역 등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군사경제 운영이 북한경제에서 군수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을 어떻게 왜곡하고, 북한 전체 재정구조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군사경제가 비대화한 원인을 규명한다. 군사경제 비대화 원인은 제도주의와 이차원적 권력게임론을 원용해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정치적 기원과 확대재생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북한에서 군사경제가 비대화한 핵심원인은 김일성의 권력집중 과정에서 김일성 중심의 승리연합이 경쟁세력 제거와 권력집중을 통해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을 제도적으로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제도화는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 구축으로 나타났다. 군사경제 비대화가 유지된 구조적 원인은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이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

도체계는 수령·군수공업부·제2경제위원회·군수공장 등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다.

셋째, 북한의 군사경제 비대화와 군수산업 발전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소련 군수산업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구소련 사례는 북한 군수산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북한이 구소련의 군수산업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북한 특색에 맞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북한과 소련은 계획경제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공유한다. 그러나 소련 당 독재와 북한 개인 독재는 군수산업 발전과정에 차이를 만든다. 소련은 당중앙상임위원회, 각료회의, 군수산업위원회의 주요 엘리트들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군수산업 정책을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의 직할통치를 받는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군수산업 정책을 결정했다. 권력분담이 작동하는 소련 당 독재 하에서 총서기장과 엘리트의 갈등으로 인해 종종 군수산업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침을 경험한다. 그러나 개인 독재는 독재자가 선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일관된 군수산업 정책을 유지한다.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소련과 달리 북한에서 군사경제가 비대화한 핵심 원인이다.

넷째, 군사경제 비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군사경제 비대화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또 군사경제 비대화가 지속가능한지를 분석한다. 즉, 군사경제 비대화를 촉발한 북한경제 운영체제가 지속가능한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결과인 군수산업 실태를 파악한다. 군수산업 현황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총국별 군수공장 현황을 분석한다.

2. 선행연구 및 주요 개념

가.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는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비대화의 수준과 운영, 정치적 원인과 구조 등을 분석한다. 이 주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군수산업 실태, 군사경제 운영체계, 군사경제 규모와 군사비 추계,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군수산업 실태는 제2경제위원회 조직과 산하 군수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5] 국내에서 제2경제위원회 조직과 구조는 북한 자료가 거의 없다. 국내 연구자들은 제2경제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유진의 자료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북한보도 등을 기초로 북한 군수산업의 관리체제와 실태를 정리한다.

북한경제는 1970년대 당경제·제2경제·인민경제로 분화했고, 1980년대에 변화를 거치면서 궁정경제·군사경제·민수경제·지하경제로 분화했다.[6] 북한이 1960년대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경제가 비대화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 군사경제가 인민경제에서 분리되었다. 군사경제는 인민경제에서 분리된 후 더 비대해졌다. 북한 군사경제 규모와 군사비 추계 연구에서는 북한 군사경제 규모를 1989년 115억 달러(전체 경제 23%), 1999년 85억 달러(전체 경제 38%)로 추정한다.[7]

---

5)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통일연구』, 창간호 (1997); 고청송,『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서울: 두솔, 2002); 임강택,『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최성빈·유재문·곽시우,『북한 군수산업 개황』(서울: KIDA출판부, 2005).

6) 성채기,『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정광민,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경제시스템의 변동,"『국방정책연구』, 제86호 (2010).

7) 성채기, 위의 책, p. 53.

북한 군수산업이 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주장과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한 투자는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대립한다.[8] 군수산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연구도 군사부문의 과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일반경제부문의 성장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북한경제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9] 북한은 1950년대 이후 군수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했으므로 인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경제와 군수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에는 북한 군수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국방부·국정원은 북한 군수산업 실태에 대한 많은 비공개 연구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2005년 이후 북한보도, 언론보도, 북한이탈주민 증언 등을 통해 공개된 북한 군수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군사경제 운영체계나 군사경제 규모와 군사비 추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군수산업에 대한 우선적 자원투자가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수준과 운영, 정치적 원인과 구조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는 북한 군사경제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군수산업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수준과 운영, 원인과 구조 등을 분석하고, 민수산업에 비해서 군수산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잘 작동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연구는 거의 없다.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국방정책·경제정책 방향을

8)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p. 118; 탁성한, "북한의 군수산업: 북한 경제에의 영향과 향후 전망," pp. 18~21.

9) 임강택, 위의 책, p. 120.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사경제 비대화를 해소함으로써 군사경제 부문의 자원을 인민경제 부문으로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우선정책의 폐기나 조정은 국방정책·경제정책 변화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우선정책의 변화 여부를 추적해야 한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군수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에 군사경제 비대화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나. 주요 개념

이 연구에서 군사경제는 무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제2경제 부문과 군의 운용 및 이를 위한 군수물자의 생산·조달을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중심의 군경제 부문을 포함한다. 제2경제 부문은 제2경제위원회와 그 산하 국방과학원 및 각급 군수공장 등 총 50만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군경제 부문은 약 110만 명의 병력과 산하 무역회사, 공장·농목장·수산사업소 등 약 150만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10]

이 연구는 군사경제 비대화를 군수산업 비대화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은 북한경제에서 30%~60%를 차지할 정도로 군사경제의 핵심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11] 이 연구에

10) 성채기,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pp. 26~27.

11) 위의 책, p. 53; 탁성한, "북한 군수산업의 능력과 전망,"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발표자료, 2012.4.). 러시아 북한전문가 안드레이 구빈은 북한의 군사공업이 GDP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이 구빈, "조선반도: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위기와 도전," 서종원, "투먼쟝 포럼 2016 참석 및 북중러 접경지역 자료수집," (한국교통연구원, 2016), p. 11.

서 군사경제 비대화는 군수산업 비대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군수산업은 국방산업·방위산업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한다. 군수산업의 광의의 의미는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산업이고, 협의의 의미는 군비 또는 전쟁에 소비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군수산업은 협의의 의미이며, 민수산업과 구분해서 사용한다.[12] 사회주의국가에서 군수산업은 내각의 지시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특화된 산업부문이다.[13]

이 연구에서 군수산업은 군수공업·병기공업·국방공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북한은 군수산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병기공업·국방공업·군수공업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국방공업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요구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업부문"이라고 규정한다.[14] 국방공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무기·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 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생산부문이다. 이 부문은 총포·탄약·지뢰·수류탄·전차·군함·군용항공기 등 전투장비와 통신·수송·공병장비 등 전투지원장비를 생산한다. 다른 하나는 군수품 생산부문이다. 이 부문은 군복·군화·개인장구·화학장비 등을 생산한다.[15] 북한은 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생산부문을 전문군수부문으로, 군수품 생산부문을 일반군수부문으로 구분한다.[16] 이 연구에서 군수산업은 전문군수부문과 일반군수부문이 모두 해당된다.

---

1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p. 162.

13) Mark Harrison, "The Soviet Defense Industry Complex in World War Ⅱ," p. 1, 〈https://warwick.ac.uk/fac/soc/economics/staff/mharrison/public/dfc1994postprint.pdf〉 (검색일: 2018.7.2.).

14)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25.

15) 김영규, "북한의 군수산업과 무기체계," 『북한』, 8월호 (1990), p. 65.

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제2호 (2004), 재인용: 김경원 외, "제5장 군수공업," 『북한의 산업』 (서울: KDB산업은행, 2015), p. 868.

3. 연구방법과 내용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비교연구,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는 북한 군사경제와 군수산업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료, 북한보도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자료 등을 활용한다. 비교연구는 북한과 구소련 사례를 비교한다. 북한의 군사경제와 군수산업 정책은 구소련의 제도를 도입해서 구축했으므로 북한과 구소련의 군사경제와 군수산업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북한이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구축하면서 구소련의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북한과 구소련 사례 비교를 통해서 북한 군수산업의 일반적 특징을 이해하고, 양국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북한 군수산업의 독특한 특징을 밝힐 것이다.

북한 군수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7명이었다. 인터뷰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 사이에 통일연구원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사정상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반 노동자 출신들에게는 군수공장 현황과 실태, 생산 등에 대해서 질문했고, 당 일꾼 이상 간부 출신들에게는 군수공장 현황과 실태, 생산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연구는 총 Ⅵ장으로 구성한다. Ⅰ장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및 주요 개념, 연구방법과 내용 등을 분석한다. Ⅱ장은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운영을 다룬다. 1절은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을, 2절은 군사경제 운영을, 3절은 김정은 정권의 군수산업 동향을 분석한다. Ⅲ장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를 다룬다. 1절은 북한 군수산업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을 다룬다. 2절은 군수산업 비대화의 구조를 다룬다.

Ⅳ장은 소련 군수산업의 전개와 특징을 다룬다. 1절은 소련 군수산업의 경제와 정치를, 2절은 소련 군수산업 정책과 발전을, 3절은 소련 군수산업 평가 및 북한과 비교를 진행한다. Ⅴ장은 군사경제 비대화의 영향과 군수산업 실태를 분석한다. 1절은 군사경제 비대화의 경제적 영향, 2절은 군사경제의 지속가능성, 3절은 군수산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다. Ⅵ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Ⅱ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운영

박용한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오경섭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

가. 북한 군사비 규모

북한 군사비 규모는 북한 당국에서 비밀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재정대비 공식 군사비 비중을 발표한다. 북한이 공개한 군사비는 11억 5천만 달러 정도다. 이는 무기 구매 비용 등을 제외한 경상유지비만을 포함한 것이다.[17] 북한의 공식 군사비가 적은 이유는 북한이 소련의 국방비 체계를 모방해서 국방예산에서 장비 획득비, 군사건설비, 군사R&D 등 군비증강 요소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식 군사비가 실제 군사비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군수산업이 전체 경제의 30%~6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18]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만 더해도 북한이 공개한 군사비를 넘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북한의 연간 핵 개발비용은 약 6억 5천만 달러, 미사일 개발비용은 연간 5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정했다.[19]

한국정부는 북한 연간 군사비 지출 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17) "꼭꼭 숨겨라… 최고인민회의도 모르는 北 국방비," 『서울신문』, 2015.6.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0017001#csidx6b988f65906fd6a9dfde3baa9644987〉 (검색일: 2018.10.1.); 북한 실질 군사비는 2008년 기준 70억~90억 달러로 분석되기도 했다.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경제적 영향분석 및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86호 (2010), p. 47.

18) 탁성한, "북한 군수산업의 능력과 전망," p. 3.

19) 일반 군사비는 80억 달러, 핵 개발 비용은 별도로 1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분석했다. 성채기,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평가: 의도와 지속가능성,"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3), 〈http://www1.kida.re.kr/nasa/report/detail.asp?idx=1036&cate=12&cyear=0&params=cate=12%5Epage=2〉 (검색일: 2018.10.1.).

평가한다. 2015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북한 연간 군사비 지출 규모가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추계는 구매력 평가 환율(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102억 달러(한화 11조 2천억 원)인데 이는 2009년에 추정했던 87억 7천만 달러에서 16.3% 증가한 규모다.[20] 이는 북한 공표군사비 11억 5천만 달러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북한 연간 총예산 77억 달러도 넘어서는 규모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식환율과 실질 환율 적용차이와 구매력 기준 환산에 따른 차이 등 다양하다. 다만 상대적 비교를 통해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밝힌 북한 군사비 11조 2천억 원을 북한 국민총소득(GNI) 36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30% 비율을 넘는다.[21] 이는 절대적 경제 규모가 큰 한국보다 높은 비중이다. 한국은 국방비로 43조 1,581억 원을 지출해 GNI 1,639조 원 대비 2.6%에 그쳤다.

북한 군사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항목으로 은닉된 부분과 누락된 군사비 투자 및 획득비 등을 반영한 후 북한의 화폐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여기엔 구체적인 장비 체계와 보유 수량 평가도 반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 실질 군사비 추계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와 한국정부의 발표를 준용했다.[22]

---

20)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군사논단』, 제39권 (2004), p. 122.

21) 2017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과 북한의 2016년 GNI를 참조. 한국 국방비는 2018년도 기준, 한국은행,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한국은행 통계는 다음을 참조.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 (검색일: 2018.8.1.).

22) 군사비 추계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조.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성재기, "북한 공표군사비 실체에 대한 정밀 재분석," 『국방정책연구』, 제70호 (2005);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정상훈 외 공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

북한 군사비 규모는 군사력 추계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 군사비를 평가하는 기관들은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기초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은행과 KIDA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방법을 비밀로 분류한다. 어떤 기관은 북한이 보유한 군사 장비 현황 등에 관한 군사비밀 자료를 활용한다. 북한 군사비를 평가하는 기관별로 추계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왜 군사비 추계 결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북한 군사비를 추계하는 기관들은 북한 군사비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 및 물자 등 총체적 재원 투입을 감안해서 북한 군사비 추정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비는 군사력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군사력은 평가 대상이 갖춘 군사전략, 군사력 수준과 의도, 군사력에 요구된 경제적 능력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군사력에 포함되는 군사부분 경제를 재정 능력인 군사비와 무기체계와 물자로 나타난 군수산업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23] 군사력과 군사비 추계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모두 유의미한 통계상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평가 대상이 갖는 재정 규모를 주요한 준거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북한에서 재정의 역할은 자본주의 체제와 다르다. 재정은 모든 경제활동 부문을 반영하고 동시에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부문은 각종 생산활동 및 비생산적 활동 등 모든 조직의 활동에 소요되는

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이달희,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의 진실 게임," 『국방정책연구』, 제70호 (2005).

23) 북한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 군사경제에 대한 개념은 다음을 요약 했다. 성채기, "북한 군사력의 경제적 기초: '군사경제' 실체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분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221~222.

자금을 공급하거나 또는 화폐적인 통제를 받는 세출제도로 구현된다.[24]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에서도 재정부문 역할이 확인된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객관적 법칙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이 필수적으로 나선다"고 설명했다.[25]

북한의 경우 국가부분이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회적 공짜'가 재정지출에서 2/3 이상의 수준을 차지한다. 경제난이 악화되었던 1993년~1994년에는 91% 수준까지 심화됐다.[26] 따라서 북한 지출예산을 통해 재정 규모 대부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북한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제를 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표 II-1〉 군사비 관련 용어 추이

구분	예산보고서	결산보고서
1962년 이전	민족보위비	언급없음
1963년	"국가방위를 배방으로 강화할 목적"	언급없음
1964년	민족보위비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하여 더 많은 자금"
1965년	"나라의 무장력 강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1966년	"국방력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
1967년 이후	국방비	–

출처: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정상훈 외 공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 191.

최고인민회의에서 언급되는 군사비 관련 용어는 다소 변화가 있

24)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p. 186.

25)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경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50.

26)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2』 (서울: 통일교육원, 2012), p. 162.

었다. 북한은 공격적 의미가 내포된 '군사비' 용어 대신에 방어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보위비', '국방비' 개념을 사용했으며 그 용어 사용은 계속 변화해 왔다.[27]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국방비는 나라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지출의 한 형태이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나라에서 국방비는 국방공업의 발전과 온 나라의 요새화를 위한 기본투자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를 위한 자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다.[28] 국방비에 국방공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수단인 군수산업 비용에 해당한다.

〈표 II-2〉 국방비 구성

목적	내용
국방공업 발전	기계설비 및 고정자산의 조성확대
요새화	방위시설 요새,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대 구축
전군간부화	군사사상적 준비
전군현대화	군사기술적 준비,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 무장, 최신과학기술 준비
전민무장화	전체 인민 무장 및 군사기술적 준비

출처: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경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p. 264, 재구성.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정 규모를 공개한다. 그러나 총예산 대비 군사비 비율만 공개하며 제한된 정보만 언급한다. 국방비가 포함하는 항목을 설명한 사전과 달리 구체적인 항목 구성이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군사비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추

27)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p. 190.

28)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경제』, p. 264.

정치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매년 발행하는 평가 자료에서 세계 각국 군사비 규모와 무기체계 평가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북한 통계를 발표하면서 재정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군사비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지만 북한 당국이 발표한 비율을 참조해 군사비를 추산할 수 있다.

〈표 Ⅱ-3〉에서 총예산은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참조했다. 재정비율은 북한 발표자료(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연감 등)를 인용했다. 국방예산 추계는 총예산에 재정비율을 단순 적용한 수치다. 〈표 Ⅱ-3〉에서 확인하듯 IISS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 군사비 규모를 평가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북한 통계를 꾸준하게 발표한다. 한국은행에서 총예산을 발표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은 조선중앙연감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감이나 로동신문에서 인용하는 재정 규모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예산지출 내용이다. 북한은 국가예산지출에 대해 "국가예산지출은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적화폐자금을 분배, 리용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이다. 국가예산지출은 국가예산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자금의 분배와 함께 그 리용을 포괄한다"고 정의한다.[29]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 예산 수입·지출은 국가의 주요 사안으로서 최고인민회의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다.[30] 군사력 평가기관에서 이를 준용하는 이유다.

---

29) 위의 책, p. 263.

30) 북한 최고인민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예산안 언급이 발견된다. "지난해 국가 예산 수입계획은 101.7%로 수행되었으며 전해보다 104.9%로 장성하였다"며 "지난해 국가 예산지출계획은 99.8%로 집행되었다"(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 국가 예산 보고, 2018년 4월 11일), 『조선중앙통신』, 2018.4.12.

〈표 Ⅱ-3〉 북한 군사비 변화

북한 원/US$ 단위 : 십억

구분	Military Balance		북한 군사비		
	국방예산		총예산	국방예산	
	북한 원	US$	US$	재정비율	US$
1990년	5.2	5.23	16.59	0.120	1.99
1991년	5.2	2.36	n/a	0.121	n/a
1992년	4.48	2.75	18.45	0.114	2.1
1993년	4.7	2.19	18.7	0.115	2.15
1994년	4.8	2.3	17.17	0.114	1.96
1995년	4.9	2.2	n/a	0.146	n/a
1996년	5.1	2.4	n/a	0.146	n/a
1997년	n/a	n/a	n/a	0.146	n/a
1998년	2.92	1.3	9.09	0.146	1.33
1999년	2.92	1.3	9.22	0.146	1.35
2000년	2.9	1.3	9.59	0.143	1.37
2001년	2.8	1.3	9.8	0.144	1.41
2002년	3.2	1.4	n/a	0.149	n/a
2003년	3.6	1.6	n/a	0.157	n/a
2004년	3.93	1.79	2.50	0.156	0.39
2005년	4.8	2.2	2.90	0.159	0.46
2006년	5	2.3	2.97	0.160	0.48
2007년	n/a	n/a	3.26	0.157	0.51
2008년	n/a	n/a	3.47	0.158	0.55
2009년	611	4.38	3.59	0.158	0.57
2010년	n/a	n/a	5.21	0.158	0.82
2011년	n/a	n/a	5.84	0.158	0.92
2012년	n/a	n/a	6.23	0.158	0.98
2013년	n/a	n/a	6.76	0.160	1.08
2014년	n/a	n/a	7.11	0.159	1.13
2015년	n/a	n/a	6.86	0.159	1.09
2016년	n/a	n/a	7.32	0.158	1.16
2017년	n/a	n/a	7.75	0.158	1.22

출처: 한국은행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http://www.bok.or.kr〉,'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연감, 각 년도) 참조.

IISS는 북한이 경제난 시기에 군사비를 축소했다고 평가한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군사비는 1992년에 전년과 비교해 다소 축소됐다가 1995년부터 회복추세로 나타났다. 1990년 12% 수준이던 군사비는 최근 15.8%까지 증가했다. 한국은행도 일부 평가를 누락한 경우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북한경제를 추정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정활동 자체가 마비되었다고 평가한다. 2002년~2003년에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영향으로 조정기간이 필요한 이유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31]

북한 군사비 추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화폐가치 평가다. 북한은 7·1조치를 단행하였고 화폐개혁을 추진해 기존 화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다. 또 북한 원을 달러로 환산할 때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사비 추계가 더 어렵다. 또 북한 군사비 평가에서 은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표군사비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확한 북한 군사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은폐된 군사비를 포함하고 화폐단위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 군사비 은폐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북한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은 아니다. 개혁개방에 있어서 선구적 모형인 중국도 여전히 군사비를 은폐한다고 추정된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회계 불투명성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해외 무기도입과 연구개발비 등 주요 항목을 누락해서다. 미 국방부는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밝힌 1,440억 달러를 초과한 1,8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같은 시기 미 국방예산 5,930억 달러와 비교하면 30% 수준이다.[32] 구 소련은 군사비 은폐를 사후에 인정했다. 북한도 유사한 경

31)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2』, pp. 138~139.

우가 있다. 김일 부수상은 1970년 11월에 5차 당 대회에서 경제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비율이 31.1%에 달한다고 보고했던 내용이다.[33]

북한처럼 은폐된 군사비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군사력을 평가해 투입된 군사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발표된 예산 자료를 재분류해 군사비 총계를 산출할 수 있다. 군사력을 평가해 투입된 군사비를 추정하고 총체적인 군사비를 추정하는 방법은 과거 미국이 소련 군사력을 추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며 한국 국방 당국도 같은 방법을 준용한다고 추정된다.[34]

나. 군사력 증강 지속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군비증강을 보면 군사비 지출이 공표예산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무기체계의 양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기체계의 양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한다. 북한의 주요 군사력 증감을 보면 대체적으로 1993년의 체계 수량 수준을 유지한다. 이것을 보면 군사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32)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고 해외 무기 도입 비용 등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7), p. 66.

33) 이 밖에도 공개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성채기, "북한 공표군사비 실체에 대한 정밀 재분석," pp. 112~118.

34) 이달희,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의 진실 게임," p. 139. 실제군사비 및 획득비 추계 방법은 직접비용적산법, 투입-산출 접근법, 소득계정법, 예산통계법, 거시통계적 방법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을 참조. 성채기, "북한 군사력의 경제적 기초: '군사경제'실체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분석," pp. 293~301.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사무기체계는 운용상 한계에 도달하면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서 해당 체계를 도태시키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한다. 북한은 구형 체계를 도태시키고 새로운 전력을 도입하여 군사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5]

예컨대 북한의 전차 보유 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Ⅱ-4〉 북한 주요 군사력 변화에 관한 IISS자료에서 북한의 전차 보유 수량을 보면, 개별 체계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량 수준이 유지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도태시켜야할 구형 전차를 신형전차로 대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Ⅱ-4〉 북한 주요 군사력 변화(5개년 단위)

단위: 대(문)

구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탱크	4,200	3,500	4,060	4,060	4,060	4,060
장갑차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야포	9,080	10,600	10,600	10,400	13,600	13,600
잠수함	75	71	71	63	72	73
전투기	730	562	554	550	559	545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각 년도) 참조.

반면 전투기는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대부분의 구형 전투기는 운용하지 않을 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훈련 중 추락하는 손실에 따른 감소가 발생한다. 북한은 전투기를 자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외부에서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다. 따라서 해당시기에 전투기 외부도입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군사비 투자의 문제로 인한 전력 축소로 판단할 수 없다.[36]

35) 박용한,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합의 함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 108.

36)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 전투기 수출을 요구했다. 북한에 전투

전반적으로 양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군사비를 지출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의 질적인 전력 증강은 군사비 소요를 늘린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 당시 소련 전차를 참고해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비롯한 군비 경쟁을 시작했다. 북한은 단순히 소련 전차의 복제품만 생산하지 않았다. 전차의 성능을 독자적으로 개량해 신형 전차를 생산해서 보유 수량을 늘렸다. 대표적인 개량 전차가 '천마호'다. 북한은 1976년부터 야간 조준경과 레이저 거리측정기(포탑위 사각형) 등을 장착한 개량형을 개발했다.[37] 포탑에는 폭발반응장갑(ERA)을 더해 방호 능력을 높였다. 북한은 2003년에는 주체 92년식 '천마-215'를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때부터 천마호 궤도 바퀴가 5륜에서 6륜으로 늘었다. 포탑에는 대전차미사일 감지 센서를 탑재해 생존성을 높였다.[38]

최근에는 한국군 전차와 대등한 수준까지 발전했다. 2004년부터 배치한 주체 93년식 '천마-216'은 천마계열 전차들 중에서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러시아에서 만든 대공미사일(SA-16)과 대전차미사일(RPO-A)를 장착했고 방호 능력도 크게 높였다. 포탑 정면 상부에 대전차미사일 2발, 후면 상부에 지대공미사일 1발을 장착했다. 북한

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이나 이들 국가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에 공격형 무기를 제공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UN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명확하게 들어날 수 있는 전투기 수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7) 한국에서 '88 전차'로 불리는 'K1' 전차를 개발해 87년 실전 배치를 시작하자 이에 대응해 92년에 '천마-92'를 내놨다. 외형상 변화를 보면 천마호는 이때부터 주조제 포탑을 용접형 포탑으로 교체했고 차체 측면을 보호하는 사이드 스커트와 연기를 발생해 적의 시야를 막는 발연기(포탑 좌우 측면) 등을 장착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했음. "3일만에 서울 들어온 북한군 탱크 부대 지금도 가능할까," 『중앙일보』, 2017.2.4, 〈http://news.joins.com/article/21210240〉 (검색일: 2018.6.1.).

38) 반응장갑의 일종으로 강판 두 장 사이에 폭발물질을 넣어 공격을 받으면 폭발한다. 피탄시 장갑을 외부로 튕겨 내기 때문에 포탄의 관통력은 줄어든다.

은 2009년에 '선군-915'라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했다. '선군-915'는 포탑에 복합 장갑을 적용한 원형 주조제를 사용함으로써 방호력이 상당히 증대됐다. 최근에는 전면에 폭발반응장갑(ERA)도 장착했고 125㎜ 활강포를 장착해 공격 능력을 강화했다.[39]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군사비 지출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장거리·중거리·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군사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군사비 투자를 유지했거나 늘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40]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투자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1만 3,000㎞까지 늘린 화성-15형을 개발했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 고도 4,475㎞에 950㎞ 거리를 비행했다. 정상 각도로 쏠 경우 1만 3,000㎞ 떨어진 미국 플로리다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별장도 표적에 들어온다. 이는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라는 의미다.[41] 북한 당국은 '11월 대사변'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기술발전이다.[42]

---

39) "3일만에 서울 들어온 북한군 탱크 부대 지금도 가능할까," 『중앙일보』, 2017.2.4.

40) 옛 소련의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40㎞)이 모태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81년 이집트로부터 도입해 해체한 뒤 역설계해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6형(스커드C·500㎞)과 화성-7형(노동·1,300㎞) 미사일을 개발해 사거리를 늘렸다. 화성-6형(스커드C)은 연료통 크기(미사일 길이)를 늘렸고, 화성-7형(노동)은 화성-5형(스커드B)의 엔진 4개를 묶어 만들었다.

41) 앞서 실험했던 화성-12형은 9월 15일 정상 각도로 발사돼 최고 고도 770㎞에 거리 3,700㎞, 화성-14형은 7월 28일 실험에서 고각 발사로 최고 고도 3,724.9㎞에 올랐고 998㎞를 날아갔다.

42) "[김정은의 무기창고(2)] 미사일은 최고의 '블루칩', 6년 만에 10배로 키웠다," 『중앙일보』, 2017.12.6, 〈http://news.joins.com/article/22179092〉 (검색일: 2018.6.1.).

화성-15형은 2017년 3월 18일 실험했던 신형 엔진인 백두산 엔진 두 개를 달아 추진력을 키웠다. 북한은 백두산 엔진 분사실험 성공을 '3·19 혁명'으로 명명했다. 백두산 엔진은 추력편향장치를 적용해 보조엔진을 장착하지 않아도 방향 조절이 가능하다. 2단 추진체는 크기를 키워서 비행거리를 늘렸다.[43]

북한은 잠수함과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투입했다. 북한 잠수함 중 가장 큰 위협은 고래급(신포급)이다. 북한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옛 소련에서 골프급 잠수함을 들여와 역설계 한 뒤 고래급을 독자 개발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첩보는 2014년 8월 처음 공개됐다. 미군 정찰 위성이 포착해서다. 이듬해 1월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를 내면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인했다.[44] 북한 당국은 2015년 5월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며 처음 공개했다. 이날 김정은도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탄도미사일 북극성-1형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고래급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아니다. 디젤 엔진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하며, 필요한 핵심 부품 구매를 시도하기도 했다.[45]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작전을 마칠 때까지 깊은 바다에 머물 수 있는데, 이는 원자로가 만든 무한정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6]

---

43) 위의 기사.

44)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 26.

45)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46) 다음의 기사를 참고했음. "[김정은의 무기창고 (1)] 바다 속 은밀한 노림수 잠수함… 한국보다 4배 많은 80척 배치," 『중앙일보』, 2017.9.28, 〈http://news.joins.com/article/21978747〉 (검색일: 2018.6.1.).

북한은 무기체계의 양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을 줄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군사력이 증가했고 군사비 지출도 상당 수준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은 1990년대 이후 성장이 침체된 북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 군수공장 비대화

군수공장들은 군사경제 비대화의 핵심적 원인이다.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통해 군수공장들에 과도하고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면서 군사경제의 비대화를 심화시켰다. 군수산업 비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각각의 무기 생산공장의 분산 건설로 인한 중복 투자이다. 김일성은 병기공장들의 간부공장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군수산업에 대한 과잉·중복 투자를 초래했다.

>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원쑤들과 싸워야 하겠는데 지금 있는 몇 개의 병기공장만 가지고서는 전시수요를 보장할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민수부문의 기계공장들이 유사시에는 다 병기공장으로 전환되여야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러자면 지금부터 일단 유사시에 민수부문의 기계공장들에서 병기를 생산할 수 잇는 준비를 하여야합니다. (중략) 민수부문의 기계공장들에서도 유사시에 전시생산으로 넘어갈수 있도록 공구, 기구도 만들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47]

47) 김일성,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병기공업부문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61년 5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42~143.

북한은 하나의 공장이 폭격으로 인해 파괴되더라도 다른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공장을 분산해서 운영한다. 무기별 군수공장을 보면, 총포공장 17개, 탄약공장 35개, 전차·장갑차공장 5개, 함정건조소 5개, 항공기공장 9개, 유도무기공장 3개, 통신장비공장 5개, 화생무기공장 8개 등이다.[48] 최근에는 제26호공장, 만경대약전공장, 평양약전기계공장, 평양1월25일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산음미사일공장, 태성공작기계공장 등 여러 개의 미사일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

둘째, 군수공장 지하화는 군수산업 비대화를 가중시켰다. 북한은 유사시 군수공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지하갱도에 배치했다. 그 결과 전문군수공장들은 80%가 지하갱도에 있다.[49] 군수공장 지하화는 공장건설비, 공장 운영 및 유지비용 부담을 크게 늘렸다. 셋째, 많은 민수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시켰다. 김일성은 1970년대 군수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수공장들을 군수공장으로 전환시켜서 제2경제위원회에 편입시켰다. 예컨대 구성광산기계공장은 원래 구성광산기계수리공장이었다. 김일성은 이 공장을 제2경제위원회로 넘기면서 탱크공장으로 개편했다.[50] 일부 민수공장들이 제2경제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수산업은 비대해졌다.

넷째, 제2경제위원회는 민수공장에까지 '일용분공장·일용직장'을 만들어서 군수생산을 확대했다. 군수산업은 인민경제 부문으로까지 더 확장했다. 민수공장도 군수생산을 병행하는 곳이 많다. 4급기업소 이상은 거의 모두 2경 산하 직장을 별도로 운영한다. 기계공장은

48) 최성빈·유재문·곽시우, 『북한 군수산업 개황』, p. 42.

49)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편, 『북한조사연구(제5권 2호)』 (서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2001), p. 77.

50) 위의 글, p. 68.

대부분 군수생산을 병행한다. 기양 뜨락또르공장은 지상에선 트랙터를 생산하지만 지하는 군수공장을 가동한다. 정주 뜨락또르공장은 대포를 생산한다. 물론 군수설비가 민수보다는 작지만 곳곳에 제2경제위원회의 손길이 미친다. 모든 기계공장에서는 2년마다 한 차례씩 「생산훈련」이란 것을 한다. 전시 생산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연습이다. 이동장비나 총·포탄을 생산하고 수류탄을 만들어 성능실험까지 한다.[51]

민수공장들에는 군수일용생산체계가 거미줄처럼 배치되어 있다. 민수공장의 일용생산체계는 무기·장비를 생산하거나 부품을 생산한다. 일용분공장은 생산과제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받고, 실행총화도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명령총화회의에서만 한다. 전력·원료·자재·재정·노력 등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은 내각에서 보장받는다. 일용분공장 지배인은 제반 기술적 조건을 갖춰서 책임지고 생산하며, 일용분공장에서 무기 부품 생산을 보장하지 못하면, 전국의 군수공장들이 거의 생산을 중단한다. 민수공장도 군수생산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하므로 민수용 생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인민경제 계획수행은 차질을 빚는다.[52]

51) 박선도, "한반도 통일시 북한 군수산업 활용 및 처리 방안," 한남대학교 안보국방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 81.

52)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p. 67~68.

2. 군사경제 운영

가. 군사경제 우선정책

북한이 군수산업을 중시한 것은 내부적 요인과 남한 요인 그리고 사회주의권 요인과 대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53] 북한은 해방 초기부터 군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김일성은 국방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의 국방우선정책은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김정은 정권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국방우선정책에 따라 군수산업에 자원 배분의 배타적 우선권을 적용하고 있다.

군수산업 우선정책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나타났다. 김일성은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열병식에서 "노동자들은 군대에 훌륭한 병기와 군복, 일용품들을 제때에 충분히 생산·공급해야만 하며 농민들은 군대의 식량을 보장하여야한다"면서 군수산업을 강조했다.[54] 국방공업 건설은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규정했다. 즉 북한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방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55]

북한은 1948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병기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북한은 1947년 9월 기관총 시험 제작을 시작했다. 1949년 2월 65공장이라는 암호명도 붙였다. 이곳에는 당시 소련인 고문관도 상

53) 이점호, "북한의 특구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 90.

54) 김일성, 『김일성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1960), p. 81.

55)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p. 225.

주했고 1,500명 노동자가 투입됐다. 김일성은 65공장이 초보적 수준이지만 자체 생산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56] 군수공장은 민수공장을 전용해 가동했다. 비료공장에서는 화약을 제조하고 제철소에서는 탄환 제조에 필요한 니켈을 생산했다. 북한은 일제가 건설한 산업 시설을 계승하면서 일부 민수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용했다. 북한은 해방 후 1차 2개년 계획에서 이미 병기 생산을 우선했고, 김책을 중심으로 병기 생산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57]

군수산업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전후 복구과정에서도 확인됐다.[58] 북한은 6·25전쟁 이후 국방공업 건설을 미국에 맞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했다. 김일성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군수산업 강화가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59] 전후 본격적인 군사경제 편중 현상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나타났다. 1953년 8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영락된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 노선'을 채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제시했다.[60]

전후 북한 경제발전은 군수산업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군수산업은 북한경제 위기상황에서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1960

56) 김일성,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 병기공업 부문 달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1961년 5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23.

57) 해방 후 초기 북한지역 산업시설 수준과 군수 공업화 과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차문석·박정진 역,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지 저,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서울: 미지북스, 2009).

58)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p. 2.

59) 권양주, 『북한군사의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 301.

60)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7), pp. 261~262.

년대는 군수산업도 다른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기초적 생산 수준을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은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면서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추진했다.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물자가 부족하고, 자원배분에서 상충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건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일반경제부문 발전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 발전 수준과 함께 군수산업 수준도 증대됐다. 특히 자체적인 생산능력은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올랐다. 중소 대립과 주체사상 영향으로 외부 원조 없는 자생적 생산 능력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국방부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7개년경제계획이 3년간 연장되었다고 주장했다.[61]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사부문에 제한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했다. 그 결과 군수산업 비대화가 진행됐고, 1980년대에는 독자적인 생산을 넘어 정밀무기를 개발한 수준에 도달했다. 다만 북한 경제성장이 침체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군수산업 발전 방향도 바뀌었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재래식무기 개발은 비중이 줄고 전략무기 개발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경제가 거의 붕괴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수산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경제건설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추진하는 선군정치를 실시했다. 선군정치는 경제건설의 어느 부문보다도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62] 국방공업에 큰 힘을 넣는다는 것은 국방공업을 나라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국방공업 위주의 우리식 경제구조를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력사연구소는 그 당시 군수공업

61)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pp. 23~26.

6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111.

까지 숨을 죽였다면 군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원쑤들의 고립압살책동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63] 북한은 군수공장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수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군수생산을 강화하여야 인민군대에 현대적인 무기와 탄약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다고, 일군들은 군수생산을 소홀히 하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울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수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사문제에서 자그마한 양보도 하지 말고 적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실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출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군수생산을 다그쳐나갈수 잇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일군들이 인민생활 어렵다고 하여 경공업에만 힘을 넣고 중공업과 국방공업을 홀시하는 편향이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문제를 풀며 군수공업을 강화하여 현대적무기와 군수기재들을 생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지킬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는 몸소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수생산을 늘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아래 우리 나라의 국방공업은 새로운 튼튼한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64]

군수공장 출신 북한이탈주민들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수공장은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증언한다.[65]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

63) 위의 책, pp. 111~112.

64) 위의 책, p. 337.

65)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수공장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청진군수기계공장은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고난의 행군 시기 아무리 굶어 죽고 하는 시기도 공장이 멈추지 않고 1·2·3 교대가 일을 했어요"라고 증언했다.[66]

그러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군수공장은 생산이 감소했다. 군용 무선기를 만드는 11호공장은 1993년부터 생산이 줄었다. 제58호공장은 8시간 가동했다 8시간 전기를 끄는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했다.[67] 왜냐하면 경제위기로 인해서 수입자재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많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공장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한 달에 한 대를 생산해도 공장을 세우지는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L3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생산하기는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정상화돼서 생산될 때는 한 달에 천대씩이었다면 반이하로 준 것 같아요. 한 60%는 줄었어요. 전에는 하루에 3교대 일했는데, 1·2교대 일이 없었고, 일주일 전 부터 조금씩 일하고 거의 놀았어요. 94년도는 1교대도 나가서 놀았어요.[68]

김정은 정권에서도 군수산업 우선정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에도 군수부문에 전략물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북한에서 4대 전략물자는 연유, 생고무, 솜·테트론, 식용유 이다. 생고무의 경우, 북한 무역성이 2014년 기준으로 1만 5천 톤을 통일적으로 수입해서 내각과 군수에 4:6의 비율로 공급했다.[69] 북

66)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8.7.25, 통일연구원).
67)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8.7.19, 통일연구원).
68) 북한이탈주민 L3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한은 여전히 군수산업 우선정책에 기초해서 군수산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핵무력 건설을 통해서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70] 김정은은 경제건설을 위해서 핵무력을 건설함으로써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할 뿐 국방비 감축을 선언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4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다.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진행한 후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대륙간 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71] 2018년 신년사에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면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를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라고 지시했다.[72]

---

69) L1,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18.7.18.), p. 2.
7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4.1.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로동신문』, 2017.9.4.
72) "신년사," 『로동신문』, 2018.1.1.

나. 군사비 집행 구조

군사비 집행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은폐 군사비 집행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북한 군사비가 은폐되었다는 근거를 살펴보면 군사비 집행 과정이 드러난다.[73] 북한 군대에서 소비하는 무기 생산·공급 등 군수공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군사비 은폐체계인 이원적·중첩적 예산편성 방식이 시작되었다. 1972년경 제2경제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체계 변동과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 항목의 변화가 있었다.

제2경제위원회는 1956년 이후 비밀스럽게 조직을 유지하다가 1966년 이후 드러났다. 군수담당 부서인 제2기계공업성이 1972년 제2경제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부터 당과 국방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서 예산과 조직이 방대해졌고 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제2경제위원회 개편 배경에는 전시 체제를 대비한 국방력 강화 필요성과 김일성 유일권력 체계 개편이라는 목적이 있다.[74]

이런 구조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군수공업 생산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군사비 은폐가 가능했다. 북한 공식경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배타적 우선권을 갖는 우선부문이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우선부문에는 최고지도자 개인과 당, 국방위원회 중심의 궁정경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와 군(인민무력성)이 포함된다. 우선부문 기관에는 상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민수부문 생산규모가 45% 수준으로 하락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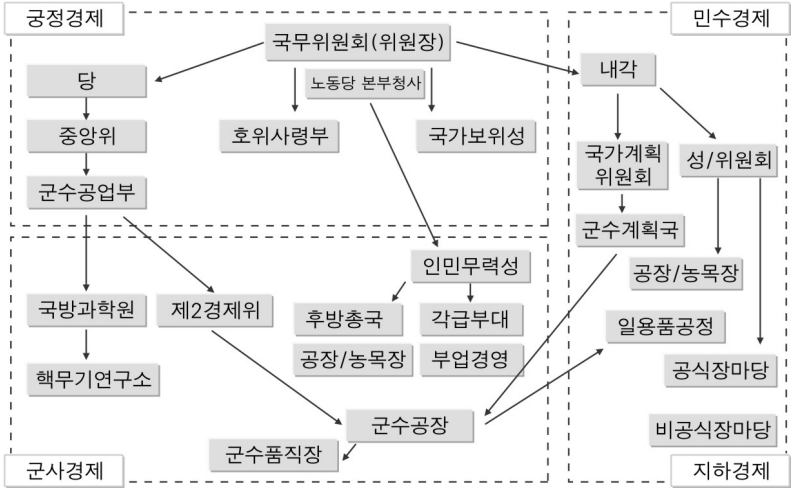
73) 본 논문은 북한 군사비 은폐 근거와 제2경제위원회 역할에 관한 다음의 논문을 인용했다.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74) 제2경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인용. 성채기, “북한 군사력의 경제적 기초: ‘군사경제’실체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분석,” pp. 251~258.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76% 수준을 유지했다.[75]

북한경제에서 4대 경제부문 관계와 군수공장 가동은 〈그림 Ⅱ-1〉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북한 권력구조 변화를 반영해 재구성했다. 기존 제2자연과학원은 1964년 국방과학원으로 개원한 이후 1970년대 제2자연과학으로 명칭을 교체한 뒤 최근 국방과학원으로 복원했다. 최근 북한 언론에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해 화학재료연구소 등 각급 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연구를 총괄한다고 추정된다.

〈그림 Ⅱ-1〉 북한경제의 4대 경제부문



출처: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군사논단』, 제39권 (2004), p. 119. 재구성.

핵무기 실험과 같은 중요 결정사항은 김정은이 직접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이 자

75)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pp. 119~120.

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정치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분석평가했다”며 토의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핵무기연구소 역할도 언급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진행한 핵무기 병기화 연구사업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하는 문제를 토의했다”며 핵무기 실험 기관을 공개했다.[76]

핵실험에 드러난 의사결정 형식은 집체적 토의와 상무위원회 결정 및 김정은 명령 과정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고 밝혔다. 핵실험 결정 과정을 근거로 중요 군사전략 및 군사비 집행도 당 집행기구를 통한 결정 및 집행이 이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Ⅱ-2〉는 앞서 확인한 우선부문들이 어떻게 자금을 재할당하여 실질적으로 군사비를 은폐하는지 설명한다.[77] 결론적으로 북한경제 전반적 분야에서 재원이 궁정경제로 축적된 뒤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는데 공식·비공식적으로 운용하는 군사비에 상당부분 지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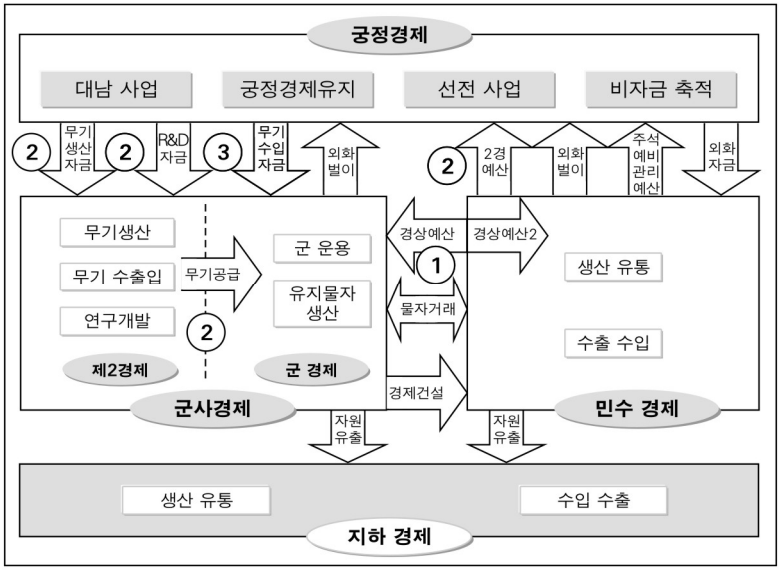
구체적인 집행 과정을 보면 은폐 군사비는 민수부문에 혼합된 경우와 궁정부문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운용된다. 그 유형은

76) 『조선중앙통신』, 2017.9.3.

77) 군사비 할당에 관한 분류와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인용했다.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pp. 123~124.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표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은 경상적 운영비 중 군인연금이나 가격편차 보상금 등 일부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적 지출도 분류되며 민수부문의 '사회문화시책비'에 포함된다(민수경제부문 '경상예산2').

〈그림 II-2〉 북한 군사경제의 자금 흐름도



출처: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p. 123.

군사부문에 집행되는 사회보장 비용은 공표군사비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인민적시책비를 통해 지출되는데 이는 예산집행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사전 기술내용을 보면 "인민적시책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예산지출의 한 형태이며 예산을 집행하여 무료교육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유급휴가와 정휴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혜택을 실시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사업비는 항일혁명투

사, 군인, 로동자, 사무원 및 협동조합원들이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년로한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때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예산지출의 한 형태이다"라고 기술하였다.[78] 따라서 이러한 예산 지출은 은폐의 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면적인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적 특징으로 인한 예산 할당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무기 및 장비 획득비와 연구개발비 등 투자예산도 은폐되어 있는데 민수부문의 '인민경제비' 항목으로 궁정부문 관할예산으로 편성된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제2경제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되며 무기개발과 조달 등을 거쳐 인민무력성에 무상으로 전달된다.('②2경예산') 셋째, 외국에서 무기를 조달해야 하는 경우 궁정부문이 장비 구입 자금을 사용기관에 재할당한다.('③무기수입 자금') 따라서 궁정부문은 군사경제 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금공급원의 기능을 하며 무기연구·개발과 구입은 외형적으로 전부 당이 할당하는 자금에 의존한다.

따라서 민수경제부문이면서도 궁정경제부문으로 편입되는 제2경제위원회 예산과 궁정부문에서 별도로 할당하는 무기구입 예산은 처음부터 은폐의 목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며 제2경제위원회가 실질적 집행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78)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인민적시책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경제』, p. 265.

3. 김정은 정권의 군수산업 동향

김정은 정권의 군수산업 동향을 보면 무기체계의 질적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이 군사경제를 축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군사비 지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핵·미사일 개발 분야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정권 이후 군수산업 동향을 핵·미사일 개발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 핵·미사일 개발 추진

김정은 정권은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국방력 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위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공업부문에는 "경량화·무인화·지능화·정밀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라는 지침을 내렸다.[79] 경량화·무인화·지능화·정밀화된 현대적 무기장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나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했다.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은 "자위적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

79) "신년사," 『로동신문』, 2014.1.1.

며 인민적인 로선"이라고 밝혔다.[80] 또 핵무력 건설을 통해서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81]

김정은이 군수산업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김정은 현지지도에 잘 나타난다. 김정은 현지지도는 군사 분야에 집중됐다. 〈표 Ⅱ-5〉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분야별 활동을 보면 군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7년 김정은 현지지도는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됐다. 2017년 군 활동은 48회로 전체 공개 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군 활동 48회에서 핵·탄도미사일 활동은 29회를 차지한다.

〈표 Ⅱ-5〉 김정은 집권 5년 공개 활동

단위: 횟수

년도	현지지도	군 활동	경제	대외	정치	문화	사회
2012	171	50	10	2	49	27	33
2013	237	76	25	3	47	37	39
2014	175	79	37	0	24	16	19
2015	153	62	40	2	25	10	14
2016	150	66	36	2	31	7	8
2017	114	48	27	0	28	6	5

출처: 『로동신문』 2012년~2017년 분석.

김정은은 2017년에 핵·미사일 병기화를 목표로 2017년 6차 핵실험 명령을 하달하고, 탄도미사일 5종(북극성-2형, 화성 12형, 스커드 개량형, 화성-14형,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참관했다. 그 외에도 미사일 발사 준비·발사 참관, 로켓엔진 실험 참관, 후속격려활동,

8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4.1.
81) 위의 기사.

명령 하달, 운용부대 및 연구시설 방문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김정은 공개 활동에는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분야 간부들이 수행했다. 2017년 김정은 공개 활동을 수행한 상위 인사들 중에는 리병철(29회), 김정식(22회), 장창하(27회), 리만건(21회), 홍승무(16회) 등이 포함된다. 김정은 공개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56회 수행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군수분야 간부들의 수행 빈도가 매우 높았다.[82]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2017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23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도 화성-14형 미사일 개발 주역들인 김정식(군수공업부 부부장), 리병철(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국방과학원장), 전일호(당중앙위원회) 등이 김정은 옆자리를 차지했다.[83]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4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42회 진행했고, 2016년~2017년에만 32회를 실시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진행한 후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대륙간 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했다.[84] 2018년 신년사에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면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를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라고 지시했다.[85]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군수산업에 대한 자원 투입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개발·생산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들이 참여해서 협동 생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거리 미사

82) 2017년『로동신문』현지지도 관련 기사 분석(통일연구원 내부자료).

83) "김정은 좌우에 ICBM 개발자…김일성·김정일에 '신고식',"『중앙일보』, 2017.7.10, 〈https://news.joins.com/article/21741949〉(검색일: 2018.8.14.).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로동신문』, 2017.9.4.

85) "신년사,"『로동신문』, 2018.1.1.

일 액체연료인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은 함북·함남·평북 등 최소 4곳의 화학공장들에서 생산한다. UDMH 연구는 함흥비료공장·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선천화학공장기업소 등에서 진행했고, 생산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7.27연합기업소(아오지화학연합기업소)·봉화화학공장·선천인산비료공장 등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86] 미사일 발사대는 2총국 산하 제81호공장·제118호공장에서 생산한다. 각종 포무기를 생산하는 3총국 산하 26호공장에서는 화성 1·2호 미사일과 로동 1·2호미사일의 기본부품을 생산한다.

고체연료 로켓엔진은 제17호공장과 함흥 일대에 산재한 관련 시설들에서 생산한다. 제17호공장 주변에는 2월8일비날론공장, 봉궁화학공장, 흥남비료공장 등 대형 무기공장들이 있고, 고체연료로켓엔진 시험장, 국방과학원 화학물질연구소, 국가과학원 함흥분소 등이 있다. 제17호공장에서 KN-02와 KN-09에 사용하는 고체연료를 생산하면서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1형과 지상발사 북극성-2형 시험에 성공했고, 신형 SLBM 북극성-3형을 개발하고 있다. 함흥 고체연료 로켓엔진 관련시설에서는 KN-02에 사용하는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했다.[87]

제17호공장은 화약생산보다 고체연료 생산비중을 크게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7호공장은 북쪽시설에서 고체연료의 원료를 추출·배합해서 보관하고, 공장 중앙 시설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추정된

86) Joseph S. Bermudez Jr., Michael Elleman, Curtis Melvin, "UDMH Production in North Korea: Additional Facilities Likely," 『38NORTH』, 2017.10.25, 〈https://www.38north.org/2017/10/udmh102517/〉 (검색일: 2018.8.13.).

87)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s Solid-propellant Rocket Engine Production Infrastructure: The No. 17 Factory in Hamhung," 『38 NORTH』, 2018.1.30, 〈https://www.38norht.org/2018/01/no17factory180130/〉 (검색일: 2018.8.24.).

다. 고체연료를 배합해서 제조공정으로 옮길 때는 지하터널에 연결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7호공장은 2000년대 이후 12개의 신축건물을 건설했다.[88]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군수공장에 자원을 집중하고, 기존의 생산품목과 생산량을 조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산업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2경제위원회에서 기존의 재래식무기 생산 부문에 비해서 핵·미사일 개발 부문이 커졌을 것이다. 둘째, 핵·미사일 생산 군수공장들에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셋째, 핵·미사일 개발에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재래식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거나 군수산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늘렸을 것이다. 북한이 군수산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늘렸다면, 핵·미사일 개발은 군사경제를 더 비대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군수산업 투입비용을 늘리지 않았다면, 핵·미사일 생산에 참여하는 군수공장들은 기존 생산 품목과 생산량을 줄였을 것이다.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군수산업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나. 핵 개발 동향

북한의 핵 개발은 군사경제 비대화를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연간 핵 개발 비용이 약 6억 5천만 달러라고 추정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 개발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북한 핵 개발은 군수공업부에서 총괄하며, 군수공업부에서 핵 개발 중심 인물은 홍승무 부부장과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이다. 홍승무는 3차 핵실험 때

88) *Ibid.*

부터 무기개발 실무총책을 맡고 있다. 홍승무와 리홍섭은 6차 핵실험 직전에 김정은의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김정은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으로 추정되는 수소탄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핵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중앙위 위원으로 선출됐고, 군 계급장도 달았다. 김정은은 홍승무 부부장에게 대장 계급장을, 리홍섭 소장에게 상장 계급장을 달아줬다.[89]

핵무기 연구는 국방과학원 산하 101핵물리화학연구소와 핵무기연구소에서 담당한다. 101핵물리화학연구소는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에 있다. 연구소는 전체를 갱도 속에 지었기 때문에 위성촬영 화면에는 언덕밖에 보이지 않는다. 연구 인력은 국방대학·김일성종합대학 등 전국 대학의 원자력·물리학·화학 분야 최우수 졸업생 가운데 선발한 300여 명의 연구사들과 150여 명의 실험 조수들로 구성된다. 핵실험은 군수공업부의 책임 하에 국방과학원 산하 101핵물리화학연구소, 화학연구소, 화학재료연구소, 물리학연구소, 131원자력지도국 등이 협력해서 진행한다.[90]

핵무기연구소는 2016년 3월 9일 김정은이 핵무기연구부문 과학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처음 언급됐다. 이 연구소가 국방과학원 산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정은은 2017년 9월 3일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서 화성-14형 핵탄두 모형을 공개했다.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 소장은 핵무기연구소 소장으로 추정된다. 그는 해외유학 경험이 있고, 영변 핵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9월 핵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당중앙위 후보위

89) "北 핵개발 실무주역은 홍승무-리홍섭," 『dongA.com』, 2017.9.5,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72/1〉 (검색일: 2018.8.21.).

90) "북 핵개발 알고보니 '101핵물리연구소'서 주도," 『데일리안』, 2013.2.6, 〈http://www.dailan.co.kr/news/newsprint/325240〉 (검색일: 2018.8.9.).

원에 선출되었고, 2016년에 당중앙위 위원으로 승진했다.[91] 리홍섭이 김정은을 근접 수행하면서 핵탄두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과 2017년 9월 6일 6차 핵실험 이후 관련 축하행사에서 김정은이 손을 잡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핵시설 현황은 〈표 Ⅱ-6〉과 같다. 북한은 채광 및 정련시설, 원자로, 핵연료 생산시설, 재처리시설, 연구시설, 핵무기 개발시설 등을 운영한다.

〈표 Ⅱ-6〉 북한 주요 핵시설 현황(확인시설)

종류	시설명	소재	현황
채광 및 정련시설	평산우라늄광산	황해도 평산	운영중
	순천우라늄광산	평남 순천	운영중
	평산우라늄정련시설	황해도 평산	운영중
	박천우라늄정련시설	박천	가동 중지(1992년)
원자로	IRT-2000 연구로	영변 핵물리연구소	운영중
	5MWe 흑연로	영변 핵물리연구소	운영중
	50MWe 흑연로	영변	건설 중지
	200MWe 흑연로	평북 태천	건설 중지
	100MWth 경수로	영변	건설중
핵연료 생산	핵연료봉 제조시설	영변	시설 재건
	농축시설	영변	가동중
재처리	방사화학실험실	영변	운영중
연구시설	동위원소가공시설	영변	-
핵무기 개발	핵 실험장	함북 길주군 풍계리	1~6차 핵실험

출처: 안진수, 『북핵 검증, 폐기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6.18.), p. 3.

북한이 분산·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표 Ⅱ-7〉과 같다. 북한은 핵무기연구시설, 고폭실험시설, 핵무기제조

91) 전정환 외, 『김정은시대의 북한인물 따라가 보기』(서울: 선인, 2018), pp. 225~226.

시설, 핵무기 저장시설, 우라늄농축 연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운영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7〉 북한 핵시설 현황(미확인시설)

순서	시설명	위치	비고
1	핵무기연구시설	–	분산되어 존재할 가능성 높음
2	고폭실험시설	–	분산되어 존재할 가능성 높음
3	핵무기 제조시설	–	–
4	핵무기 저장시설	–	분산되어 존재할 가능성 높음
5	우라늄 농축 연구시설	–	분산되어 존재할 가능성 높음
6	우라늄 농축시설	–	영변시설 이외에 시설 존재여부 불확실

출처: 안진수, 『북핵 검증, 폐기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p. 4.

북한에는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있고, 채취 가능량은 4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우라늄광산은 순천과 평산에 있다. 우라늄 정광시설은 박천과 평산에 보유하고 있다. 박천 우라늄 정광시설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 350톤의 정광 생산실적이 있고, 평산 우라늄 정광공장은 연 20만 톤 광석을 정련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92]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북 박천군와 태천군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북 천마산에는 우라늄 제련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93]

다. 미사일 개발 동향

미사일 개발도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

92) 홍성범 외, 『북한의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 현황 조사』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p. 124.

93) "북한 핵시설 현황," 『NEWSIS』, 2018.5.9,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509_0000143857〉 (검색일: 2018.8.14.).

한이 미사일 개발에 연간 5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추정했다. 미사일 개발은 핵 개발과 더불어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다. 당에서 미사일 개발의 중심인물은 리병철(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리만건(전 군수공업부장)·김정식(군수공업부 부부장)·전일호(김책공대 자동화연구소 소장)·리광철(태성기계공장 지배인) 등이다. 미사일 연구는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다. 미사일 연구사는 1,000여 명 정도다. 이들은 평양국방대학, 룡성약전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 졸업생이다. 또 166공학연구소에는 소련에서 망명한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한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한다.[94]

최근에는 해외에서 유학한 북한 과학자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될 수 있는 과학 분야를 연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유학파 과학자 김경솔이 북한의 초고속 핵 개발에서 중심인물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하얼빈기술연구소에서 1년 넘게 연구하면서 메커트로닉스 박사학위 과정을 밟다가 귀국했다.[95]

북한은 전국 각지의 군수공장에서 미사일 생산시설을 운영한다. 미사일 생산시설은 〈표 Ⅱ-8〉과 같다. 미사일 생산은 군수공장들에서 전문 분야별로 협동생산을 진행한다. 각 군수공장들이 공장의 전문성에 맞게 미사일 부품을 생산한다. 군수공장들에서 생산한 미사일 부품들은 미사일 조립공장으로 운송한다. 조립공장은 각 군수공장들에서 보낸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된 미사일을 생산한다.

---

94) "[단독]북한 평양시내 지하 대규모 미사일 생산기지," 『미디어펜』, 2016.6.29,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_print/162849〉 (검색일: 2018.8.9.).

95) ""北 핵·미사일 개발에 유학파 과학자 포진…중국 유학생 급증" WSJ," 『뉴시스』, 2017.9.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7_0000089058&cID=10101&pID=10100〉 (검색일: 2018.8.21.).

〈표 Ⅱ-8〉 북한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제26호공장	자강도 강계	1만 명	SAM-7지대공미사일
제38호공장*	자강도 강계	–	–
만경대약전기계공장	평양시 용성	6천 명	지대지미사일(노동1·2·3호), 실크웜대함미사일
만경대보석가공공장*	평양시 만경대	–	탄두 및 폭약
평양1월25일기계공장 (평양돼지공장, 제125호공장)	평양 용성	5천 명	지대공미사일 실크웜대함미사일
동해약전공장	함북 청진	4천 명	SAM-7지대공미사일, 대전차유도탄(유선·무선)
입불동미사일공장*	평양시	–	–
67호공장	–	–	–
만경대공작기계공장	–	–	–
로동리공장	함북 길주	–	–
대포동공장	함북 화대	–	–
태성기계공장 (잠진미사일공장)	평남 남포	–	스커드 미사일, 대포동 2호 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10형), 장거리미사일
1월18일기계종합공장 (118호공장)	평남 개천	1만 명	로켓, 미사일, 어뢰, 전차용 엔진, 탄도미사일 엔진
제301호공장	평북 대관	–	지대공미사일
제38호공장 (청년전기연합기업소)	자강도 희천	1만 5천 명	미사일 제어기기, 각종 계기류, 탐지기
산음동병기연구소	평양시	–	탄도미사일 예비조립
평양반도체공장	–	–	2극소자직장, 조업식전자일용품, 집적소자, 반도체소자, 각종 미사일 전자부품
56호공장	평북 대관	–	로켓
평양약전기계공장	평양 만경대	–	미사일 폭약과 관련 부품
2.8비날론공장 일용분공장	함북 함흥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727호공장 (아오지화학공장)	함북 은덕	6천~8천 명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함흥비료공장	함남 함흥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선천화학공장기업소	평북 선천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봉화화학공장	평북 피현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선천인산비료공장	평북 선천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제81호공장 (성간강철공장)	자강도 성간	7천~ 1만 명	미사일발사대
제118호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평남 개천	5천~ 8천 명	미사일발사대
제67호공장	평남 성천	5천~ 7천 명	미사일 부품
금성트랙터공장*	남포시	–	각종 자주포 궤도장치 및 주행장치
승리자동차공장*	평남 덕천	–	–
기계공장(명칭 미상)*	평북 의주	–	–

출처: 이 보고서 V장 3절 "군수산업 현황과 실태"에서 재정리. 부형욱 외,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p. 236.

미사일 생산 분야에서 협동 생산한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한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을 개선해서 생산을 시작한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2017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42회 실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현황은 〈표 Ⅱ-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2017년 사이에 행해진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는 32회에 달한다.

〈표 Ⅱ-9〉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현황

년도	일자	발사지역	비고
2012(2회)	4.13.	평북 동창리	광명성 3호
	12.12.	평북 동창리	광명성 3호-2호기
2014(7회)	2.27.	강원도 안변군	스커드 계열 미사일
	3.3.	강원도 원산	스커드 계열 미사일
	3.26.	평남 숙청군	노동계열 중거리 미사일
	6.29.	강원도 원산	스커드 계열 미사일
	7.9.	황해도	스커드 계열 미사일

년도	일자	발사지역	비고
	7.13.	개성시	스커드 계열 미사일
	7.26.	황남 장산곶	스커드 계열 미사일
2015(1회)	3.2.	평남 남포	스커드 계열 미사일
2016(15회)	2.7.	서해 발사장	광명성 4호
	3.10.	황북 황주	스커드 미사일
	3.18.	평남 숙청	노동미사일
	4.15.	강원 원산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4.23.	함남 신포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4.28.	강원 원산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5.31.	강원 원산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6.22.	강원 원산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7.9.	함남 신포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7.19.	황북 황주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
	8.3.	황남 은률	노동미사일
	8.24.	황남 신포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9.5.	황북 황주	미상 미사일
	10.15.	평북 구성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2017(17회)	2.12.	평북 방현	북극성-2형
	3.6.	평북 동창리	스커드-ER
	3.22.	강원도 원산	미상 탄도미사일
	4.5.	함남 신포	미상 탄도미사일
	4.16.	함남 신포	미상 탄도미사일
	4.29.	평남 북창	미상 탄도미사일
	5.14.	평북 구성	화성-12형(MRBM)
	5.21.	평북 북창	북극성-2형(KN-15)
	5.27.	미상	신형 지대공 미사일
	5.29.	강원도 원산	스커드 계열 미사일
	6.8.	강원도 원산	신형 지대함 미사일
	7.4.	평북 방현	화성-14형(ICBM)
	7.28.	자강도 무평리	화성-14형(ICBM)
	8.26.	강원도 깃대령	미상 탄도미사일
	8.29.	평양 순안	화성-12형
	9.15.	평양 순안	화성-12형
	11.29.	평남 평성	화성-15형(ICBM)

출처: 『로동신문』 2012년~2017년 분석.

김정은은 2016년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17년 11월에는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3,000km인 화성-15형(ICBM) 실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성공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다.

라. 군수산업 분야 대외사업과 핵·미사일 개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원자재와 핵심부품을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다. 북한은 군수분야 대외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한다. 북한이 군수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2경제위원회는 최신 군사기술정보를 수집하고, 무기 수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체 제작할 수 없는 첨단 무기의 핵심 부품과 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수산업 분야에서 대외정책 기조는 선진기술을 따라가는 것보다 앞선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된 미사일·잠수함 등 무기를 팔아 외화획득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군에서 해외에 파견할 때 군대외사업국과 보위사령부 합동강습에서 본연의 임무와 별개로 군사기술정보수집을 잘하면 공화국영웅과 김정은 표창 및 명예칭호를 부여한다고 교육하면서 군사기술정보수집을 독려한다.[96]

대외정책 집행은 김정은의 지시나 또는 해당 단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보고해서 방침으로 받아 집행기간을 정하고 자금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정은의 지시나 방침은 "절대비밀"이고, 집행은 "절대성·무조건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집행단위에 국한되고, 집행여부는 해당 단위 간부들의 충성심을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97]

96)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97) 위의 인터뷰.

북한이탈주민 L1은 전략무기 분야 대외수요에 관해서 증언했다. 북한의 전략무기(핵·미사일) 분야는 대외수요를 필요로 한다. 미사일 엔진제작에 활용되는 고강력 섬유나 나노공학이 접목된 탄소, 탄화규소, 복합소재(3D)는 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 등 외국에서 기술유입이나 이중용도 및 부품을 밀수입한다. 중장거리 및 ICBM엔진 분출구(노즐)재료와 탄소섬유를 이용한 복합소재는 2015년 4월까지도 군사대표부들에 륭성자료 1순위 과업이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8축 16륜 차량(이동식ICBM)과 3축 10륜 단거리 미사일 차량도 중국산이고, 완성된 제품이 아닌 부품을 들여다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했다. 특히 북한은 로켓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이나 기술 및 탄두재료들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98]

L1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에서 군 대외무역부 소속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기술정보수집활동에 관해 증언했다. 군사기술정보수집은 〈표 Ⅱ-10〉과 같이 군 산하 무역대표부, 정찰총국, 군수공업부(2경) 등 세 기관에서 자체 임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군수공업부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기 단위에게 맡겨진 정책만을 집행한다.

〈표 Ⅱ-10〉 군사기술정보수집

소속	임무내용 및 하달방법	집행정형	비고
군 산하 해외 무역대표부	2중용도기술 제품, 월 단위 강조	수입건 노력	사업비 미지급
정찰총국 (압록강대학 졸업생 위주)	핵, 미사일 기술정보, 독립 임무	분기별 총화	자금지출
군수공업부(2경제)	독립 임무	분기별 총화	자금지출

출처: L1,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18.7.18.), p. 4.

98) 앞의 인터뷰.

〈표 Ⅱ-11〉은 2015년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부 지시사항이다. 북한에서는 2015년 2월 7일자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표 Ⅱ-11〉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부 지시사항

종류	지시날짜	집행정형
비행사 확장현실 안경	2015. 2. 7.	개인이 아닌 집체적 포치사항은 집행부진
미그23비행탐지기(초단파 비행지휘 무선기에 필요)	2015. 2. 7.	간첩혐의와 작업비 미보급으로 미달
감마선 촬영기계	2015. 2. 7.	간첩혐의와 작업비 미보급으로 미달
10배 이상 확대경	2015. 2. 7.	간첩혐의와 작업비 미보급으로 미달
내시경 등 현대적 감별기계	2015. 2. 7.	간첩혐의와 작업비 미보급으로 미달
미그29기종에 장비된 자동접수 기록장치	2015. 2. 7.	간첩혐의와 작업비 미보급으로 미달

출처: L1,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p. 2.

L1은 2015년에 국방위원회 812호실에서 핵잠수함에 필요한 HY-150강판을 수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표 Ⅱ-12〉는 2012년 국방위 지시사항과 집행정형이다.

〈표 Ⅱ-12〉 2012년 국방위원회 지시사항(핵잠수함용 특수강판, HY-150)

자호	화학조성	지시단위	집행정형
HY-150	인장세기	국방위 812호실	2013~2014 대만산 샘플 평양 밀반입 후 물리적 성질 2가지 부족
	항복세기		
	연심율		
	충격세기		
	수축율		

출처: L1,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p. 2.

L1은 핵잠수함 강판으로 사용할 HY-150강판을 구입하던 상황에 대해서 증언했다. L1은 조선족 마피아를 통해서 대만 마피아를 소개

받았고, HY-150강판 샘플을 확보해서 북한에 들여보냈다.

> 핵잠수함 강판을, 핵잠수함에 필요한 HY150강판, 근데 이건 북한 여권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중국 대방을 찾아서 시도를 했고 샘플도 얻어서 들여보냈어요. 핵잠수함 강판을 첫째로는 북한에서 지시받기는 러시아·일본·대만·중국산을 입수하라고 지시받았어요. 중국산은 거기서 너무 검열도 세고 아예 손도 못 대겠다 하니까 대만 쪽에 연결해서 알아보라해서... 제가 아는 조선족 마피아 ○○○을 통해서 대만의 마피아를 동원해서 샘플 주먹만 한 거 가져왔어요. 들어봤는데 밀도가 얼마나 있는지 조그마한데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있구나 했어요. 공항으로 못나가니까 단동까지 980키로 차로 내려갔어요. 단동에 가져와서 포장해가지고 밀수꾼들은 뭔지 모르니까 인민폐 400원주고 그 사람들은 보트 타고 쪽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신진항구에 가져가고 우리는 국제전화로 견본품 내보낸다고 하면 세관보안원들도 다 치우고 우리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 받아서 평양에 올려 보냈어요. 평양에 올려 보냈는데 2개월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기계적·물리적 성분 두 가지가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마피아들도 이것을 보고 공장사람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2천 톤을 요구했고 홍콩에 수출하는 걸로 해서 공해상에서 거래하는 걸로 했는데 두 가지 성분이 모자란다 하니까 다시 알아봤더니 마지막 공정을 못 거쳤다고. 근데 마지막 공정을 거치게 되면 미국에 보고가 되고 얼마 생산되었으면 보고가 되고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미국에서 추적하고 있어서 손댈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평양에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99]

북한 군수산업은 대외사업이 중요하다. 군수공업 분야의 대외사업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핵심부품 등을

99) 앞의 인터뷰.

수입하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로켓엔진도 자체 기술로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해야 한다. 게다가 핵심 부품과 탄두재료들도 모두 수입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원자재·부품 구입 활동은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 불법이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뚫고 불법 활동을 통해서 미사일 개발을 위한 원자재·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의 군사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Ⅲ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김진하·오경섭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군수산업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

본 절은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직접적 근원인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정치적 기원과 확대재생산의 역사적 과정을 더글러스 노스(Douglas C. North) 등의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접근법과 대내외·정치 연계분석에 방점을 둔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 등의 이차원적 권력게임론(Logic of Two-Level Power Games)[100] 분석틀을 원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국방력 강화를 우선적 국가목표로 추진케 만든 동북아 냉전체제의 전개라는 국제적인 촉발요인과 이러한 국제환경상의 여건을 국내정치적 권력기반 확대에 활용한 북한의 핵심통치엘리트층, 특히 김일성의 가문과 만주 게릴라파벌의 지배전략이라는 행위자의 의지 간 상호강화 작용에 주목한다.

가. 문제제기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북한의 군사경제는 불균형적으로 비대·성장했다. 북한 군사경제의 비대화는 국방경제가 국가경제의 일영역(一領域)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국방경제의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비정상적 수준에 도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사경제화는 ①국가경제의 핵심적 견인부문(Leading Sector)으로서 국방부문에 대한 국가자원의 최우선적 배분과 집중적 자본투하, ②전시동원 경제체제의 일상화, ③평행경제(Parallel Economy) 체계 하에서[101] 당·경제, 내각·경제

100)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ummer, 1988), pp. 427~460.

등 여타 경제부문과 병렬적으로 유지되며, 국가의 집중육성과 보호를 담보로 독자적 자급자족 생존메커니즘으로 영위되는 거대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발흥,[102] ④경쟁시장원리와 대척적으로 당 및 국가 권력의 핵심부, 특히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중앙집권적으로 수직·체계화된 지휘통제 구조 하에 관리되는 특권경제영역, ⑤무기의 수입을 통한 군사력 확장보다는 수입대체 및 자국생산기반 확립에 보다 방점을 두는 자력갱생주의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북한은 국가체계를 소련으로부터 계수 받았다. 그러나 군사경제 비대화의 정도와 관리체계의 집중도 면에서 구(舊)소련 스탈린 국가를 오히려 능가한다.

어떠한 요인이 '북한경제의 군사경제화' 및 '군수산업의 비정상적 확장'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가? 불균형 성장한 북한 군사경제는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지배의 극단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소련군정의 개시와 더불어 북한은 전형적인 스탈린주의 소비에트 당·국가 체제를 계수 받는다. 스탈린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발전노선의 선택과 자원배분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는 당이 지배한다. 종국적으로는 당의 이념적·정치적 결정이 국가경제건설과 관리를 좌우한다. 현재까지도 최소한 공식적 경제부문의 운영이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이뤄지는 북한의 경제체제를 고려할 때, 군사경제 비대화의 근원으로 당·국가의 경제정책, 즉 확대재생산 과정을 거쳐 온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정책에 착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

101) 평행경제는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지휘체계의 분할(Partition)을 의미. Benjamin Habib, "North Korea's Parallel Economies: Systemic Disaggregation Following the Soviet Collaps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4 (2011), p. 152.

102) 북한판 군산복합체의 구조와 파생효과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Jin-Ha Kim, "Rethinking the Sunshine Promise: Structural Impediments to South Korea's Positive Inducement Policies for the North Korean Problem,"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8, no. 3 (September, 2016), pp. 429~444.

물론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가 군수산업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경제전반의 운영이 군사경제의 확장과 관리에 복속되는 군사경제 비대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1989년 이래 국제 소비에트·블록 붕괴 이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정부주도 개혁·개방과 위로부터의 시장적응형(型) 경제개발에 나선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사례는 당·국가 체제 사회주의 국가라도 반드시 중화학공업 또는 군수산업 우선주의 모델에 따른 특정 방향으로의 '강제된 성장(Forced Growth)전략'에만[103] 전력투구해야만 할 내재적 이유가 없으며, 비효율적인 경제제도나 노선의 자발적 개혁도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당독재 당·국가 체제와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시장지배, 정치의 경제 분야 관리가 반드시 시장논리에 반하는 결과물, 예컨대 북한의 군수산업 비대화와 같은 불균형·불균등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당·국가 체제만으로는 군사경제 비대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적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본 절의 목표이다.

나. 군사경제 비대화 5대 결정적 시기

경제적 유용성을 상실한 비효율적 경제제도의 의도적 선택과 장기적 존속·확대는 역사적으로 빈번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에 관한

103) ①자원과 자본의 고(高)투자 및 저(低)소비, ②특정부문에 대한 우선적 투자, ③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는 국가 관료기제를 동원한 위로부터의 고속 개발전략을 의미하며, 전형적인 사례는 스탈린식 중화학공업 우선적 국가개발 전략.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197.

노스(Douglas North)의 연구는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 현상을 설명·분석하는 데 있어 중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제도화된 동기부여 구조(Incentive Structure) 하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행위자들의 인식체계와 스테레오타이프(Stereotype)화된 이념정향은[104] 행위자의 정형화된 선택패턴으로 고착되어 비생산적·비효율적 경제제도의 존속과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Persistently Poor Performance)'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105] 이에 따라 제도화된 이익과 이념은 체제의 정치·경제 게임의 규칙을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과 조직이 정책결정과정에 접근하게 될지도 결정하게 된다.[106] 더욱이 특정 방향으로의 제도화가 확고해질수록 특정 행위와 선택에 보상이 집중되는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s)'[107] 현상이 발생하면서 특정집단의 이익과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즉, 특정제도가 존속되는 한 특정집단과 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특정집단의 권력 강화 및 자원 독점은 역으로 주어진 제도적 기제에 체화되어 있는 특정의 정책노선이 더욱 견고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결국 스스로 증폭·강화되는 자체·보강적(Self-Reinforcing)[108] 제도화 과정이 구조화되면서 노선의 전환이나 개혁이 힘들어지는 감금효과(Locked-in Effects)가 발생한다.[109] 이로써 어떤 국가나

---

104) Douglas C. North, "A Transaction Cost Theory of Transact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2, no. 4 (1990), pp. 355~367.

105) Dougla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95~96.

106) Douglas C. North,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 52.

107) Paul Pierson,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22.

108) Avner Grief,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s from Medieval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67.

지역에서 특정 이념노선과 정책방향에 의거한 제도화가 일단 개시되면 제도적 '전환비용(Costs of Reversal)'이 크게 상승되는 경로의존(Path Dependence) 현상이 발생한다.[110] 즉, 특정방향의 '국가개발 궤도(Developmental Trajectories)'가 일단 형성되면 생래적으로 노선의 수정과 전환은 어려워진다.[111]

객관적 정책검증 및 비판의 관행과 제도가 빈약한 권위주의 정부, 특히 일당독재의 당·국가 체제나 독재자중심 개인독재 체제에서 이러한 경로의존의 감금효과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112] 따라서 파워엘리트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한, 국가 경제 전반에 폐해를 초래하는 기존의 경제 노선과 제도적 장치들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민주정체에서는 선거 등을 통한 공적 정책선택과 헌정질서 내 소수파의 공존으로 비판적 감시 기능이 유지되는 반면, 독재자중심 인적 독재체제에서 정책노선의 패배는 소수분파의 최종적 몰락과 숙청으로 귀결되어 비판적 감시 및 개혁 기능이 사실상 실종된다. 예를 들면, 1956년 종파투쟁 당시 경공업 및 소비재 생산을 강조한 연안파의 최종적 몰락은 북한의 군사경제 우선주의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의 급격한 파쇄를 불러왔다. 권위

---

109) Dougla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p. 7.

110) Magaret Levi,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in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eds. Mark I. Lichbach and Alan S. Zucker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28.

111) Jacob Hacker, *The Divided Welfare State: The Battle over Public and Private Social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54.

112) 위기 시 체제주도 세력에 의한 제도적 개혁의 가능성은 권력의 소수 독점의 정도에 따라 독재자개인중심 독재체제(Personalist Regimes), 일당독재체제(Single Party Regimes), 군부독재체제(Military Regimes) 순으로 낮아진다. Barbara Geddes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merican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June, 1999), pp. 141~142.

주의체제의 폐쇄성과 지배엘리트층의 권력독점도가 심해질수록, 이러한 경로의존의 폐쇄화 경향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유사한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도 베트남, 중국 등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귀책제도(Institutions of Accountability)와 관행이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국가에서[113] 경제적 개혁이 강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114] 대조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귀책성이 소멸된 강력한 인적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 등 국가노선의 제도적 전환은 사실상 힘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북한 사례에 적용해 보자.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현상의 주원인은 국가수립 이후 정치적 격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확장·심화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제도화이다. 군사경제의 비대칭적·비정상적 확장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들, 예컨대 북한의 경우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과 이에 따른 정책이 누적·반복적으로 결정·추진되면서 결국 공고히 제도화된 것이다.

더욱이 불균등 자원배분과 과잉생산의 폐해와 축적되어 가는 경제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이 제도적으로 확대·재생산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화된 정치경제적 이익에 "봉인(Locked-in)된"[115] 조직체(Organizations), 예컨대, 김씨 가문, 수령과 수령보좌기관들,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방대한 군수산업체들과 연구기관 등의 존재는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를 돌이킬 수 없는 제도화된 국가적 경로로 고착화시키는 행위자로 기능해왔

113) Edmund Malesky, Regina Abrami, and Yu Zheng, "Institutions and Inequality in Single-Party Regimes: A Comparative Analysis of Vietnam and China," *Comparative Politics*, vol. 43, no. 4 (2011), pp. 409~427.

114) 김진하·송문희, "북한의 리더십 구조와 경제개혁: 베트남 및 루마니아 사례와의 비교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11), pp. 131~155.

115) Dougla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p. 7.

다. 지속적으로 저조한 국가경제의 실적과 탈냉전 이후 더욱 악화된 경제궁핍화 및 가중되는 국제고립과 경제제재의 위기 국면에서도, 핵무장 프로그램 강행이 상징하듯,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과 정책은 중단 없이 3대에 걸쳐 확대·재생산되었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견고한 제도화 및 이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배엘리트층의 조직적 이익 없이는 설명키 힘든 현상이었다.

역사적 공고화과정을 통해 북한의 군사경제로의 경로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경제개혁이나 노선·제도의 변동은 더욱 지난한 일이 되어왔다. 권위주의 과두정체에서 경로의존의 감금효과가 일단 제도화되면, 저조한 성과나 부작용이 속출·증폭되더라도 특정제도나 노선은 끈질기게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국가경제 전반의 비효율성 증대와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경로에 참호를 판 기득권 세력의 구조화된 권력독점과 특권적 지대(Rent)는 제도개혁에 대한 의지를 봉쇄할 것이기 때문이다.[116]

개인독재체제와 같은 폐쇄적 권위주의정체에서 내부개혁파의 득세는 원천적으로 발생키 힘든 사태이지만, 설혹 태동되더라도 분쇄·숙청될 개연성이 높다. 일단 경로의존적인 확대재생산의 폐쇄회로가 가동되면 시기가 경과될수록 체제옹호세력의 권력은 점증적으로 확대되어 개혁세력을 압도한다. 더욱이 잠재적 개혁파에 대한 숙청작업은 체제호위 엘리트들의 권력을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다. 경로의존이 시작되면, 체제수호의 제도 옹호세력은 제도의 재생산을 견지할 충분한 힘을 바로 그 제도적 구조의 존속을 통해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7] 기존노선의 제도적 장치들이 존속되는 한, 기존

116) Michael Bratton and Nich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233~253.

117) Anthony Oberschall and Eric M. Leifer, "Efficiency and Social Institutions: Uses and Misuses of Economic Reasoning in Sociology," *Annual Review of*

의 제도나 정책에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엘리트 집단조차도 침묵과 동조의 대가(Spoils)를 기대하며 충성을 유지한다.[118] 즉, 경로의존적인 제도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제도개혁 또는 변화 선호세력은 약화되고 제도 옹호세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북한 사례의 경우에도, 군사경제 우선주의 노선에 대한 반대세력이나 잠재적 회의론자들은 1956년 종파사건을 빌미로 진행된 반대파 대숙청에서 2013년 장성택 숙청에 이르기까지 거듭 제거되어 왔다. 역으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과 옹호론자들의 권력독점현상은 더욱 심화·확장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군사경제 비대화 과정은 비생산적 경제제도의 경로의존적인 재생산과 경제적 비정상성 확대의 악순환 고리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제도주의 접근법은 일단 어떠한 이념과 이익이 제도화 경로를 밟기 시작한 이후의 특정 정책노선의 경로의존성에 관해서는 강력한 설명력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제도화 개시 이전 특정 국가개발 또는 정책노선이 선택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긴급 대응을 요구하며 과거와의 단절을 강제하는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급변적인 긴급사태(Contingency)의 발생이다. 과거와의 '파열의 시발점(Initial Rupture)'으로서[119] 역사적인 급변사태에 대한 행위자의 대응정책·전략 노선의 선택이 향후 전개될 연쇄적인 제도화 과정의 시원을 구성하게 된다. 제도주의자들은 이를 '역사적 전환점(Turning Points)'[120] 또는 '제도적 창세기(Institutional

---

Sociology, vol. 12 (1986), pp. 233~253.

118) Steven Levitsky and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61~62.

119) William H. Sewell, Jr., "Historical Events as Transformations of Structures: Inventing Revolution at the Bastille," *Theory and Society*, vol. 25, no. 6 (December, 1996), p. 843.

Genesis)'로서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로 지칭한다.[121]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은 행위자가 의도를 가지고 내용과 시점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급변적(Contigent)이며, 가능한 선택지들 중 특정의 선택이 일단 정해지면, 제도화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복수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초창기 시점으로 회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결정적(Critical)이다.[122] 결정적 시기에서 특정 선택이 행해지면 또 다른 역사적 선택의 순간이 도래될 때, 초기에 선택된 정책 노선 방향이 반복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발적인 선택의 반복이 지니는 이점들, 특히 초창기 선택으로 성장하게 된 제도옹위 세력의 등장 때문이다. 제도적 재생산과정이 개시되면서 유사한 결정이 반복되며, 초기의 결정적 시기에서 멀어질수록 제도적 전환 또는 노선 변경은 더욱 힘들게 된다. 〈표 Ⅲ-1〉은 '결정적 시기'와 제도적 재생산 간 관계를 도표로 보여준다.

〈표 Ⅲ-1〉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와 제도적 자기재생산의 연속순서 (Sequence)

정책노선 선택지	A, B, C → B → B_1 , B_2 , B_3 ... Bα		
시기 경과	Time 1. 초기조건 (Initial Conditions) 복수의 선택지(A, B, C)가 존재하는 초기 조건	Time 2. 결정적 시기 (Critical Conditions) 경쟁하는 복수의 선택옵션들(Options) 중 B가 선택되는 결정적 순간	Time 3+α . 제도적 자기·재생산(Self-Reproduction) 정책 옵션 B가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유사한 결정들로 자기·복제되며 제도적 안정화 및 증폭 기간 돌입

출처: 다음에서 원용. James Mahoney,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vol. 29, no. 4 (August, 2000), p. 514.

120) Andrew Abbott, "On the Concept of Turning Point," *Comparative Social Research*, vol. 16 (1997), pp. 85~105.

121) James Mahoney,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vol. 29, no. 4 (August, 2000), p. 513.

122) Magaret Levi, *op cit.*

〈표 Ⅲ-2〉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결정적 시기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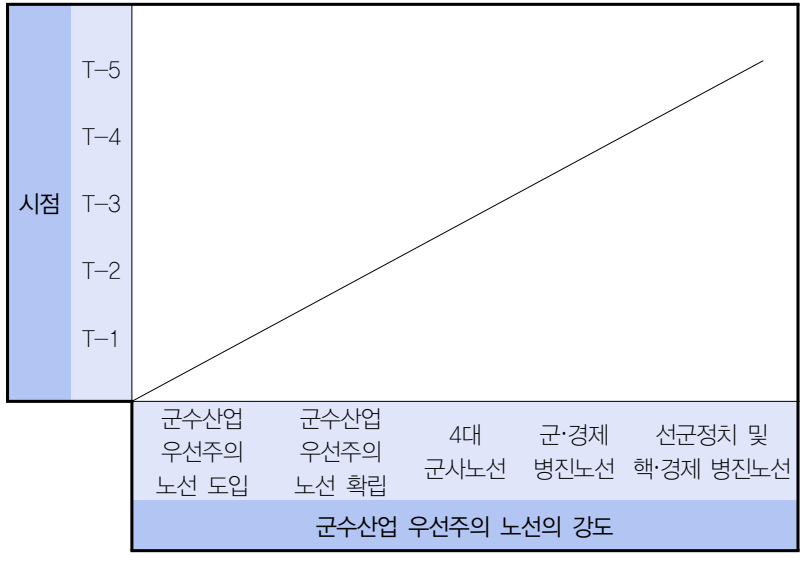
결정적 시기	선택 가능했던 정책옵션	결과
[T-1] 1948년 북한정권 수립과 동북아 냉전(미·소 및 남북 대립) 전개	①경공업우선주의 및 평화공존 ②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와 무력통일 노선	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 6·25전쟁
[T-2] 1956년 국제 스탈린격하 운동	①경공업·인민경제 우선 전후복구(연안파) ②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와 무력통일 노선	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T-3]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①동맹·강화/평화공존 및 경공업우선주의 ②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와 무력통일 노선	4대 군사노선으로 민족·자력갱생형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T-4] 1960년대 중소분쟁 격화	①경공업·인민경제 우선주의(갑산파) ②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와 무력통일 노선	민족·자력갱생형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군·경제 병진노선)
[T-5] 1989혁명(소련권 붕괴)	①전면적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시장사회주의 ②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와 무력통일 노선	국가 사회주의 고수, 핵개발 및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고수(선군정치 및 핵·경제 병진노선)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경로의존적 제도화과정에서 일제패망과 광복이 초기조건을 제공했다면,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선택을 강요하는 5가지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 ① [T-1] 동북아 냉전(미·소 대립) 및 남북갈등 전개, ② [T-2] 1956년 국제 스탈린격하 운동 전개, ③ [T-3]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④ [T-4] 1960년대 중후반 중소분쟁 격화, ⑤ [T-5] 1989년 혁명(소련권 붕괴)라는 중대 분기점에서 북한은 다른 정책대안들을 배제하고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을 재확인·심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북한은 각 시기마다 ①스탈린 중공업중심 경제개발주의 계수와 6·25전

쟁 결정, ②8월 종파투쟁을 거쳐 연안파 등 반대세력의 경공업우선주의 파벌의 숙청 및 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확정, ③4대 군사노선 주창, ④1966년~1967년 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에 저항한 갑산파의 대량 숙청, ⑤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선군정치 및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 등 군수산업 우선주의를 단계적으로 확대·심화하는 결정을 선택하며, 군사경제 비대화를 초래했다. 〈표 Ⅲ-2〉는 이를 정리했다. 시기가 지나갈수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세력의 결집도나 규모는 감소되어가는 반면,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심도와 제도화 수준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Ⅲ-1〉 참조). 각 시기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과정은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그림 Ⅲ-1〉 결정적 시기와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심화



출처: 필자 작성.

다. 쟁점과 논점: 국제·환경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반론의 한계

전항에서 제시된 5대 '결정적 시기'로 인해 북한 군사경제의 비대화를 설명하는 경로의존적 제도화 명제에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결정적 시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는 사건들은 모두 국제적 안보위기 상황들이다. 이에 착목하여 국제체제의 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이나 군사경제 비대화가 초래됐다는 국제안보상의 구조적 변인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반론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조적 현실주의'[123]적 시각에서 동북아 냉전구조 전개에 따른 연속적인 국제안보위기[124] 또는 남북 및 좌우 갈등 심화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가[125] 악화되면서 북한의 안보 우선주의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채택 및 강화, 그리고 군사경제 비대화 등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제적 위기와 남북한 갈등적 환경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시각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나 군사경제 비대화를 적실성 있게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채용된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경로의존적 제도화 접근법도 구조적 안보위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주

123)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의 기본명제들은 다음을 참조.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pp. 102~128;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4), pp. 29~54.

124) 동북아 냉전의 연대기별 전개과정은 다음 참조. Woodrow Wilson Center, "Cold War History: Timelin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theme/cold-war-history〉 (검색일: 2018.9.8.).

125) 방어를 위한 일국의 군비는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 위협을 제기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도 군비를 확대하게 되면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안보딜레마'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다음 참조,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January, 1978), pp. 167~214.

어진 환경이든 의도적 야기에 의한 것이든 안보위기 발생 없이 군수공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요컨대, 타국에 의한 안보위기(또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믿는 위협의식이)나 자국의 타국에 대한 공격의지 없는 전쟁준비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냉전 초기 불확정적인 유동적 동북아 국제정세와 6·25전쟁 등은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제도화를 촉발한 중대한 급변요인으로 진단한다. 국제적 사건들은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이 확대 재생산되는 촉발계기를 제공한 결정적 시기를 구성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도화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제내부의 사정과 정치행위자의 의도를 배제한 단면적으로 구조화된 안보위기론은 특히 북한 사례의 설명과 분석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반론의 한계를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구조주의 논리의 일반적인 취약점이다. 구조주의 이론,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주장은 행위자, 즉 개별국가의 내부적 요인과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적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과도한 결정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한 국가의 안보관련 결정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의 안보를 과대평가하고 체제(Regime)의 안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농후하다.[126] 일 국가, 특히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엘리트들은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통치기반으로서 체제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권력투쟁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다면 한 국가의 안보관련 결정, 예컨대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이나 핵무장정책 추진 결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설령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해도 행위자의 특정한 선택을 자

126) Etel Solingen, *Nuclear Logics: Contrasting Paths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 26.

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국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즉, 동일 변수의 동등한 변량이 다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다중결과물의 문제(Problem of Multifinality)'를[127] 야기할 수 있다. 안보위기가 반드시 북한 사례에서와 같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정책과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예컨대, 북핵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대응적인 핵무장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억제력강화 등 안보정책 위주의 대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포용 또는 유화정책도 추구해왔다. 또한 안보 위기 시 일 국가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동맹정책을 통해 위기극복에 나설 수도 있다. 설혹 위기극복을 위해 자국 군수공업 건설정책에 나선다고 해도, 반드시 자력갱생주의에 매진할 이유도 없다. 다양한 잠재적 대응방안 선택을 동일한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기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요컨대, 행위자, 즉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선택을 배제한 구조주의적 시각으로는 구체적 선택, 즉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역사적 구체적 진행과정과 경로를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이 배태된 최고의 결정적 시기인 정부수립 직후 냉전 초기 북한의 지도부, 특히 김일성과 만주파 세력은 구조적 힘, 즉 미국의 압력이나 소련의 의지에 따라 전쟁준비와 이를 위한 군수공업 육성에 나선 것이 아니다. 격화되기 시작한 미소 대립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무력통일의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북한 지도부의 현상변경적 의도와 시도가 역사적 사실로 밝혀져 왔다. 특히, 6·25전쟁의 발발에 있어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127) Andrew Bennett and Colin Elman, "Complex Causal Relations and Case Study Methods: The Example of Path Dependence," *Political Analysis*, vol. 14, no. 3 (Summer, 2006), p. 251.

역할, 즉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던 스탈린을 설득하며[128] 6·25전쟁 개시의 승인을 얻어낸 정황이[129] 구 동구권 국가들의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130] 6·25전쟁 이후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확대와 군사경제의 비대화도 미소 간 대립과 갈등을 기회로 활용하여 한반도 무력통일을 목표로 했던 김일성 등 북한 통치엘리트들의 의지에서 찾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국제적 환경에서 발생한 위기나 사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체제적 특성과 행위자의 의지를 도외시하는 구조주의적 결정론으로는 한정된 일면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131]

둘째, 5대 결정적 시기 대부분은 냉전 시기에 걸쳐 있다. 바로 구조적 현실주의의 진단에 따르자면, 양 진영의 간헐적 갈등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 양극구조는 전통적인 다극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제이다. 요컨대, "긴 평화"의 시기였다.[132] 핵무

128) 다음 논문을 참조. Kathryn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2).

129) Thomas J. Christensen, "Chapter 2: Growing Pains: Alliance Formation and the Road to Conflict in Korea," in *Worse than a Monolith: Alliance Politics and Problems of Coercive Diplomacy in Asia,* ed. Thomas J. Christens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p. 28~62.

130) 기밀 해제된 소련 외무성 및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건 등은 1945년~1950년 소련과 스탈린의 대한반도정책의 근본 목표가 한반도 장악이 아닌 1905년 러일전쟁 이전 러시아가 추구했던 한반도 세력균형체제의 복원이었으며, 이를 위해 스탈린은 한반도의 안정적 분단을 목표로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8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1993), p. 9.

131) 외교안보 정책결정자에 미치는 국내적 요인의 영향력도 동시에 강조하는 신고전 현실주의의(Neoclassical Realism)의 구조적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 Steven E. Lobell, "Threat Assessment, the Sate, and Foreign Policy: A Neoclassical Realist Model," in *Neoclassical Realism, the State, and the Foreign Policy*, eds. Steven E. Lobell, Norrin M. Ripsman, and Jeffrey W. Taliaferr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42~74.

132)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장한 양대 초강대국은 직접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상호 핵심이익이 걸린 지역, 예컨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취했으며,[133] 초강대국 간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중소규모 동맹국들의 모험적 도발을 자제시켜 연루(Entrapment)의[134]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초강대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의존도는 약했던 반면, 동맹국의 초강대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지대했으므로 초강대국의 동맹국 통제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은 안보위협 발생을 내부자원 동원으로 대처하는 것(Internal Balancing)이[135] 가능했기 때문에 동맹국의 외교안보노선에 휘둘릴 소지가 약했던 것이다.

이는 적대적 초강대국이 침략 목표가 된 중소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할 의사를 견지하는 한,[136] 사실상 한 중소국가가 내부자원을 총동원하여 군비확장에 매진한다고 할지라도 초강대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적대국을 무력으로 정복할 충분한 군사력을 축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설사 도박을 감행하더라도 침략국에 우호적인 다른 초강대국의 동참 또는 지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침략은 곧 패배를 뜻한다. 더욱이 우호적인 초강대국의 지원조차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4 (Spring, 1986), pp. 99~142.

133) 양극체제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pp. 5~56.

134) 동맹의 유기(Abandonment) 및 연루(Entrapment)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Glenn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July, 1984), pp. 461~495.

135) Barry Posen, "Emerging Multipolarity: Why Should We Care?," *Current History* (November, 2009), p. 349.

136) 베트남전쟁의 경우, 미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 이행의지가 감쇠되면서 월남은 패전 및 소멸.

기는 힘들다. 양극체제의 게임논리는 이러한 게임의 규칙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 발생한 6·25전쟁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137]

냉전체제가 완숙기에 들어가면서 잠재적 갈등요인과 국지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안정화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미소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138] 능력 확보에 따른 핵·균형 및 '핵·교착(Nuclear Stalemate)'[139] 평형상태,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공약의 제공은 최소한 미소의 핵심이익이 걸린 지역, 즉 본토 및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사태의 진전이었다.[140] 결과적으로 위태한 무장평화이지만 동시에 '방어우위(Defense Dominance)'의[141] 긴 평화의 시기가[142] 지속되었다. 중소 동맹국, 특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초강대국과의 동맹이 유지되는 한, 최소한의 방어에 필요한 적정수준 이상의 무리한 군비확장이나 전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도한 군수공업 육성은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상승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

137) 한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던 북한의 군사력도 미국의 개입과 더불어 소멸되고 말았다. 중국의 참전과 소련의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은 소멸 직전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138) MAD의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Charles L. Glaser, *Analyzing Strategic Nuclear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103~132.

139) Daryl Press, *Calculating Credibility: How Leaders Assess Military Threa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 95.

140) Stephen Van Evera,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p. 240~254.

141) Stephen Van Evera,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 *Offense, Defense, and War*, eds. Steven E. Miller, Owen R. Cote Jr., Michael E. Brown, Sean M. Lynn-Jones (Cambridge: MIT Press, 2004), p. 255.

142)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215~246.

기 힘들었다.

무리한 군비확장이나 군수공업 육성은 사실상 귀중한 자원과 희소한 자본의 낭비를 뜻하게 되었다. 상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초강대국을 뛰어넘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여타 목표, 예컨대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 등에 자원을 투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였다. 건국 초부터 전란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련, 중국, 북한 등 비우호적인 사회주의국가에 포위된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에서도 한국은 군비확장이나 군수공업 육성 보다는 수출주도 경제 성장에 매진했다. 6·25전쟁으로 강력해진 국가능력을 오히려 정부주도 경제개발에 투사하여 성과를 거두었는데,[143] 이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방위동맹이 토대가 되었다.[144] 동북아에서의 냉전의 전개와 6·25전쟁 이후 냉전의 안정화 작용을 적절히 활용했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사실상 냉전기 완숙기의 안정화 경향에 거스르는 정책선택을 거듭하였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확대 및 심화과정은 대표적이다. 냉전초기의 갈등기와 6·25전쟁 기간을 포괄하는 결정적 시기 [T-1]과 냉전체제 해체로 전반적인 국가노선의 전환을 강요하는 탈사회주의 격변기인 1989년 혁명기 [T-5]의 시기가 국가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국제적 위기가 발생한 중차대한 시점이었다면, [T-2]부터 [T-4]에 이르는 냉전 완숙기의 시기는 간헐적인 안보적 위기발생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T-1]이

143) Richard Doner, Bryan Ritchie, and Dan Slater, "Systemic Vulnerability and the Origins of Developmental States: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no. 2 (Spring, 2005), pp. 327~361.

144) Victor D.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2010), pp. 158~196.

나 [T-5] 시기에 비견될 수준의 위기를 겪은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은 결정적 시기를 단계별로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각 시점마다 대형 숙청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수산업 우선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옵션을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비판세력은 몰락을 거듭해 갔다. 즉, 각 결정적 시기의 안보적 위기의 강도는 불연속성 또는 무작위성을 보여준 반면,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심화는 연속적 또는 비례적 확대 및 강화의 패턴(중화학 공업우선→군수공업우선→4대군사노선→자력갱생 강화 및 국방경제 병진노선→핵무장 강행 및 핵경제 병진노선)을 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동북아 국제 안보환경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동적 또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강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이다.

구조주의적 주장과 달리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 해석은 일단 제도화가 개시되면 자체의 재생산 논리에 따라 제도화된 노선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 반드시 더 악화된 안보적 위기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제도화된 정책 노선의 확대재생산, 즉 본 연구에서의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심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경로의존적 제도화 과정이 시작되면 '우연한 급변적인 사건(Contingent Events)'이 제도적 자체 재생산 구조의 강화를 위한 기회로 신속하게 활용되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145] 즉,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단계적 심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강도보다는 어떠한 위기 발생 사태가 촉발요인 또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145) James Mahoney, *op. cit.*, p. 515.

비록 국제적 또는 동북아 차원에서 위기 발생을 직접적으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강화와 연결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동북아 체제의 하위구조로서 한반도 분단체제상의 위기 발생, 즉 남북한 간 안보딜레마 악화가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강화를 초래해 왔다는 변형된 구조주의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무리이다. 6·25전쟁 전후의 [T-1]이나 소련권 붕괴의 [T-5] 시기에 발생한 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의 남북 간 위기나 갈등사태가 [T-1]과 [T-5] 간 사이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즉,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를 남북 간 안보딜레마를 악화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더구나 [T-1]과 [T-5] 사이에 발생한 비교적 굵직한 위기 고조 사례, 예컨대 삼척 등지에서의 무장 유격대 침투(1968년), 1·21 청와대 습격(1968년), 미 정보선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1968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1974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태(1976년) 등은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146] 더욱이 이러한 도발 사태가 특정시점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일련의 캠페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판독해 낼 수 있다. 즉,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이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강화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강화의 정당성 확보 또는 군비확충의 효과 검증 차원에서 기획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안보 위기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46) 냉전 기간 중 북한에 의한 대남도발은 사실상 상수였다. 사실상 늘 그러했다는 말이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 도발사례들의 연대기적 정리는 다음 참조. Office of the Korean Chair, "Record of North Korea's Major Conventional Provocations since 1960s," CSIS, 〈http://csis.org/files/publication/100525_North_Koreas_Provocations_60s_Present_0.pdf〉 (검색일: 2018.7.28.); Hannah Fischer,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 Report for Congress RL 30004 (April 20, 2007) CSIS, 〈https://www.hsdl.org/?view&did=472881〉 (검색일: 2018.7.28.).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T-1]에서 [T-5]에 이르는 결정적 시기들이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강화를 선택하는 북한의 결정을 촉발하는 계기로 활용된 것은 사실이나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주장될 수 있는 바와 같은 [대외적 위기→군수산업 우선주의 강화]라는 인과적 고리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요컨대 국제차원에서의 위기발생은 촉발 또는 허여 요인으로서 필수 조건적으로 기능하지만,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경로의존적인 제도화를 불러오는 충분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정치적 요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본 연구도 국제적·국가 간 위기상황의 발생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 국내 파벌정치의 이차원 게임의 논리로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확대·심화과정과 제도적 경로화를 설명한다. 국제적 위기발생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권력정치적 갈등과 '경쟁의 국내정치'는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촉매 역할을 수행했다.

라.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경로화

(1) 이차원 게임(Two-Level Power Games)

국제적 행위자로서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의 국내정치 행위자 간 권력 및 노선투쟁의 산물로 결정되며, 경쟁하는 국내 권력정치 행위자는 국제적 변동요인을 자신의 권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간 전략적 연계현상이 발생한다. 동일한 국제적 차원의 위기상황도 경쟁·갈등관계에 있는 국내정치 분파와 집단의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되게 해석된다. 정책결정자들은 국제위기를 국내정치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경쟁하는 각 분파는 권력기반 확대를 위해 상대진영 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승리조합(Win Set)[147]을 제시하기 위해 진력한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 권위주의체제에서 이러한 분파 간 권력투쟁의 승패는 정치행위자의 정치적 생존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그만큼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권위주의체제 권력게임 참여자들에게 있어 국가내부에서의 경쟁은 국가 간 국제적 안보위기 못지않은 '국내적 위협(Domestic Threats)'이자[148] 체제위기로 인지될 수밖에 없다.

국내적 위협의 근원에 대한 해석도 국가 간 위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경쟁 분파 간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1956년 종파투쟁[149] 당시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주의 비판(De-Stalinization)과 서방과의 평화공존 노선 천명을 활용하면서[150] 경공업주의 노선을 주창, 김일성 등 만주·군부파의 중공업 우선주의 노선에 반기를 들었던 연안파 부수상 최창익, 상업상 윤공흠 등과 소련파 기계공업성상 박창옥 등 저항세력의 입장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심대한 위협은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거하며 "스탈린 자신보다 더 스탈린주의자"로서 권력매집에 몰두하는 김일성의 '민족 스탈린주의(National Stalinism)'[151]와 개인우상화 정책, 당의 민주 집중제를 파괴하는 김일성과 만주유격대 출신 충성파들의 전횡, 그리고 중화학공업·

147) Robert D. Putnam, *op. cit.*, pp. 435~441.

148) Steven E. Lobell, *op. cit.*, p. 50.

149)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Andrei N Lankov, "Kim Takes Control: The "Great Purge" in North Korea, 1956-1960," *Korean Studies*, vol. 26, no. 1 (2002), pp. 87~119.

150) James F. Person,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5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6), pp. 48~50.

151) Andrei N Lankov, "Kim Takes Control: The "Great Purge" in North Korea, 1956-1960," p. 88.

군수산업 우선주의로 표상되는 강경 군사주의 노선이었던 것이다. 물론 김일성파의 시각에서 이들은 반민족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이며[152] 내부의 적들로 '대숙청(Great Purges)'의 대상이다.[153]

이러한 국내정치적 분파 경쟁에 대한 극단적 위협의식의 증대와 이로 인한 과도한 또한 과소한 비정상적 대외안보정책 결정은 정부 정책노선에 대한 권력엘리트들의 합의(Elite Consensus)를 얻기 힘들거나 엘리트응집력(Elite Cohesion)이 낮고, 정부(체제)의 취약성(Government or Regime Vulnerability)이 높은 환경에서 더욱 발현되기 쉽다.[154] 북한의 식민지 독립 직후 내부적 혼란 상황에서 상호신뢰와 응집력이 미약한 정파들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과 노선 경쟁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내부 정치 상황에서 '집단적 우려(Collective Angst)'나[155] '정서적 호소력(Emotional Appeals)'[156]을 발생시키는 대외적 위기는 오히려 대중적인 내부 '결집효과

152) 8월 종파사건 이래 현재까지 소위 '반당·반혁명적 종파'분자는 내부의 적(경쟁자) 또는 숙청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낙인을 찍는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장성택에 대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서에 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12.9.

153) 김일성 파에 의한 연안파, 소련파 대숙청의 과정과 정당화 구실은 다음 참조. Andrei N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 143~174.

154) Randall L. Schweller, *Unanswered Threat: Andrei N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Hawaii: East-West Center, 2005), pp. 143~174.

155) Roni Porat, Maya Tamir, Michael J. A. Wohl, and Tamar Gur, "Motivated Emotion and the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Liberals Are Motivated to Feel Collective Angst (like Conservatives) when Faced with Existential Threat," *Cognition and Emotion*, Online First Publication, April 18, 2018, 〈https://doi.org/10.1080/02699931.2018.1460321〉 (검색일: 2018.8.26.).

156) Alan J. Lambert, J. P. Schott, and Laura Scherer, "Threat, Politics, and Attitudes: Toward a Greater Understanding of Rally-'Round-the-Flag Effect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0, no. 6 (2011), pp. 343~348.

(Rally-'Round-the-Flag Effects)'를 얻는 한편, 정당화 구실로 활용하여 경쟁하는 엘리트 정파나 파벌을 제압하거나 숙청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안정된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자유·비밀선거와 언론, 그리고 독립적인 사법부와 의회 등 법제적으로 정비되고 실질적으로도 유효한 경쟁과 비판, 그리고 정치적 귀책(歸責)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정권수립 초기 북한과 같은 신생 권위주의체제에서 대외적 위기는 내부적 분열을 해소하며 정치적 안정과 지배세력의 권력기반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될 여지는 더욱 높아진다.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제도화과정에서 시원이 되는 가장 중차대한 시점인 [T-1]에서의 북한의 내부정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6·25전쟁 전후의 위기 상황은 군수공업주의가 주력 노선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는 근원적 요소로 기능했을 뿐만이 아니라, 김일성과 충성파 집단이 지배권력을 집중시켜 나가는 원천적 계기가 제공해 주는 사태였다. 소련에서 계수된 민주집중제의 틀 안에서 어렵사리 유지되던 정파 간 '권력분점(Power Sharing)'과[157] 최고지도자와 체제 내 통치엘리트 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특징으로 하는 '경합적 독재체제(Contested Autocracy)'가 최고지도자 개인과 충성 추종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확고한 독재체제(Established Autocracy)'로[158] 변환되는 권력독점화의 과정이 냉전 갈등의 전개

157) 제한적일지라도 당 체제 또는 군부 준타(Junta)에 비교적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착된 권위주의 엘리트 간 권력 분점 및 공유를 제도적 장치(예, 최고 지도부의 임기 제한 규정)들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은 제고된다. Beatriz Magaloni, "Credible Power-Sharing and the Longevity of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1, Issue 4-5 (April/May, 2008), pp. 715~741.

158) '경합적 독재체제'와 '확고한 독재체제'의 개념과 작동원리, 그리고 체제전환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Milan W.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57~62.

와 6·25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것이다.[159]

[T-1]에서 [T-5]에 이르는 결정적 시기들은 군수산업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김일성 가문과 추종세력이 경공업 육성정책 등 대안적 노선을 엘리트 분파들을 제거해 나가며 권력을 독점해 가는데 활용될 수 있는 계기들을 제공해 주었다. 결정적 시기를 거치면서 대안을 제기할 잠재력을 지닌 잠재적 경쟁분파가 차례로 사라지면서, 김일성 가문과 만주유격대 세력의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160] 〈표 Ⅲ-3〉에서 이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군수산업 우선주의와 무력통일을 주창하는 김일성 가문을 축으로 한 만주유격대 세력의 권력 독점이 강해지는 만큼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제도화도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 역으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이 강화되면서, 김일성 체제 지배세력의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확대재생산의 악순환의 고리가 완결되는 것이다.

159) 제도적 투명성과 신뢰도가 낮은 독재체제에서 최고지도자와 동업·협력세력과의 권력분점은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과 양 세력 간 권력 균형의 어려움으로 깨지기 쉽다. Milan W. Svolik,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April, 2009), pp. 477~494. 1948년 정권 수립 시기 성립되었던 북한의 권력분점체제는 6·25전쟁 등을 권력집중의 계기로 전략적으로 활용한 김일성과 만주파 세력에 의해 분해되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이에 대한 최후의 조직적 저항이었다.

160) 만주유격대 파벌의 형성과 정권수립 초반 권력 장악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Adrian Buzo, *Politics and Leadership in North Korea: The Guerilla Dynasty,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2017), pp. 1~68.

〈표 Ⅲ-3〉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결정적 시기와 정치적 파급효과

결정적 시기	국내정치 권력게임 결과
[T-1] 1948년 북한정권 수립과 동북아 냉전 전개	**권력집중** 6·25전쟁을 전후 남로당 주력 및 무정 등 연안파 숙청으로 김일성과 만주유격대파의 주도권 확보로 당의 민주·집중제 및 권력분점체제 소멸
[T-2] 1956년 국제 스탈린격하 운동	**권력과점** 8월 종파투쟁 및 노선 대립에서 승리하며 연안파 및 소련파 대량숙청으로 김일성과 만주유격대파의 권력 과·독점체제 성립
[T-3]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권력과점 심화** 4대군사노선 추진으로 항시적 전시동원 체제를 구축하며 대민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김일성과 만주유격대파의 권력 과·독점체제 강화
[T-4] 1960년대 중소분쟁 격화	**권력독점** 1966~1967년 갑산파 대숙청 이후 김일성 개인중심 일인지배체제와 부자세습제 배태
[T-5] 1989혁명(소련권 붕괴)	**가문독재**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부자세습 가문 독재 확립

출처: 필자 작성.

외부의 안보위기 발생이 권력집중화의 기회로 활용되면서, 안보위기의 강도가 아니라 담지세력인 김씨 가문과 추종세력의 권력집중도에 연동되어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경로의존적 제도화의 악순환 고리가 완결되면서 숙청과 국내적 경쟁에 의한 내부 위기의 강도 역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심화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비례적으로 연동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부적 위협이나 잠재적 대안노선의 도전은 시기를 거칠수록 약화된다. 권력 집중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수산업 우선주의는 심화는 바로 권력집중도의 심화와 비례하며 발생하게 된다. 내부정치적 권력게임을 매개로 경로의존적인 제도화 과정이 확고히

정착된 것이다. 현재까지의 최종결과물은 군사경제의 비대화 및 수령독재의 3대 세습과 핵 개발 및 군수공업 분야의 확고한 수령지배체제의 구축이다. 시기별로 살펴보자.

(2) 역사적 전개 과정

결정적 시기 [T-1]은 1945년 식민지 해방과 소련 군정기를 거쳐 1948년 갓 수립된 북한정권에 동북아 냉전(미·소 및 남북 대립)이라는 대외적 위기가 닥친 시점이다. 소군정기를 거치면서 스탈린식 정치·경제 모델이 북한에 이식되었다.[161] 다른 장에서 소개되었듯이, 소련의 개발논리는 인민의 총력적 노력동원과 소비억제에 기초한 중화학공업 및 군수공업 중심 강제적 경제발전 노선과 상시적 군수동원체제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신생 북한정권이 반드시 자력갱생적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을 따라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에트 국제분업 체제에 호응한 보다 특화된 국가개발 노선에 착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에 냉전구조가 펼쳐지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정세에서 북한, 정확히 김일성과 만주유격대 파벌의 선택은 전쟁준비와 군수공업 발전이었다. 김일성의 선택을 육성으로 들어보자.

>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의 무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패망하였으나 일본은 아직 민주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 나라 남반부에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일제를 대신하여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 [만]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다시 우리 나라에 기여들면 우리는 그놈들을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

161) 소군정기와 김일성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pp. 57~62.

하게 철처히 소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자들을 때려 부시고 하루빨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여러 가지 좋은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이 총을 다 메도록 하여야 합니다.[162]

그렇다면 자력갱생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일성의 육성을 다시 들어보자.

무기생산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군수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구상을 인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에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병기공장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 물론 우리는 무기를 국내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총은 원가가 많이 먹기 때문에 자체로 총 한 자루를 만드는 값이면 다른 나라에서 총을 여러 자루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은 국방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무기는 다른 나라에서 주다가도 못 줄수 있고 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주겠다고 할 때에는 빚을 지고라도 사올 수 있지만 안주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는 손을 털고 빈손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163]

---

162)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1949년 10월 31일 65호공장 대표들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99~300.

163) 위의 글.

김일성의 전쟁준비와 자력·갱생적 군수산업 육성정책 채택은 후일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이 경로의존적으로 정착되는 시원적 결정이었다. 이 시기 전쟁 결정과 군수공업 육성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한 6·25전쟁의 책임을 김일성과 만주파의 최대 경쟁자들인 국내파 박헌영, 이승엽 등과 연안파 무장세력의 거두 무정 등에게 전가하면서 이들을 축출하였다. 비록 전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무력통일 노선 추진과 6·25전쟁 결정은 결국 김일성 직계세력의 패권 확립의 토대가 되었다.

1956년 국제 스탈린격하 운동의 강력한 파장이 6·25전쟁 전후 국내파 등 강력한 경쟁세력을 거세한 후 김일성 개인숭배로 치닫고 있던 김일성 치하의 북한에 도달하면서 위기가 고조된 [T-2]의 시점은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초기적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준 시기였다. 김일성과 만주파의 압박과 숙청위험에 처해 있던 연안파 및 소련파[164] 연합세력은 탈스탈린주의의 국제적 영향력 하에 1956년 8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개인숭배와 중화학 및 군수공업 중심 전후 복구노선을 비판하고, 경공업·인민경제 우선 전후복구 노선을 주창하며 전세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거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김일성을 견제·비판할 수 있는 경쟁 분파가 사실상 사라졌고 중공업·군수공업 중심주의 노선은 북한의 체제적 귀속특징으로 고착된다. 소련 미코얀 제1부총리와 한국전 당시 조·중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팽덕회를 단장으로 하는 소중 연합대표단이 파견되어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복권 등을 압박하는

164) 연안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소련파에 대한 김일성 파벌의 압박과 숙청 과정은 다음 참조. Andrei N Lankov, "Kim Il Sung's Campaign against the Soviet Faction in Late 1955 and the Birth of Chuch'e," *Korean Studies*, vol. 23 (1999), pp. 43~69.

후원 강대국들의 간섭이 있었지만, 수년간 대규모 숙청이 진행되며 양대 세력은 사실상 거세된다. 명맥이나마 유지되던 권력분점체제는 이제 종말을 고하였고 독재자개인중심 독재체제가 깊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165] 김일성과 추종세력의 강력한 정책 추진 하에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은 확고한 제도화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

1962년 [T-3] 시기 쿠바 미사일 위기는 북한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소련의 대미 결전 결의(Resolve)의 취약성이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쿠바에 대한 공약파기는 소련과의 방위동맹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동맹 유기(Abandonment)'[166]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사태였다.[167] 후일 미국의 월남 방위공약 폐기와 월남패망 사태로 인해 한국정부도 유사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바 있다. 이에 김일성과 김일성 직계 만주유격대파는 소련과의 방위동맹의 취약성 등을 강조하며 전시동원 자력갱생 경제체제 수립 및 주체적 안보확보를 위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간다.[168] 결국 1962년 12월 당 4기 제5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사 분야에서의 주체사상 구현을 위

---

165) Andrei N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pp. 175~201.

166) 동맹의 유기(Abandonment)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Glenn Snyder, *op cit.*

167) Alexandre Debs and Nuno P. Monterio, *Nuclear Politics: The Strategic Causes of Prolife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281~282.

168)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북한 김일성 세력의 위기의식과 대응 방향을 보여주는 외교문서들을 취합한 다음 저작 참조.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d.,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Origins of North Korea's Policy of Self-Reliance in National Defens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No. 1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12),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NKIDP_eDossier_12_North_Korea_and_the_Cuban_Missile_Crisis.pdf〉 (검색일: 2018.6.30.).

한 행동노선으로 ①전인민의 무장화 ②전국토의 요새화 ③전군의 간부화 ④장비의 현대화 등을 포함하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다. 북한의 기형적인 항시적 전시동원체제 유지와 군사경제 비대화의 경로가 되돌릴 수 없이 고착화 된 사태였다. 쿠바 미사일 사태를 기회로 전쟁 없는 전시동원경제체제를 건설하며 김일성과 만주유격대 출신 군부파는 국가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는 한편, 김일성 등의 주도로 중화학 및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후 복구과정에 대한 갑산파 등 당내 엘리트 세력 일부의 회의적 시각을 일거에 제압하며 권력 독과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1956년 흐루시초프 주도로 스탈린 격하운동이 시작되면서, 모택동 개인숭배주의가 고조되던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후원 동맹국들인 중소 간 상호갈등 및 균열이 북한에 대한 이들의 안전보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T-4]도 대외적 안보 위기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북한에 있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히 정상외교 등을 통해 김일성은 양국 간 '등거리 정책(Policy of Equidistance)'을 구사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양국으로부터 두둑한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국내정치적 기반과 지위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169] 그러나 1960년대 중·후반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중소 간 갈등의 대규모 영토분쟁으로의 비화는 북한의 입장을 곤란케 하는 중대한 사태의 진전이었다. 특히 1966년 이후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 중국은 북한의 줄타기 외교 등을 소련식 수정주의로 공격하고 수차례 무력시위와 도발을 감행하는 등 적대적 위협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170]

---

169) Zhihua Shen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rking Paper* No. 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12), p. 35.

그러나 김일성과 추종세력은 오히려 이러한 위협을 그들이 견지하는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강화의 기회로 활용한다. 수정주의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김일성은 1·21 청와대 습격(1968년), 미 정보선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1968년) 등 한국과 미국에 대한 연속된 기획도발로 선명 강경노선을 부각시키는 한편, 군수공업 우선정책을 강화하며 국방 자력갱생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1966년 10월 김일성은 2차 당대표자회에서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발표한다. 1960년대 말에는 내각에 군수공업만 전담하는 제2기계공업부를 별도 설치하고 당중앙위에 군수공업 담당 비서를 신설하여 군수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하여 군수공업의 확장은 물론 직접 통제 및 관리를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후 군수생산이 더욱 방대해짐에 따라 1970년대 초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제도화에 진력한 것이다.

김일성파가 국내정치적 권력독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태는 갑산파의 숙청이다. 일제 강점기 만주동북항일연군의 국내활동 조직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된 갑산파는 김일성과 만주유격대파의 견고한 동맹 세력이자 지류로서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과의 권력투쟁과 숙청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김일성과 직계 유격대 세력에 의해 점차 세력을 상실해 가면서, 김일성의 강경 군사노선에 비판적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갑산파 주요 인물들은 전후 복구과정 및 이후 4대군사노선 추진 등에서 김일성 등이 무리하게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을 밀고 나가자,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감축할 것과 인민실생활 수준을 높이는 인민경제 우선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170)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4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4), pp. 3~16.

당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김일성 충성파들의 부자세습을 통한 권력승계 계획에 대한 불만이었다. 숙청에 있어 갑산파의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에 대한 저항은 좋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결국 1967년 3월 당중앙위 4기 15차 비밀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박금철·김도만·이효순 등 갑산파 주요 지도자를 거세하고, 수년간 지방당 및 기업소 수준에까지 숙청작업을 확대하여 갑산파의 근간을 분쇄하였다.[171] 최후의 비판세력을 제거한 이후 김일성신격화 및 김정일로의 부자권력승계 작업은 본궤도에 오른다. 독재자중심 개인독재체제의 전형으로서 유일수령제가 완성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1989년 탈소혁명과 소련붕괴,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향으로 북한은 주요한 후견국들의 보호를 상실한다. 이런 점에서 [T-5] 시기는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이자 과거의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요하는 전환의 시점이기도 했다. 북한으로서는 ①전면적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시장사회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 또는 ②중화학·군수산업 우선주의와 무력통일 노선 고수 중 하나를 체제의 명운을 걸고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결정은 후자였다. 경로의존적 선택이 반복된 것이다. 김정일 치하에서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위기 극복과 부자세습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선군정치와 핵무장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제2경제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오히려 확대된다. 김정은 세습 후 2013년부터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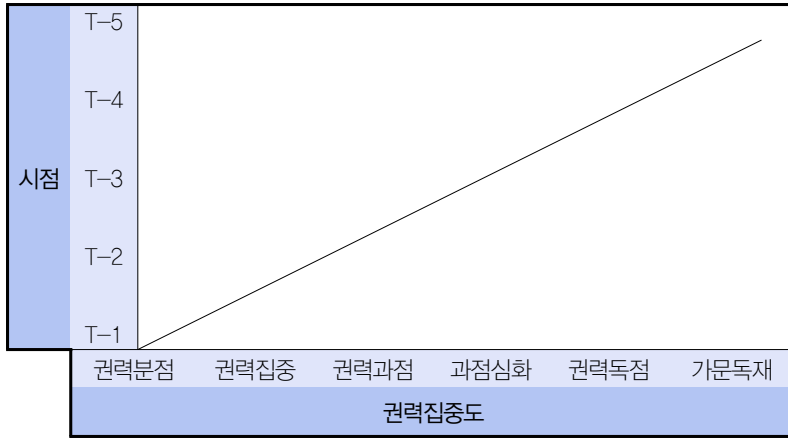
171) 갑산파 숙청 관련한 외교문서들을 취합한 다음 저작 참조.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d., "The 1967 Purge of the Gapsan Fa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No. 15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13),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the-1967-purge-the-gapsan-faction-and-establishment-the-monolithic-ideological-system〉 (검색일: 2018.5.8.).

건설 병진노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결국 2017년에는 핵무력 완성이 선언된다.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소련권 붕괴라는 초유의 위기를 선군정치 및 핵·경제병행노선으로 강행돌파하는 한편, 대내외적 위기극복을 구실로 1997년 농업담당비서 서관히 처형 및 관련자 대량 숙청,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2만여 명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심화조 숙청작업,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일련의 공포정치 등의 술탄적 정치공학을 구사하며 3대 세습의 가문독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다. 소련 붕괴의 대외적 위기를 오히려 유일독재체제 공고화의 기회로 활용했다.

마.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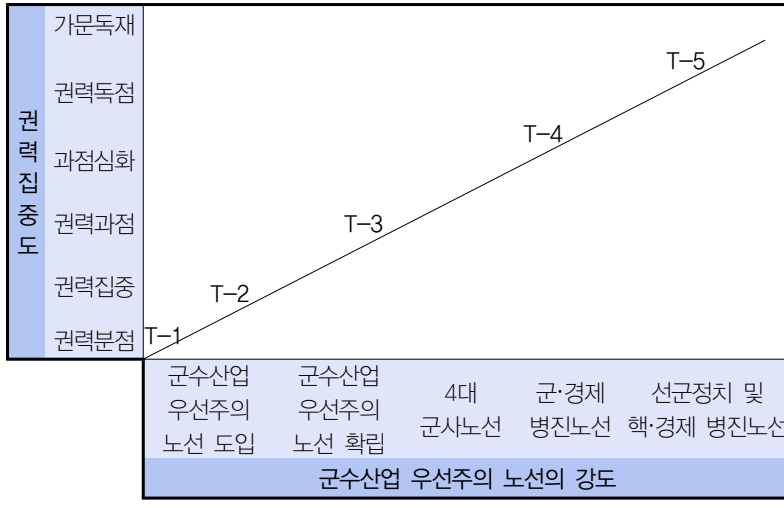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T-1]에서 [T-5]에 이르는 결정적 시기의 대외적 위기들은 경쟁세력의 제거 및 권력집중을 꾀하는 김일성·김정일과 추종세력의 의지와 권위주의체제 국내정치 게임의 메커니즘을 경유하여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제도의 확대재생산을 불러오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Ⅲ-2〉에 정리된 바대로,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결정적 시기들이 경과되면서 비례적으로 북한체제의 권력 집중도도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 Ⅲ-2〉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의 결정적 시기와 권력집중도



출처: 필자 작성.

〈그림 Ⅲ-3〉 권력집중과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 심화



출처: 필자 작성.

또한 〈그림 Ⅲ-3〉에 표시되었듯이, 권력분점 체제에서 출발하여 유일수령제와 부자세습 가문독재의 확립에 이르는 권력 집중의 여

정은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심화과정이기도 했다.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과 정책은 권력 집중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정적 시기에서의 대외적 위기 상황들은 이를 촉발하는 매개물로서 작용했다. 결국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과 제도의 경로의존적인 확대재생산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버린 군사경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국내정치의 결과물이다. 냉전 기간을 관통하며 북한 못지않은 안보적 위기를 경험했던 모든 국가가 군사경제 비대화의 늪에 함몰된 것은 아닌 이유이다.

2. 군수산업 비대화의 구조

김일성 중심의 집권세력은 권력 강화를 위해서 군수산업 우선주의를 제도화했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제도화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에 진행됐다. 북한은 군수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무원 중심 군수산업 관리체계를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로 바꿨다. 수령이 군수산업을 직접 지도한 것이다. 북한은 인민경제에서 군수산업 부문을 분리해서 '제2경제'로 명명했다. 수령은 군수산업을 유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수공업부의 지도를 받는 제2경제위원회를 설립했다. 군수공장은 수령의 지시를 받아서 무기를 개발·생산했다. 군수공장은 년·반기·분기·월 단위로 무기생산 집행정형을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수령에게 보고했다.

군사경제 비대화가 지속된 이유는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라는 군수산업 지배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가의 자원이 군수산업으로 집중되었으며, 당과 내각은 군수산업 부문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군수산업에 대한 자원 쏠림의 고착화는 군수산업의 비대화와 인민경제의 자원부족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 구조와 작동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군수산업 부문에서 구축된 수령유일체제를 의미한다. 수령유일체제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다.[172] 수령유일체제는 당과 국가가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이행하는 체계다. 수령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당·정·군을 지도한다. 당과 국가기구는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수령의 수직적 권위에 의존해서 지배하는 행정적 통치체제다. 수령과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은 수직적 논의를 통해 군수생산을 진행한다. 수령은 유관기관에 군수생산 명령과 지시를 하달하며, 유관기관은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한다. 수령의 명령과 지시는 수직적 논의를 통해 조정되는데, 유관기관들이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조정해야 할 경우 수령에게 직접 제의서를 올려서 재방침을 받는다. 유관기관들은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조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수평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유관기관 간 수평적 논의의 부재는 수령의 군수생산 명령과 지시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앤다. 유관기관은 수령과 수직적 논의를 통해 기관이기주의를 관철하기에 골몰한다. 이 결과로 인해 국가의 자원이 군수산업에 집중되고, 군수산업 비효율은 커진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제2경제위원회가 설립된

172) 김민·한봉서,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9.

1972년경에 구축됐다. 김일성은 정무원에서 제2경제위원회를 분리해서 제2의 정무원으로 규정했다. 1972년 12월 정무원 산하 기계공업 관련 부문들은 기계공업위원회로 재통합됐으며, 정무원 산하 부서들에 분산된 군수생산 부서들은 제2경제위원회로 통합됐다. 수령은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와 당중공업부(군수공업부의 전신)를 통해서 군수산업을 직접 지도했다. 당중공업부는 군수생산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관할하면서 수령의 명령에 따라 군수공장에 대한 투자와 각종 무기 개발·생산을 지도했다.[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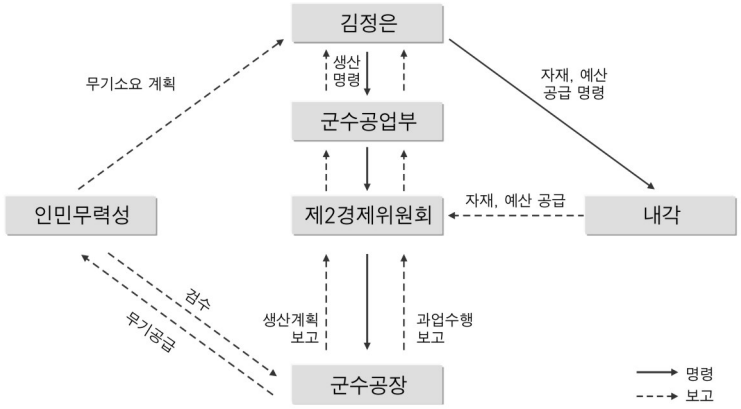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수령이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해 군수산업을 직접 지도하는 체계이므로 군수산업으로의 자원집중을 초래했다. 수령은 제2경제 부문을 제2의 정무원으로 규정했고, 국가 자원과 재정의 우선적 배분 원칙을 확립했다. 내각은 인민경제보다 군수산업 부문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국가의 자원은 군수산업에 집중됐고, 시간이 갈수록 군사경제는 비대해졌다. 인민경제는 자원부족이 고질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그림 Ⅲ-4〉와 같이 핵심 구조와 작동을 도식화할 수 있다. 군수산업은 수령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작동한다. 군수생산에 관한 김정은의 지시는 군수공장까지 내려가고, 군수공장은 군수생산 집행정형을 김정은에게 보고한다.[174]

173) 정광민,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경제시스템의 변동," p. 132.

174)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67.

〈그림 Ⅲ-4〉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 핵심 구조와 작동



출처: 필자 작성.

수령은 군수공업부를 통해서 군수산업을 지도한다. 무기생산계획은 제2경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생산계획과 인민무력성에서 요구한 무기소요계획을 기초로 군수공업부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무기생산계획 보고서 초안은 관련 당 조직들의 검토를 거쳐 중앙당 서기실로 제출한다. 중앙당 서기실 군사담당 서기는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비준을 받는다. 수령이 비준한 문건은 최고사령관 명령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제2경제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에 하달한다. 무기생산명령은 군수공업부를 거쳐서 제2경제위원회에 하달한다. 무기생산에 필요한 자재·예산 공급명령은 내각을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에 하달한다.[175] 내각은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에 관여할 수 없고, 군수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의무만 있다.[176] 내각은 각 성에서 관할하는 공장·기업소에서 생산한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군수공업부문에 공급한다.

175) 김정일,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pp. 315~317.

176)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67.

북한이탈주민 L1은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에 관해서 증언했다. 인민무력성은 김정은에게 무기소요계획을 보고한다. 김정은은 무기소요계획을 검토해서 비준한 후 제2경제위원회에 무기생산명령을, 내각에 무기생산에 필요한 자재·예산 공급을 명령한다.

>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소총을 생산한다. 우리 얼마 생산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이게 군이라 합시다. 군에서 지금까지 자동보총·권총, 군에서 지금까지 생산한 연식에 따라서 병기국에서 자기가 사용한 연식에 따라서 교체할 개수를 보고하면 김정은이 일제 때 것부터 생산하라 하면 그것부터 교체합니다. 어느 정도 사용했다 하면 성능검사해서 다 회수하고 바치고 군에서 요구하는 개수에 따라서 무력부에 보고합니다. 김정은이 결재를 내리고 일 년 생산 계획을 받아서 만든다. 군에서 총창모부 병기국에서 보고를 한다, 병기국에서 얼마 필요합니다. 김정은이 2경제에다 말하고 모든 것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진다. 소총 100만 자루 만든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자재가 내려오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방침이 내려오고. 2경제는 황해제철소는 군수특수강 생산하는 공장이 따로 있으니까 100만 자루 만든다 하면 목재나 자재는 내각에서 지시를 줘서 한다.[177]

수령의 군수생산 명령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하달한다. 군수산업 생산 관련 모든 계획이나 지시문은 김정은의 친필지시, 김정은의 명령을 의미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달한다.[178]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과 최고사령관 명령 작성은 군수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상무조를 구성해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해 전투정치훈련과업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

177)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178)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66.

서 작성이 좋은 보기다.

북한은 매년 10월 새해 전투정치훈련과업 명령서를 작성하기 위해 상무조를 구성한다. 상무조는 인민무력부 작전국·제1전투훈련국·제2전투훈련국·정찰국에서 차출해서 구성한다. 작전국에서는 북한군 각 병과를 담당하는 각 처들의 상급참모들을 차출하고, 제1·제2전투훈련국에서는 각 병과들의 훈련방법을 전문 담당하는 상급참모들을 차출한다. 이들은 정찰국이나 작전국 초대소에서 합숙하면서 명령서를 작성한다. 명령서는 작전국 각 병과 담당 부국장들과 전투훈련국장의 확인을 받아 총참모장에게 제출한다. 총참모장이 사인한 명령서는 인민무력부장과 총정치국장의 사인을 받아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조직지도부에 보낸다.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조직지도부가 최종 결정한 명령서는 중앙당 서기실 군사담당 서기에게 보낸다. 군사담당 서기는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최종사인을 받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발령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도 관련 전문부서들에서 차출된 전문가들이 작성한다.[179]

김정은의 비준을 받아서 하달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과 최고사령관 명령은 누구도 어길 수 없고 오직 무조건 관철할 의무밖에 없다. 정무원 위원회·부와 군수산업부문 일군들은 최고사령관 명령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180]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L1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북한의 정치적 행정시스템 자체는 김정은 지시나 해당지에 따라서 집행까지 방침으로 받아서 자금까지 받아서 조달한다. 김정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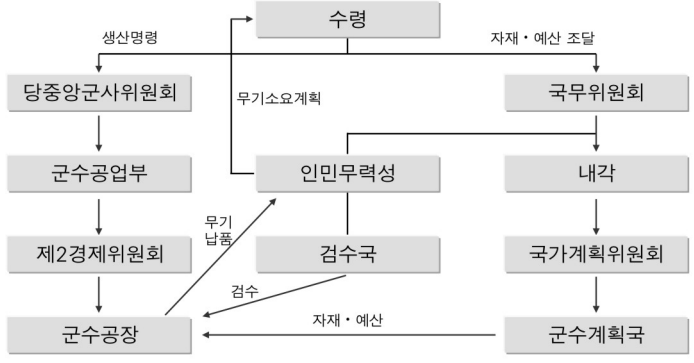
179)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파주: 살림, 2012), pp. 73~74, p. 78.

180) 김정일,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15.

> 방침은 무조건 비밀이다. 절대성 무조건성. 집행단위에 국한된다. 군수공업부에서 2경제에 조달하고 대외경제총국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고, 기술총국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고. 그 옆에 유관부서들은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집행단위에 국한된다고 한다. 여기서 집행 여부에 해당하는 간부들의 충성여부를 검열하는 계기가 된다.[181]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그림 Ⅲ-5〉와 같이 세부 구조와 작동을 도식화할 수 있다. 수령은 당을 통한 생산체계와 국무위원회를 통한 자재·예산 조달 체계를 지도한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김정은과 주요기관들 간에 수직적 관계만 존재한다. 무기 생산, 자재 조달 등을 두고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주요 기관들 간 수평적 관계는 거의 없다. 무기생산계획·명령·생산·조달·피드백 등 모든 생산과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명령과 수령에 대한 직보를 통해 작동한다.

〈그림 Ⅲ-5〉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 세부 구조와 작동



출처: 필자 작성.

181)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K3은 계획 총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진술했다. 계획 총화는 월·분기·반기·년으로 진행되며, 연간 계획은 12월~1월 사이에 수립한다. 공장계획과는 생산예비숫자를 작성해서 제2경제위원회에 제출하며,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공장들에서 제출한 연간 생산예비숫자를 상향 조정해서 해당 군수공장들과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 확정된 안을 군수공업부에 제출한다. 군수공업부는 김정은의 비준을 받아서 지표계획과 액상계획으로 구분해 하달하며, 군수공장에서는 최종 하달된 지표에 따라 생산한다.

> 연 계획은 12월 달부터 세워서 1월 달 들어가기 전에 그게 생산예비숫자가 공장계획과를 통해서 작성돼서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2경제위원회로 이건 올라갑니다. 2경제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작성 돼가지고 전투계획까지 공장에서 생산한건 아무래도 작게 세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못하겠다.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야, 너 네 그거 가지곤 안 된다 전투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서 국가계획 더 포함돼서 정말 빳빳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새 계획년도가 시작되기 전 12월 달쯤에 로동자들이랑 모여서 그 생산계획을 토론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다시 올려 보냅니다. 올려 보내면 다시 작성돼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생산계획 얼마, 전투계획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표별 계획하고 액상별 계획 둘로 나눕니다. 지표별은 총은 얼마, 포탄 얼마, 수류탄 얼마, 지표별 떨어지고 총 판매액이 얼마해서 액상계획이 얼마 떨어집니다. 액상계획하고 지표계획이 떨어집니다. 지표계획은 말하자면 가짓수 계획이고 뭘 얼마, 그렇게 하고 액상은 총 팔아서 돈 덩어리를 얼마어치 떨어집니다.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182]

182)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과도한 생산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령의 재방침을 받는 과정도 수평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수직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예컨대 내각은 예산·자재 공급에 관한 김정은의 명령을 이행할 뿐, 군수공업부나 제2경제위원회와 직접 대화할 필요가 없다. 내각이 자재 공급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김정은에게 직보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제2경제위원회가 내각에 자재를 더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다. 인민무력성은 김정은에게 무기소요계획을 제출하고, 제2경제위원회에서 생산한 무기를 인수받아서 실전배치한다. 설사 실전배치한 무기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하더라도, 군은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보한다. 김정은이 무기성능 결함을 개선하도록 군수공업부에 직접 지시한다.

> 군에서 군수공업 쪽에 협력해줄게 뭐가 있어요. 군은 무기가 전력화됐다 시험 성공해서 전력화하다가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하면 김정은에게 직보한다. 만약 미사일을 생산했는데 불 타살 했다, 합동훈련하다 미사일이 안 된다, 군수공업부에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에게 직보한다. 김정은이가 포사격 실천할 때 잘 안 된다, 그때 만약 군수공업부 누가 안 참가했다 하면 "2경제위원장 오라하고 군수공업부장오라, 바로 이병철한테 말해라" 하면 바로 통화된다.[183]

국무위원회는 군수공업담당 국무위원을 두고 제2경제위원회의 군수생산을 지원한다. 군수공업담당은 내각이 제2경제위원회에 자재·예산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관리한다. 군수공업담당 국무위원은 군수공업부 부장인 태종수(1936년생)가 겸직한다. 내각은 제2경제위원회의 군수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안정적 군수생산을 보장한다.[184] 북한이탈주민 L1은 제2경제위원회

183)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증언했다.

제2경제위원회 예산은 무기수출 70%, 내각 20%, 김정은 혁명자금 10% 정도로 구성된다. 1992년 이후 국가예산에 의한 군수품보장제도는 식량·된장·간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만 보장한다. 전략물자는 군 자체로 623무역관리국을 통한 외화벌이로 충당하는데, 제2경제위원회 대외경제총국은 상명·연봉·창광·용악산 무역회사를 통해 무기류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 군수산업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김정은의 자금을 혁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한다.

> 내각 돈은 뭐냐면 국정가격으로 환산된다. 수입하는 건 비싸게 들어오지만 내각에서 들어오는 돈은 노동자들의 월급이라든가 여기 돈 500원도 안되는데. 월급이 국정가격으로 환산하면 식량만 주는데 원가만 보면 얼마 안 되죠. 내각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랑 행표 처리 한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북한 돈으로 5억을 배당해요. 인민군에 3억을 준다면 그게 다 행표 처리가 된다. 여기서 수표라고 하죠. 군수은행에서 조선중앙은행이랑 내각과 돈거래가 되죠. 식량·된장·간장·소금 일체 다 행표 처리 되고 하면 얼마 안돼요. 기본 군수공장에서 돌아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재고 먹는 것은 20프로나 되는 정도에요. 수출자금 보면 수출자금으로 70프로 충당하고, 20프로 내각에서 하고, 10프로 혁명자금으로 해요.[185]

내각에서 군수생산 자재조달 부서는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이다. 군수계획국은 7개~8개 부서에 150여 명의 현역장교가 근무한다. 군수계획국은 국가계획위원회 조직이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군수생산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을 심의하고 국가계획위원회 관련 부서와 조정 작업을 거쳐 자재·물자를 공급한다. 내각은 제2경제위원회

184)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월간 통일경제』, 8월호 (1995), p. 97.
185)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를 통해서 국방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각 성을 통해 병기생산을 위한 원자재·부품 등 군수생산품들을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한다.[186] 그러나 내각은 군수생산에 관한 수령의 명령을 이행할 뿐이다. 군수공업부나 제2경제위원회와 수평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는다.

> 내각에서는 계획만 짜준다. 2경제에서 필요한 거 예산을 강선제강소다, 김철제철소다, 생산하는 강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2경제에서 요구하면 내각에 국가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계획위원회는 2경제 담당이 따로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넘겨만 준다. 내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군에서는 전력화하는 것이지 아예 상관없다. 군수공장 자체에 성능시험장도 다 있다. 그런데 만약 4군단 24사단 몇 중대에 거기에 이전에 거랑 대비 훈련해 보겠다하면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면 김정은이 명령만 내려준다. 그럼 군 쪽에서는 그냥 김정은 명령받고 협조하는 것뿐이다.[187]

내각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제2경제위원회에 자재를 공급한다. 김정은의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내각은 재방침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철강 생산량이 100만 톤인 상황에서 인민경제에 70만 톤이 필요하고, 군수산업 부문에 50만 톤을 제공해야 한다면 김정은에게 상황을 보고해서 부족한 20만 톤에 관해서 재방침을 받는다. 물론 군수산업 부문에는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 그래서 실지 내각에서도 인민경제에서도 자기네 쓸 게 있어야 하니까 모자라면 이것을 수입한다. 무조건 보장이 원칙인데 군수에서 요구하는데 생산량 가지고 모자란다. 솔직히 김정은에게 보고합

186)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p. 97.
187)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니다. 내각에서 모자라는 량을 다시 방침 올려서 2경제 생산량이 모자라서 20만 톤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 하고 만약 특수강이다 하면 김정은이가 인민경제에서 모자라는 것은 다른데서 수입 할 것이니 특수강은 무조건 보장하라 명령한다. 특수강은 수입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해제철소라든지 김책제철소라든지 특수강을 만드는 그런 데가 따로 있고. 내각에서는 원자재를 못 들여가면 생산 못하니까. 원재료가 없으면 특수강을 생산 못하니까 죽으나 사나 원자재를 무조건 보장해줘야 한다. 황해제철소라든지 강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원료를 제때에 보장 못하면 내각이 죽는 거죠.[188]

제2경제위원회는 부족한 자재를 자체로 조달한다. 내각이 모든 자재·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경제위원회는 자재상사와 대외경제총국을 통해서 무기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수입한다. 각급 군수공장은 최고사령관 명령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무기를 생산한다. 인민무력성 검수국은 군수공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검수를 진행한다. 각 군수공장에서 검수를 통과한 무기들은 인민무력성에서 인수해서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거나 비밀창고에 보관한다.

인민무력성은 군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보급품을 생산·조달하고, 파손된 무기의 수리를 담당한다. 인민무력성은 군대 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파손된 무기의 수리를 위주로 군수생산을 운영한다. 인민무력성에서 군수생산 부서는 총참모부 장비관리국·운수관리국·검수국·후방총국이 있다. 인민무력성 검수국은 전차·장갑차·포탄·미사일·무선기 등 주요 군수공장에만 검수부를 파견한다. 각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무기는 인민무력성 검수를 통과해야 일선부대에

188)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배치할 수 있다.[189] 총참모부 15국은 필요한 무기 수입과 제2경제위원회에서 생산한 무기 수출을 전담한다.[190]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당적 지도를 강조한다. 김정일은 1970년대 말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연설에서 군수산업과 관련한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군수공업부문 당조직들은 최고사령관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달된 군수생산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체적 토의, 대책 수립, 집행정형 장악·통제, 편향 교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 내각 위원회·부 당조직들은 민수생산에 치우치지 않고 군수공업에 필요한 원료·자재·생산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투쟁해야 한다. 당중앙위 경제부서들은 정무원위원회·부들에게 군수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장악·통제해야 한다.[191]

나. 군수산업 관련 핵심 기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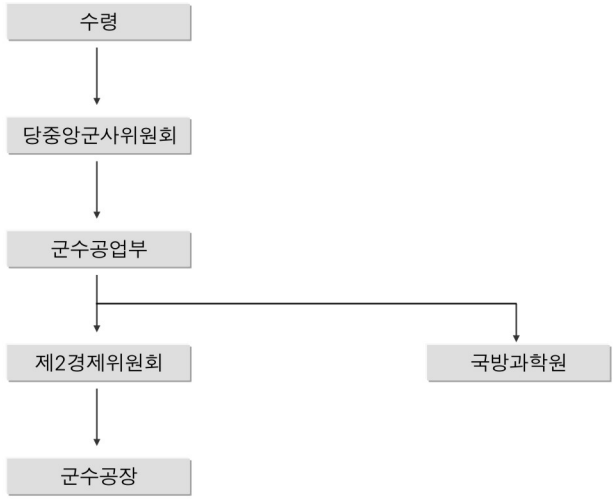
북한의 군수산업 관련 핵심기관들은 〈그림 Ⅲ-6〉과 같이 수령,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원, 군수공장 등이다. 수령은 당 지도기관을 통해 군수공장을 관리·통제한다. 당 지도기관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군수공업부다. 군수공업부는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원을 관할하며, 제2경제위원회는 전문적 무기생산 분야별로 7개 총국을 두고 군수공장의 생산을 관할한다. 국방과학원은 무기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군수공장은 각종 전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생산한다.

189) 북한이탈주민 L3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190)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4.

191) 김정일,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김정일 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15.

〈그림 Ⅲ-6〉 군수산업 관련 핵심 기관들



출처: 필자 작성.

(1) 당 지도기관

(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전략과 정책을 결정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총정치국장(김수길), 인민무력상(노광철), 총참모장(리영길), 인민보안상(최부일), 총참모부 작전총국장, 인민무력성 제1부상(서홍찬),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리병철), 국가보위상(정경택), 정찰총국장(장길성) 등 주요 군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은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다. 군수산업 정책은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담당한다.

당 규약은 군수산업 발전 사업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당 규약 27조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한다.[192]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수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이고, 군수산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핵심 기구다. 수령은 무기·전투기술기자재와 군용필수품 생산 등 모든 군수산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비준한다. 수령이 비준한 모든 군수산업 관련 결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군수공업부·제2경제위원회·내각에 하달된다. 군수공업부는 군수산업에 관한 김정은 명령을 실무적으로 집행한다.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공업부의 지시에 따라 무기를 생산한다.

(나) 군수공업부

군수공업부는 군수산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지도를 집행한다. 군수공업부는 수령의 군수산업 관련 정책결정을 보좌·집행하고, 핵·미사일과 재래식무기 개발·생산을 총괄한다. 군수공업부는 각종 무기 개발·생산에 관한 보고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 초안 작성을 총괄하고, 김정은이 친필 서명한 명령서를 집행한다. 군수공업부의 역할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수소탄 시험 준비에 관한 진행보고서와 수소탄 시험을 지시하는 최종명령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군수공업부는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실험 진행보고서와 최종명령서를 올렸다.

군수공업부는 2015년 12월 수소탄 시험준비 상황에 관한 진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정은은 2015년 12월 15일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192)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규약," 2010.9.28.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고 자필 서명했다. 군수공업부는 제4차 핵실험 직전인 2016년 1월 초 김정은에게 "수소탄 시험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최종명령서를 제출했다. 김정은은 2016년 1월 3일에 "당중앙은 수소탄 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 것"이라고 자필 서명했다.[193] 군수공업부는 2017년 11월 28일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5》형 시험발사준비를 끝낸 정형보고"를 김정은에게 올렸다. 김정은은 "시험발사 승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서명했다.[194]

군수산업 분야에 관한 보고서와 최종명령서는 군수공업부에서 작성해 김정은에게 제출한다. 군수공업부가 군수산업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 지도를 보좌·집행한다는 사실은 군수공업부 부장과 제1부부장의 당내 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한다.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당중앙군사위원으로서 당의 군수공업 관련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수공업부 부장은 당중앙위 정무국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군수공업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핵·미사일 개발자들이 군수공업부 핵심요직을 차지했다. 리만건(1945)은 2014년 12월경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에, 2016년 1월에는 당 군수담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에 올랐다. 리만건 전 군수공업부장은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했다. 리만건은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에 의해 제재대상 명단에

19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력사적인 명령을 하달," 『로동신문』, 2018.1.7.

194)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로동신문』, 2017.11.29.

올랐다. 2017년 10월 7일 당중앙위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 군수담당 부위원장 겸 부장인 리만건을 소환하고,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인 태종수를 보선했다.

그러나 리만건이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7년 12월 17일 당 핵심간부들이 참석한 조선혁명박물관 방문, 12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제5차 당세포위원장 대회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태종수 군수공업담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체코 유학을 다녀온 전형적 테크노크라트다. 그는 1970년대 희천정밀기계공장 지배인(1976),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2003), 내각부총리(2007),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2009·2012) 등을 거친 군수공업·기계공업 분야의 전문가다.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리병철·홍승무, 부부장은 김정식·홍영칠이다. 리병철(1948년생)은 공군사령관을 역임한 조종사 출신으로 2014년까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리병철이 군수공업부 당 조직을 통해 실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리병철은 2016년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2017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김정은과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도됐다. 리병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5]

홍승무(1945년생)는 북한 핵 개발의 핵심인물이다. 그는 중부 유럽과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핵공학자로 북한 핵무기 기술의 1인자다. 2009년에는 핵 개발의 중심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유엔 제재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성공기념행사에 대장계급장을 달

195) 전정환 외, 『김정은시대의 북한인물 따라가 보기』, p. 214.

고 나왔다.[196]

김정식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다. 그는 2012년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여했고, 그 공로로 최춘식 당시 제2자연과학원장과 함께 북한 최고훈장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2016년 2월 7일 김정식이 광명성 4호 장거리 로켓발사 과정을 김정은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김정은은 광명성 4호 발사를 참관하고 평양으로 돌아올 때 김정식을 전용열차에 태웠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자들을 위한 연회에도 리설주 옆자리에 앉혔다. 김정식은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미사일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공업부 부부장에 임명됐다. 2017년 5월 15일에는 화성-12형 발사 관련 보도에서 김정은 뒤편에 군복차림에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197]

홍영칠은 군수무기 개발 실무의 핵심인사다. 그는 2011년 2월 평북 운산공구공장 당비서를 하면서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것을 계기로 김정은에게 발탁됐다. 홍영칠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김정은의 항공 및 반항공군 제323군부대 시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주도했고, 제5차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마친 공로를 인정받아 인민군 중장계급을 수여받았다.[198]

이외에 김책공대 자동화연구소 소장인 전일호는 탄도미사일 분야 전문 기술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3년 2.16과학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등장했고, 2017년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알려졌다. 그의 전문분야인 수치제어 등 자동화기술은 미사일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 19일 김정은이 신형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

196) 위의 책, pp. 224~225.

197) 위의 책, pp. 211~212.

198) 위의 책, pp. 219~220.

시험을 참관할 때, 중장계급장과 군복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이후 각종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활동에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함께 김정은을 수행했다. 2017년 12월 13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는 장창하와 함께 김정은의 좌우에 앉았고, 주석단에서 김정은과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됐다.[199] 이광철은 탄도미사일 로켓엔진 등을 개발·생산하는 태성기계공장 지배인이다. 그는 신형 ICBM 로켓엔진 시험발사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자를 업어줄 때, 이를 옆에서 도왔다.[200]

군수공업부 핵심 인사들을 보면,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핵·미사일 개발은 군수공장 간 협동생산이 필요하므로 군수산업 전반을 변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군수공장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만큼 군수산업 생산 비용을 늘렸거나 일부 재래식무기 생산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제2경제위원회

김일성은 방대한 군수산업에 대한 유일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972년경 제2경제위원회를 설립했다. 당이 중앙인민위원회와 내각으로부터 제2경제위원회 지도·통제 권한을 넘겨받았다.[201] 김일성은 "제2경제위원회는 제2의 정무원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행정체계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소속이었으나 1993년에 국방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했다.[202] 제2경제위원회 창설 목적은 당

199) "김정은 이야기 듣는 장창하와 전일호," 『연합뉴스』, 2017.12.12,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1212257000013&input=1196m〉 (검색일: 2018.8.2.); 전정환 외, 『김정은시대의 북한인물 따라가 보기』, pp. 223~224.

200) 『조선중앙통신』, 2017.3.19.

201)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68.

202)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99.

의 군수산업 우선정책 지원과 방대한 군수생산 관리였다. 주요 업무는 모든 군수공장 관할, 군수생산 계획·재정·생산·공급 담당, 무기 해외 판매 등이었다.[203]

제2경제위원회는 평양시 강동군 등 여러 곳에 청사가 있다. 최근 제2경제위원장은 백세봉에 이어 노광철이 역임했다. 노광철이 인민무력상으로 옮기면서 후임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공업부의 지도를 받아 군수산업에 대한 행정 실무적 사업을 담당한다. 첫째,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달된 군수생산계획을 해당 총국과 군수공장들에 하달한다. 둘째, 군수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해서 해당 군수공장들에 공급한다. 셋째, 각 군수공장들의 군수생산정형을 감독·통제한다. 넷째, 각 군수공장들의 생산 통계·총화 문건들을 작성해서 군수공업부를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올려 보낸다.[204]

북한은 제2경제위원회에 자금·기술·인력 등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북한 군사건설국의 경비소대장을 지낸 임영선은 "일례로 어느 강철공장의 생산량이 50만 톤이고, 그중 10만 톤이 2경 폰드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만 톤은 우선적으로 생산해 2경에 보내줘야 한다" 면서 "주민용 칼을 만들 강철이 부족한데도 군수용 강철은 지하에 비축해 놓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에 있을 때 2경 관계자들이 국가예산의 절반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205] 북한이탈주민 L1의 증언에 따르면, 제2경제위원회는 지하자원 수출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대북제재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김정은이 보유한 당 자금을 받는다.

---

203) 위의 글,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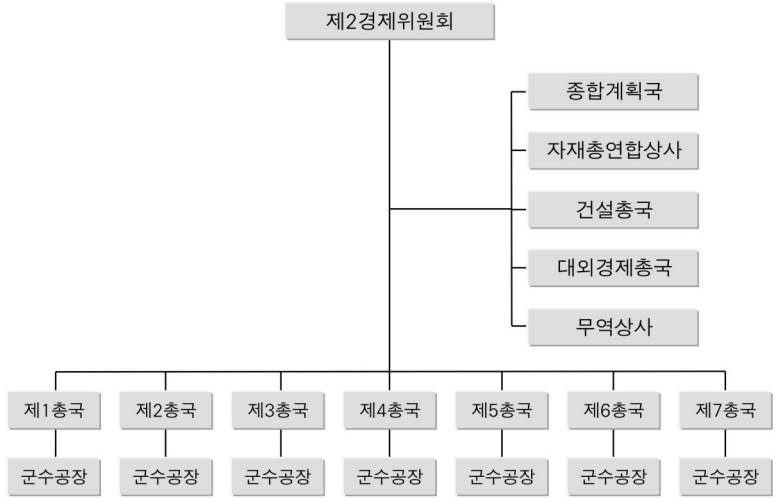
204)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p. 69~70.

205) "〈아북녘동포〉23.제3부2.군수산업으로 압박받는 민간경제," 『중앙일보』, 1995.3.30, 〈https://news.joins.com/article/3039320〉 (검색일: 2018.7.27.).

제2경제에서 돈 버는 자금줄은 석탄이라든지, 무기밀매, 금, 철광석 등을 수출하는데, 대북제재 때문에 힘들다하면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해서 김정은이 혁명의 자금이라고 자기 자금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군수분야에서 자금 마르는 일은 없다.[206]

제2경제위원회 조직체계는 〈그림 Ⅲ-7〉과 같이 종합계획국, 7개 총국, 건설총국, 대외경제총국, 자재총연합상사, 무역상사 등으로 구성된다. 7개 총국은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군수공장들을 관할하면서 무기를 생산한다.

〈그림 Ⅲ-7〉 제2경제위원회 조직체계



출처: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통일연구』, 창간호 (1997), pp. 99~104;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서울: 두솔, 2002), pp. 19~20 참고하여 필자 작성.

제2경제위원회 각 국별 주요업무는 〈표 Ⅲ-4〉와 같다. 종합계획국은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수요와 생산계획, 자재계획

206)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과 조달, 예산편성, 판매 등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계획을 관할한다.

〈표 Ⅲ-4〉 제2경제위원회 각 국별 주요 업무

구분	조직	주요 업무
기획	종합계획국	군수물자 생산과 공급 전반적 계획 수립 (수요·생산계획, 자재계획과 조달, 예산편성, 판매)
무기 생산	제1총국	개인화기(소총·탄약·기관총·수류탄·지뢰 등)
	제2총국	탱크·장갑차
	제3총국	포무기(대공포·야포·고사포·자주포·다연장로켓포 등)
	제4총국	각종 미사일
	제5총국	화학무기·반화학장비
	제6총국	전투함정·잠수함
	제7총국	통신장비·항공기
무기 수출	무역 상사	무기 수출, 원자재 수입
수출입	대외경제총국	생산 물자 수입, 외화벌이
조달	자재총연합 상사	자재 조달
건설	건설총국	공장건설 및 유지보수, 지하갱도 사업

출처: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p. 99~104;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19~20 참고로 필자 작성.

대외경제총국은 북경에 4개 회사가 있고, 단동에도 회사가 있다. 주요 임무는 3산화스뎅, 산화 알루미늄, 고순도 알루미늄, 이중용도 전자부품 수입 등 주요자재 수출이다. 각 회사에 파견된 대표들은 한 가지씩 물품을 맡아서 북에 보낸다.[207] 대외경제총국은 군수 관련 수출입을 담당한다. 북한이탈주민 L1의 증언에 따르면, 군 출신 무역일꾼들은 전략무기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중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찾아서 북한에 들여보낸다. 대외경제총국은 이 부품들을 전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감별해서 결과를 통보한다.

207)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전략무기 대외 수요가 이중용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200대 사서 들여가는데 한 가지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위해서 들여가요. ○○○이랑 축구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컴퓨터는 여명에서도 하는데 니들은 왜 하니 하니까 우린 딱 하나를 위해서 이걸 한다. 산업에도 필요하고 군수에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부에서 통보해주는데 륭성자료 1순위에 포함될 정도로 이거를 요구 하더라고요. (중략) 집행정형에서 보면 이건 수입구조에 맞다하면 5프로 가산금을 붙여서한다. 왜냐하면 륭성자료를 찾으라는 김정은의 방침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중용도 제품을 찾아서 자료랑 들여보내면 우리가 들인 노력에 통신비도 안 준다. 우리가 군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들여보낸 샘플이 이중용도에 맞는지 판단은 2경제위원회에서 감별한다. 2경제 대외경제총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부족하다 하고 돌려보내고, 2경제에서 파견된 사람들에게는 군에 있는 애들도 했는데 너희는 뭐하냐고 이러이러한 것 찾으라고 지시한다. 우리는 100만 불을 들여서 정보랑 들여보내면 다 떼이니까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잘 안한다.[208]

자재총연합상사는 군수공장 일반자재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자재총연합상사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건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도마다 지부를, 각 지역의 중요한 업체마다 출장소를 두고, 필요한 자재를 긴급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건설총국은 22호·44호건설사업소를 두고, 군수공장에서 필요한 건설 사업을 담당한다. 22호건설사업소(4천~5천 명)는 노천공장건설을 담당하고, 44호건설사업소는 지하갱도사업을 담당한다.[209]

무역상사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생산한 무기를 수출하고 무기 제

208)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209)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70.

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한다. 출장소는 남포항·흥남항·송림항·청진항·원산항·해주항 등에 있고, 각 군수업체들에 무역과를 두고 관리한다. 주요 전속항구는 송림항이고, 대성무역상사·릉라무역·삼천리무역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210]

(3)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북한은 무기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다. 김일성은 1952년 최초의 국방과학연구기관인 130정밀기계연구소를 설립하고, 6·25전쟁 이후에 17호연구소(화학연구소) 등 각 군종·병종연구소들을 설립했다. 이 연구소들에는 외국유학생들을 집중 배치했다. 그러나 여러 연구소들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일성은 1964년 6월 24일 130정밀기계연구소와 민족보위성 병기국의 각 부서들에 흩어져있던 연구소들을 통합해서 국방과학연구지도기관인 국방과학원을 설립했다. 국방과학원은 군 소속에서 1970년대에 제2경제위원회로 옮기면서 제2자연과학원으로 개칭했다. 김정일은 제2경제위원회에서 제2자연과학원을 독립시켜서 당기계공업부를 통해 관리했다. 김정일은 국방과학원을 '꽃방석 우에 앉혀도 아까울 것이 없는 단위,' '당에 제일 충실한 과학자 집단,' '당과 혁명의 재부'라고 평가했다.[211]

국방과학원 본부는 평양시 룡성구역 용성동·용추동에 있다. 주요 임무는 단·중·장거리 미사일 연구, 포 무기 자행자동화, 고성능 지뢰 개발, 현대적 무장장비 연구 도입, 재래식무기 현대화 사업, 핵무기 연구 등이다. 국방과학원은 군수공업부 제4과의 지도·통제를 받는

210) 위의 책, p. 71.

211) 김길선,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지: 제2자연과학원,"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편, 『북한조사연구(제3권 1호)』 (서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1999), pp. 33~35.

다. 국방과학원은 각종 단·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주체포 개발, 신흥호 경무장탱크 개발, 각종 탄류 개발, 상어급 중·소·극소형 잠수함 개발, 비행기 개발 시도 등 성과를 거뒀다.[212]

국방과학원 예산은 국가예산인 국방과학연구비를 기본으로, 제2경제위원회 산하 창광회사에서 해외무기를 판 수입, 과학원 산하 제2연합무역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자금,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이 다른 나라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번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자재상사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99호물자(최고사령관 동지 예비물자)라는 명목으로 제2경제위원회와 내각 산하 공장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아 연구소에 제공한다.[213]

제2자연과학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방과학원으로 개칭했다. 이러한 사실은 2014년 4월 7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에서 국방과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알려졌다.[214] 북한 매체는 2017년 3월 19일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로켓)에 관해 보도한 이후 국방과학원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국방과학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핵심인사들에게 군 계급을 부여하면서 군복 착용을 지시했다.

북한은 국방연구원이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2017년 7월 6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연환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을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원장으로 호명했다.[215] 국방연구원은 국방과학원의 상위기관으로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세부조직은 알려지지 않았다.

---

212) 위의 글, p. 33.

213) 하주희,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실체," 『월간조선』, 5월호 (2013),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H&nNewsNumb=201305100011〉 (검색일: 2018.7.27.).

214) 『조선중앙통신』, 2014.4.7.

215) 『조선중앙통신』, 2017.7.6.

국방과학원장은 2014년부터 최춘식의 후임으로 장창하가 맡았다. 장창하는 리병철·김정식과 함께 미사일 개발 실무책임을 담당한다. 장창하는 2017년 상장계급을 부여받았고, 2017년 2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당시 당 책임일꾼으로 소개되었으므로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겸직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창하는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위성발사에 참여한 공으로 최춘식 당시 제2자연과학원장과 함께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장창하는 미사일 개발 총책임자로서 화성-12형, 북극성-2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김정은을 수행했다.[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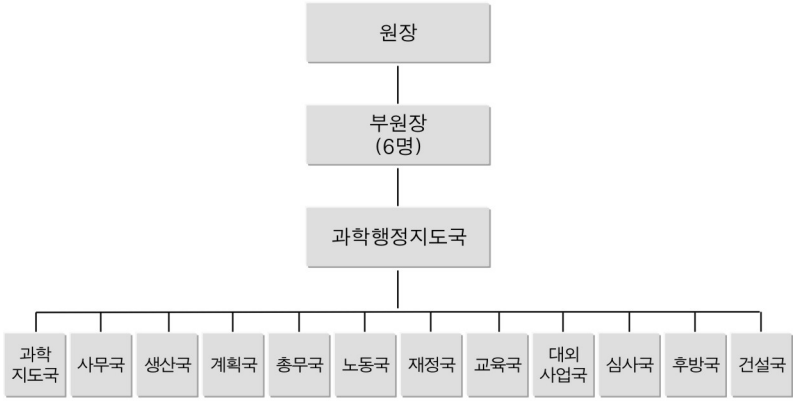
국방과학원 조직체계는 〈그림 Ⅲ-8〉과 같다. 조직체계는 원장·부원장(6명)·과학행정지도국·과학기술지도국·자재국 등 행정부서와 60여 개의 산하 연구소로 구성된다. 과학원 원장은 대장 칭호를 받고,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제2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연구사들은 약 1만 5천여 명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평양국방대학과 룡성약전공업대학 졸업생이고, 전원 군복을 착용한다. 연구사 외에도 4만여 명의 실험조수와 노동자들이 근무한다. 과학행정지도국은 과학지도국, 사무국, 생산국, 계획국, 총무국, 노동국, 재정국, 교육국, 대외사업국, 심사국, 후방국, 건설국 등 부서가 있다.[217]

---

216) 전정환 외, 『김정은시대의 북한인물 따라가 보기』, pp. 221~222.

217) 하주희,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실체"; 김길선,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지: 제2자연과학원," pp. 40~41.

〈그림 Ⅲ-8〉 국방과학원 조직체계



출처: 하주희,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실체," 『월간조선』, 5월호 (2013); 김길선,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지: 제2자연과학원,"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편, 『북한조사연구(제3권 1호)』 (서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1999), pp. 40~41 참고하여 필자 작성.

국방과학원에는 자재상사와 수입상사도 있다. 수입상사는 군수용 물자를 수입한다.[218] 국방과학원 산하 부문별 연구소는 무기개발 및 군수공장 기술을 지도한다. 직할 연구부문의 주 임무는 화생방·유도·전자·항공·포·함정 등 각종 무기 개발과 함께 외국무기 도입 후 인민군 실정에 맞게 모방·개조·생산에 관한 연구다.[219] 부문별 연구소는 628공학연구소(미사일), 금속재료연구소, 선박연구소, 물리학연구소, 101핵물리화학연구소, 185약전연구소, 평양약전연구소, 전자기계연구소, 112고사무기연구소, 130정밀기계연구소, 166공학연구소, 통신기계연구소, 유리연구소, 선박연구소, 144화학재료연구소, 섬유연구소, 77유체역학연구소, 212육군전자전연구소, 713공군전자전연구소, 628발동기연구소, 10월17일위성연구소, 전자계산기연구소, 공병연구소 등이 있다.[220]

218)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219)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p. 97.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는 공학연구소·정밀연구소·선박연구소·금속재료연구소·112연구소 등이다. 공학연구소는 로동1호·대포동1호를 개발했고, 각종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 정밀연구소는 인민군 무장장비 개량·개발에 기여했고, 정밀연구소는 각종 방사포, 주체포, 각종 고성능 지뢰 등을 개발한다. 선박연구소는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다. 이 연구소는 상어급 잠수함을 설계했고, 해상 관련 모든 전투기자재들을 설계한다. 금속재료연구소는 무장장비개발에 필요한 특수합금들을 제작하며, 112호연구소는 포무기의 자행자동화를 연구한다.[221]

국방과학원은 함경도 무수단 지역에 농업시험소라는 위장명칭으로 로케트시험발사기지들을 운영한다. 농업시험소에서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인수받거나 외국에서 구입한 미사일 등의 성능시험발사를 진행한다.[222] 국방과학원은 지방분원을 운영한다. 함흥은 화학, 서해는 세균, 박천은 핵, 강계는 전자 및 유도, 사회안전부는 폭발물 및 소형전자장비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각 분원은 생산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한다.[223] 함흥분원이 연구하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2.8비날론 공장과 흥남·신의주·청진·아오지·강계 등에 건설했고, 신경계·피부계·호흡계 등 재래식 화학무기를 양산한다.[224]

국방과학원의 무기연구·개발 과제는 〈그림 Ⅲ-9〉과 같이 2가지 경로로 선정한다. 첫 번째 경로는 해외 파견된 군 무역일꾼들을 통한 해외무기 탐구다. 각국의 무관부 부무관 1명은 정찰총국에서 파

220) 하주희,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실체"; 김길선,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지: 제2자연과학원," p. 41.

221) 김길선,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지: 제2자연과학원," pp. 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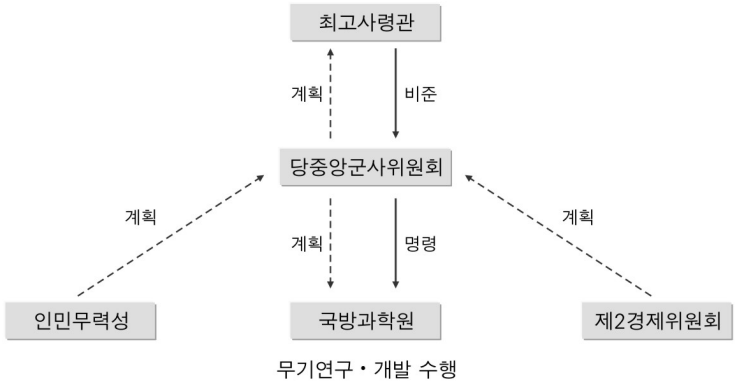
222) 위의 글, p. 41.

223)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p. 97.

224)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93.

견된 군사정보관으로 정찰총국에서 파견된 무역대표들의 군사기술 정보수집사업에 대해 본부와 연락한다. 북한은 각국에 상주하는 군 무역일꾼들에게 선진무기기술 도입 지침을 내린다. 해외무기 탐구는 군사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해서 매수하는 방법과 최신 군사과학기술 서적·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무역일꾼들은 주재국 대방들과 인적관계를 구축하고 군사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해서 사업을 빌미로 평양에 데리고 가서 사업에 성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여색을 동반한 공작을 진행한다.[225]

〈그림 Ⅲ-9〉 국방과학원 무기연구·개발 과제 선정



출처: 하주희,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실체"; L1,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18.7.18.) 참고해서 필자 작성.

각국에 파견된 제2경제위원회 일꾼들은 각 나라의 군사과학기술 서적·문헌 자료를 수집해서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인 제2과학기술통보사에 전달한다. 제2과학기술통보사는 이 자료들을 심층 분석해서 북한에 도입되지 않은 군사 장비를 추려 국방과학원 심사국에 올린

225) L1,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p. 4.

다. 심사국은 후보군을 검토해서 군수공업부에 제출한다. 군수공업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공업부 명의로 김정은 비준을 받는다. 김정은 비준이 떨어지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관 명령과제'가 되어 군수공업부를 거쳐 국방과학원 과학지도국으로 내려온다.[226]

두 번째 경로는 인민무력성 건의다. 인민무력성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필요한 무장장비를 올린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수공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서 김정은의 비준을 받는다. 김정은이 비준한 과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관 명령과제'로 국방과학원에 하달한다. 국방과학원은 이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국방과학원이 연구·개발을 마치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합동 심의한다. 심의 통과 과제는 제2경제위원회에 생산과제로 하달하고, 생산된 장비는 군부대에 도입한다. 국방과학원 연구사들은 해당 부대로 나가 직접 장비 사용법과 원리를 강의한다.[227]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은 국가과학원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협력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약 300여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큰 연구기관은 국가과학원이다. 국가과학원은 1998년 평양시 은정구역 내 연구단지와 과학기술 행정을 담당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해서 연구·행정을 일원화했다. 국가과학원은 8개 연구 분원, 3개 지방 분원, 41개 직할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다. 직할 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소, 건설과학연구소, 반도체연구소, 석탄 연구소 등 41곳이고, 연구 분원은 전자자동화분원, 석탄분원, 경공업분원, 건설건재분원 등 9곳이며, 함흥 지방분원 등이 있다. 이중에

226) 하주희,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실체." 북한의 군수산업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 무기연구·개발 과제는 국무위원회가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227) 위의 글.

서 우라늄 농축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물리수학연구소, 화학공학연구소, 채굴공학연구소, 제2경제위원회 산하기구 등이다. 국가과학원 이외에 중요한 연구원(연구소)는 농업과학원, 경공업과학원, 의학과학원, 국방과학원, 원자력연구소, 수사과학연구원, 산림과학연구원 등이 있다.[228]

(4) 군수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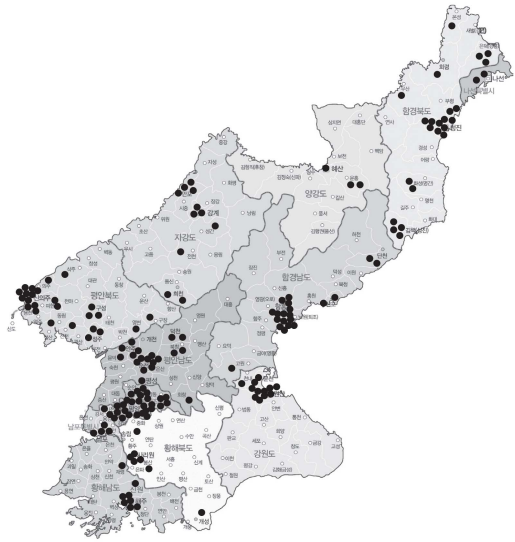
(가) 현황

제2경제위원회는 수령의 지도 아래 약 131개의 군수공장·기업소, 60여 개의 병기수리 및 부속품 제조창, 100여 개의 유사시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 가능한 민수품 공장 등 약 300여 개의 군수공장을 관리·운영한다.[229] 북한 산업은 〈그림 Ⅲ-10〉에서 보는 것처럼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북부지방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그림 Ⅲ-11〉 북한 군수산업 분포는 대체로 북한 산업 분포와 일치한다. 북한 군수산업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에 밀집돼 있다. 북한 산업 분포와 군수산업 분포의 차이는 자강도에 군수공장이 더 집중됐다는 점이다.

228)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p. 94; 박선도, "한반도 통일시 북한 군수산업 활용 및 처리 방안,"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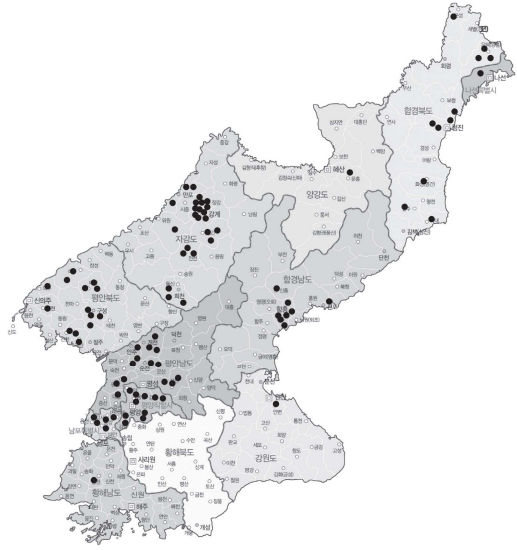
229)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p. 28;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p. 72.

〈그림 Ⅲ-10〉 북한 산업 분포



출처: 김경원 외, "부록 1. 공업별 주요 공장현황," 『북한의 산업 2015』 (서울: KDB산업은행, 2015), pp. 1039~1051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Ⅲ-11〉 북한 군수산업 분포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은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전문군수공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군수공장을 운영한다. 군수공장은 유형별로 전문군수공장·일반군수공장·전시동원공장 3가지로 구분한다. 전문군수공장은 각종 소화기·공용화기·재래식무기·핵미사일 등을 생산한다. 수리부품공장은 총포·기갑차량·함정조선·항공기·유도무기·탄약·화생제·전자통신 등 구성부품, 소재 및 수리부속품 등을 생산한다.[230]

일반군수공장은 군 피복이나 군화 등 군수품류를 생산한다. 일반군수공장은 인민무력성에서 관할하고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에서 생산계획을 하달한다.[231] 전시동원공장은 주로 민수품 생산에 종사하지만, 기계설비면에서 완전한 군수품 제조능력을 구비해서 필요에 따라 탱크·함정 등을 생산하는 준군수공장으로 운영하고, 전시에 전면적인 군수생산으로 이행하는 대기성 공장이다.[232]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정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전시동원공장은 약 21개소를 지정·운영한다.[233]

(나) 조직체계

군수공장 조직체계는 북한이탈주민 고청송의 수기를 통해 알려진 제26호공장(강계뜨락또르공장),[234]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제11호공장,[235] 제351호공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230)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p. 98.

231) 위의 글, p. 98. 철산군수공장은 군피복, 천막을, 115호·315호·145호 군수공장은 군피복 일체를, 205호 군수공장은 군용화를, 은성피복공장은 군피복, 내의, 양말 등을 생산한다. 북한이탈주민 L2는 8월27일 대성연합기업소(회령담배공장)에서 1,800~2,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군용담배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고 증언했다(북한이탈주민 L2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232) 백환기, "북한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북한학보』, 제4집 (1980), pp. 1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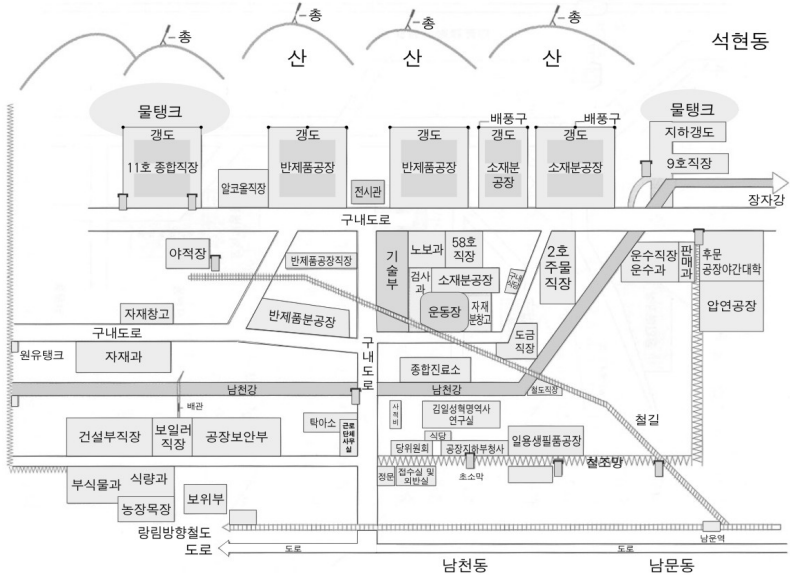
233) 김경원 외, "제5장 군수공업,"『북한의 산업』(서울: KDB산업은행, 2015), p. 716.

234) 고청송,『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25~56.

있다. 제26호공장은 제3총국 산하의 대표적인 군수공장이다. 위치는 자강도 강계에 있고, 종업원 수는 1만 2천 명 정도다. 제11호공장은 7총국 산하 공장으로 희천전기기계공장과 함께 탱크·잠수함·보병무선기를 생산한다. 공장 위치는 자강도 성간군 성간읍에 있고, 종업원 수는 약 8천 명 정도다.

군수공장 시설배치는 〈그림 Ⅲ-12〉 26호공장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북한 군수공장은 26호공장 시설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공장 시설배치에서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한 핵심 직장들은 지하갱도에 배치한다.

〈그림 Ⅲ-12〉 26호공장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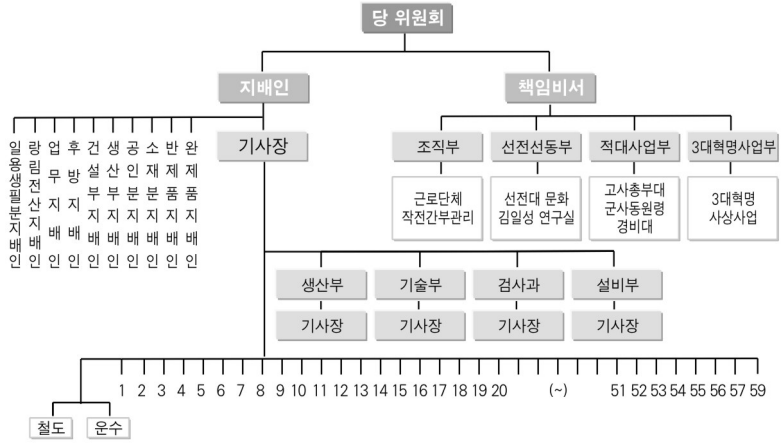
출처: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33.

235) 북한이탈주민 L3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11호공장에 관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L3은 자신이 작성한 "천리길전기공장의 일반상황과 무선기에서의 수정편"이라는 문서를 제공했다. 11호공장 일반상황은 이 문서를 주로 참조해서 정리했다.

26호공장에서 소재분공장 2·3·53호, 반제품공장 5·6·7·21호, 완제품공장 9·11·13호 직장이 지하갱도에 있다. 본 공장에서 20km 떨어진 장자강 유역의 분공장도 깊은 골짜기를 따라 지하에 있다.[236]

군수공장 조직체계는 〈그림 Ⅲ-13〉 26호공장 조직체계, 〈그림 Ⅲ-14〉 11호공장 조직체계, 〈그림 Ⅲ-15〉 351호공장 당 조직체계, 〈그림 Ⅲ-16〉 제351호공장 행정·생산 조직체계 등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호공장은 당위원회 산하에 당 책임비서가 지도하는 당 조직체계와 지배인을 책임자로 한 행정·생산 조직체계가 있다. 당 조직은 조직부, 선전선동부, 적대사업부, 3대혁명사업부 등이 있다. 행정부서는 기술부·설비부·생산부·업무부·후방부 등이 있고, 각 분공장과 직장 조직이 있다.

〈그림 Ⅲ-13〉 26호공장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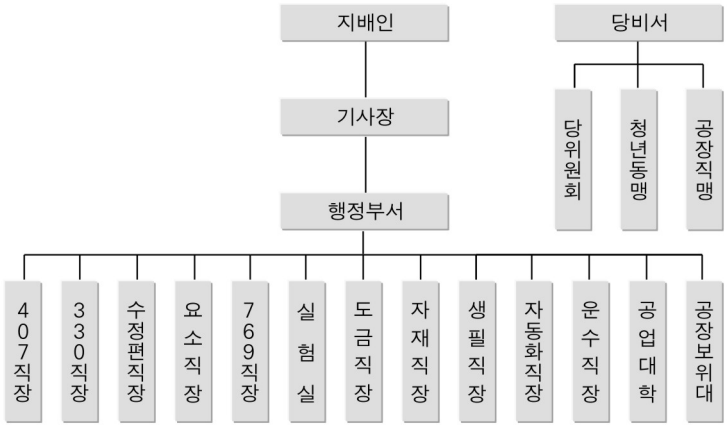
출처: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40.

11호공장 조직체계는 당비서가 관할하는 당 조직체계와 지배인이

236)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43~47.

관할하는 행정·생산 조직체계가 있다. 11호공장 지배인이 관할하는 직장은 407직장, 330직장, 769직장, 수정편직장, 요소직장, 실험실, 도금직장, 자재직장, 생필직장, 자동화직장, 운수직장, 공업대학, 공장보위대 등이 있다.

〈그림 Ⅲ-14〉 11호공장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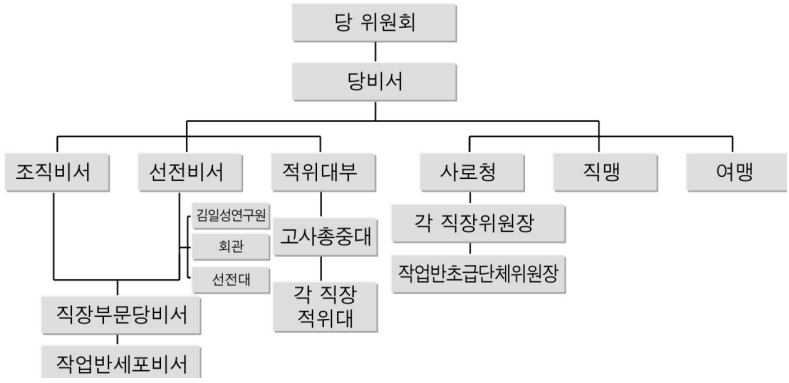
출처: 북한이탈주민 L3, "천리길전기공장의 일반상황과 무선기에서의 수정편," p. 2.

407직장은 보병무선기를, 769직장과 330직장은 탱크·장갑차무선기를 조립·생산한다. 요소직장은 무선기에 들어가는 저항들과 각종 전자요소제품들을 생산한다. 실험실은 각 직장들에서 생산된 무선기들을 각 난이도에 맞추어 실험한다. 예컨대 407보병무선기 시험은 무선기를 싣고 이동하면서 20~30km 거리에서 파장의 장애와 각종 기술 상태를 검사한다. 생필 직장은 주로 전기다리미와 전기치료기를 생산한다. 이 공장도 한 개 중대의 보위대를 조직해서 출입을 통제한다.

제351호공장도 당비서가 관할하는 당 조직체계와 지배인이 관할하는 행정·생산 조직체계로 나뉜다. 당비서는 직장 단위와 작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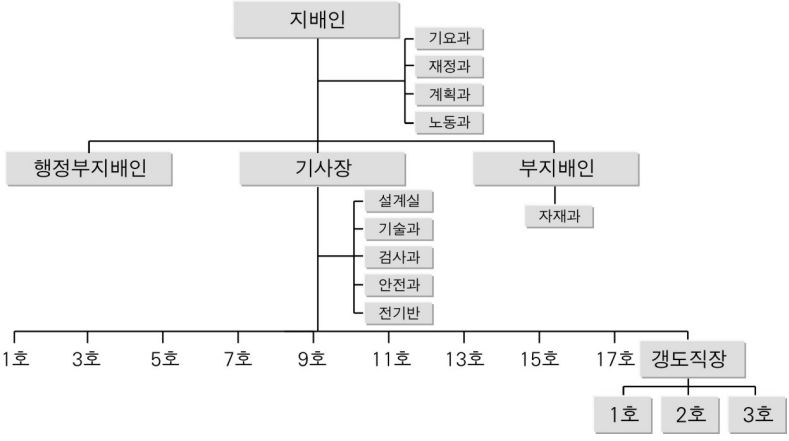
단위로 구성된 당 조직을 관할한다. 지배인은 행정·생산 조직을 관할한다.

〈그림 Ⅲ-15〉 제351호공장 당 조직체계



출처: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16〉 제351호공장 행정·생산 조직체계



출처: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기초로 필자 작성.

3개 군수공장 조직체계를 보면, 모든 군수공장은 당 조직체계와

행정·생산 조직로 나뉜다. 당비서는 당 조직을, 지배인은 행정·생산 조직을 관할한다. 당비서와 지배인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대체로 군수공장 경영은 당비서들의 영향력이 크다. 또 군수공장 당위원회는 도·시 당에서 관리한다. 도·시 당은 군수부를 통해서 군수공장 당위원회를 관리하고, 조직지도부에 보고한다. 도·시 당은 군수공장 당조직을 관리하지만 군수생산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제2경제위원회와 군수공업부가 수령의 지시를 받아서 군수생산을 관할하기 때문이다.[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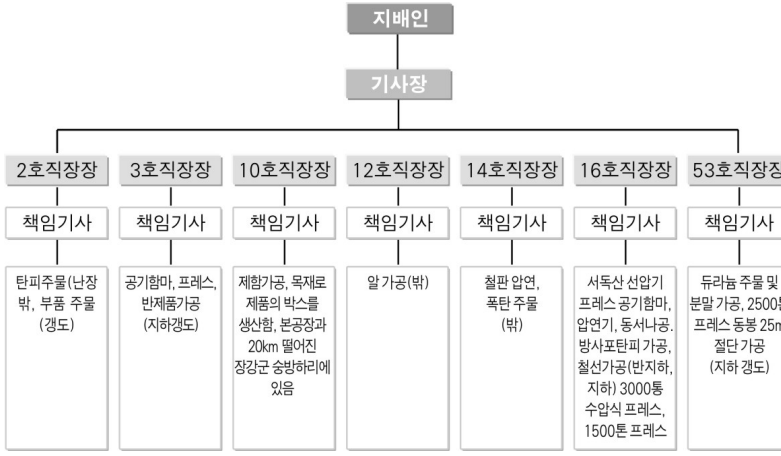
군수공장의 생산부문은 각종 부품생산 공장과 조립공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6호공장은 소재분공장·반제품공장·완제품공장·공인분공장·일용생필품공장 등 5개 분공장으로 나뉜다. 5개 분공장 산하 직장은 80여 개에 달한다. 26호공장은 소재분공장·반제품공장·완제품공장을 차례로 거치면서 완성 무기를 조립 생산한다. 소재분공장(3,500명~4,000명)은 공장 내 모든 소재를 재가공하거나 반제품으로 만들어 공급한다. 반제품공장(4,000명~5,500명)은 소재분공장에서 넘어온 소재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재를 반제품화해서 완제품공장에 넘긴다. 완제품공장(2,500명~3,000명)은 반제품공장에서 받은 반제품을 완전 조립하는 조립공장이다.[238]

군수공장의 분공장 조직체계는 〈그림 Ⅲ-17〉 26호공장 소재분공장 조직체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6호공장 소재분공장 조직체계는 지배인·기사장·직장장·책임기사·작업반 등으로 구성된다.

237)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238)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42~49.

〈그림 Ⅲ-17〉 26호공장 소재분공장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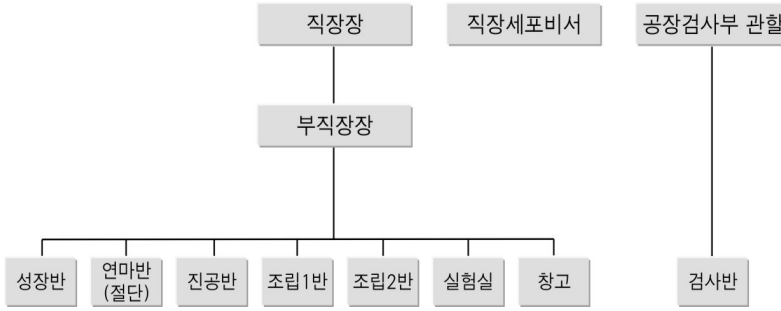


출처: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43.

군수공장의 직장 조직체계는 〈그림 Ⅲ-17〉 26호공장 소재분공장 조직체계와 11호공장 수정편직장 조직체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L3은 자신이 근무했던 11호공장 수정편직장에 대해 증언했다. 수정편직장 조직체계는 직장장·부직장장·작업반장·작업반원 등으로 구성된다.

수정편은 주파수와 저항을 조절하는 부품으로, 무선기의 핵심 부품이다. 수정편은 무선기 종류에 따라 다르고, 외곽의 종류에 따라 금속수정편·수지수정편·유리수정편 등으로 나눈다. 수정편직장 조직체계는 〈그림 Ⅲ-18〉과 같다.

〈그림 Ⅲ-18〉 11호공장 수정편직장 조직체계



출처: 북한이탈주민 L3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수정편직장 조직체계는 L3이 작성.

수정편직장은 세부 작업을 담당하는 수정편성장반·절단반·연마작업반·진공작업반·조립1반·조립2반·완성(실험)반 등이 있다. L3은 자신이 근무했던 수정편직장의 작업 환경이 좋았다고 증언한다.

> 저의 직장은 출입절차를 하고 들어가면 슬리퍼를 신고 모자도 쓰고 가운도 입고 하얀 장갑을 끼고 일을 하게 되고 18~20도로 고정 냉풍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습기가 있어도 생산을 못하게 되요. 저의 직장은 노동자들도 하얀 가운에 장갑을 끼고 깨끗하게 되어야 일하거든요.[239]

완성반은 정상·저온·고온·진동 실험을 통해 완성품을 선별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인민무력부 소속 검수원에게 보낸다. 검수원은 의뢰받은 제품 중 10%를 선택해서 완성반과 같은 방법으로 검수한다. 검수대상 제품 중에서 1개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의뢰받은 제품은 모두 불합격처리하고, 불량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두 합격으로 인증한다. 검수원은 자신이 합격도장을 찍은 제품들에 대한 법

239) 북한이탈주민 L3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적 책임을 진다. 검수를 통과한 제품들은 407직장·330직장·769직장 등으로 넘어간다.

군수공장은 민수산업으로 위장한다. 26호공장은 민수공장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일용생필품분공장을 운영한다. 직장은 60호부터 66호까지 7개 직장이고, 종업원 수는 대략 2천 명 정도다. 이 공장은 군수공장에서 생산하고 남은 자재를 활용해서 전기다리미·밥가마·도시락·우산·완구용품 등을 생산한다.[240]

군수공장은 다른 군수공장들과 협력생산체계를 구축한다. 26호공장과 자재·부품거래를 통해 연관된 공장은 북창 알루미늄공장, 8호제강소, 만포은하공장, 강계알코올공장,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본궁화학공장, 아오지7.7화학공장, 남포제련소, 17호공장, 평북대관26호공장, 118호공장, 평양산음공장, 67호공장, 화성화학공장, 구장군수공장 등이다.[241]

다. 소결론

김일성 정권은 군수산업 우선주의의 경로의존적 제도화를 진행했다. 그동안 북한 군수산업은 정무원을 중심으로 관리됐다. 정무원 중심의 군수산업 관리체계에서는 내각 산하 민수경제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고, 나머지를 군수산업에 배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수산업 우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군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령 중심의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확립했다. 김일성은 정무원 산하 내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군수산업을 관할하기 위해서 제2경제위원회를 설립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제2의 정무원으로 규정됐다. 수령은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

240)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49.

241) 위의 책, pp. 55~56.

회를 통해서 군수산업을 관할했다. 수령이 군수산업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면서 군수산업에 자원이 집중됐다. 내각은 군수산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군수산업은 더 비대해졌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수령의 수직적 권위에 의존해서 지배하는 행정적 통치체제다. 수령과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은 군수생산 과정에서 수직적 논의를 진행한다. 유관기관들은 수직적으로 하달된 생산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들 간에 수평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유관기관들은 수령과의 수직적 논의를 통해서 기관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군수산업 비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구성하는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은 수령·당중앙군사위원회·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원, 군수공장들 등이다. 수령은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군수산업을 직접 지도한다. 군수공장은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군수생산에 참여하는 군수공장은 약 131개의 군수공장·기업소, 60여 개의 병기수리 및 부속품 제조창, 유사시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100여 개의 민수품 공장 등 약 300여 개에 달한다.

국가의 자원은 수령이 직접 지도하는 제2경제에 우선 배분됐고, 나머지가 인민경제에 할당됨으로써 군사경제 비대화가 심화됐다. 그러나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군수산업 우선 자원배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제를 보유하지 못했다. 군사경제 비대화가 구조화된 것이다.

Ⅳ

소련 군수산업 전개와 특징

한병진 (계명대학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소련 군수산업 경제와 정치

가. 소련 계획경제 특징

소련 계획경제는 특정 생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 부처가 각각의 산업분야를 통제하는 극도로 세분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구조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낙농제품을 전담하는 낙농부, 유리부 등이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부처로 설립 운영되었다.[242] 시기를 거듭할수록 경제부처의 수가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 이르면 중앙정부 경제관련 부서가 60개에 가까울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계획경제와 매우 대조적이다. 고도로 집중화된 소련과 달리 중국의 계획경제는 지방정부 당서기장이 성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권한을 상당히 보유한 탈집중화된 체제이다. 다수의 경제학자는 소련과 중국의 계획경제에서 보이는 구조적 차이가 시장개혁의 전략과 성공을 규정하는 한 요소라고 평가한다. 계획경제 시스템이 고도로 집중화된 관계로 소련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전체 경제활동을 새롭게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지방당 서기장에게 상당한 경제적 조정의 권한이 부여된 탈집중화된 소위 M자 체제의 중국은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시장개혁을 수용하기에 유리했다. 부분적 개혁으로 인한 시장교란이 국가경제 차원에서 발생할 여지가 낮았다. 중국 공산당은 독자적인 단위로 움직이는 지방 경제별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점진적 실험을 할 수 있었다.[243] 독립적인 경제적 결정권을 지닌 성정부로 인해 중국의 시장

242) CIA, "Evolution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Soviet Industry 1917-57," (CIA Historical Review Program Release in Full, 1999), pp. 2~4.

243) W.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개혁이 재정적 연방제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244] 연방제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인 지방경제 사이의 경쟁이 지방정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 소련 계획경제 관리의 집중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흐루시초프의 중앙정부 개혁 조치이다. 집중화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명목 하에 그는 상당수 중앙부처를 물리적으로 폐지했다. 엘리트의 입장에서 이는 해고를 넘어 자리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중앙 공산관료의 광범위한 불만과 강력한 반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탈집중화 노력은 총서기장의 실각과 함께 막을 내렸다.

브레즈네프는 전임자의 정치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의적으로 공산당을 운영하면서 공산 엘리트의 이해를 침해하기는커녕 적극 보호하였다. 이 결과 중앙정부에서 계획경제부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보통 자본주의 정부에서 볼 수 있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의 통합적 성격의 경제부처가 아니라, 낙농부, 전자부 등 산업분야별로 중앙정부에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기능별로 분리 독립된 경제부서가 계획경제의 불합리 속에서 계획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 극심한 부처이기주의가 발생했다. 이는 계획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었다. 기능별로 구분되어 각 산업부문은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했다. 주요 중간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요로 인해 소비재 생산 부서가 독자적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 (1994), pp. 276~308; Y. G. Qian, G. Roland, C. Xu, "Why Is China Different from Eastern Europe? Perspectives from Organization Theory,"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3, no. 46 (1999), pp. 1085~1094.

244) Y. Qian and B. Weingast, "China's Transition to Market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Chinese Style," *Journal of Policy Reform*, vol. 1 (1996), pp. 149~185.

으로 운영하는 제철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모스크바 근교 다른 부서 기업에 여유분이 있어도 시베리아에 있는 자신의 관할 기업으로부터 중간재 물자를 수송 받으면서 소련 물류체제가 과부하가 걸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곤 했다. 만성적인 중간재 부족 때문에 각 생산부처는 자급자족 체제(ministerial autarky and departmentalism)를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는 엄청난 비효율을 낳았다.[245]

무엇보다도 계획경제는 혁신에 대한 저항이 상당하다. 관리 감독의 핵심은 양적 목표의 달성에 있다. 총생산량과 부가가치의 정도가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이는 생산품의 질적 수준을 도외시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모든 옷은 하나의 색깔, 형태, 크기로만 생산되었다. 기계를 교체하지 않아 생산의 총량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위 주인-대리인 문제가 만연했다. 실제 관리 감독의 눈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단위는 생산능력과 생산량 등을 제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정보는 철저히 단일 위계조직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따라서 하부 생산단위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정보를 숨길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올해 많은 양을 생산하면 다음 년도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어 목표달성이 보다 어려워지는 까닭에 하부 생산조직은 적당한 수준에서 생산 활동을 스스로 제한했다.[246] 전형적인 관료적 행태가 소련 경제 전반에 만연했다. 이러한 이유로 위계질서는 상호호혜적인 후원자-수혜자 관계망

245) Ed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s. Efficien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88), pp. 173~285.

246) Steven L. Solnick,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p. 10~41.

으로 점철되었다.[247]

군수산업의 경우 계획경제의 이러한 약점에서 다소나마 벗어나있었다. 총서기장을 비롯한 공산당 주요 엘리트가 군수산업에 직접 개입하여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정부적 차원에서 자원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수산업은 단순히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도 이루었다. 극적인 예가 바로 세계 최초의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이었다.

군수산업은 혁신과 제품의 품질관리 면에서 민간기업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소련의 군수산업 생산품은 질적인 면에서 당시 세계적 수준에 버금갔다. 이는 민간용 생산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혁신도 매우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민간기업이 양적 목표 달성에만 몰두하는 관료주의적 현상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일견 이러한 성과는 의아할 수 있다. 고도로 세분화되고 집중화된 기능별 부서에 속하여 수평적으로 조직된 당과 정부의 이중 감시통제에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9개의 국방관련 기계제작부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지닌 군수산업위원회(Military Industrial Commission)의 존재가 군수산업과 민간경제 분야의 계획경제 제도를 가르는 핵심 차이이다.[248] 자급자족과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혈투를 벌이는 비국방 분야에서 민간경제 부서를 아우르는 위원회는 1985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군수제품의 품질관리 제도가 민간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각각의 군수공장에는 군부대에서 직접 파견된 고위 군관료가 배치되었다. 이들이 군수품의 질을 검사하였다. 군으로부터 직접 월급을

247) Michael Urban, *The Rebirth of Politics in Rus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11~43.

248) Irina Bystora, *Russian Military-Industrial Complex* (Aleksanteri Papers, 2011), pp. 1~12.

받는 이들은 공장의 양적 목표달성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직업적 명성과 출세를 위해 이들은 생산품의 질을 독립적으로 판단했다. 민간기업의 품질관리자는 공장지배인과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이해가 매우 약했다.

혁신을 위한 조치 역시 적극적으로 고안되었다. 제품을 기획하고 고안하는 디자인 부서들이 군수품 생산 공장과 직접 연결되어 생산된 상품을 직접 실험할 수 있었다. 평가의 피드백이 신속하게 작동했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은 관료적 통제로 인해 제품 고안부서와 생산 공장이 물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249]

이렇듯 소련정부는 국방산업을 계획경제의 불합리한 논리대로 그냥 놓아 둘 수 없었다. 냉전 기간 내내 소련은 미국과 지속적인 군비경쟁에 놓여 있었다. 즉 경쟁의 압력이 작동했다.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강하고 지속적인 상황에서 군수공장은 민간기업과 달리 구식의 군수품을 계속 생산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애국주의의 기운 아래 군수생산 관련 당사자들은 급박성과 사명감을 지니고 생산 활동에 임했다. 이 역시 민간기업 활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이다. 그리고 정부는 원자재, 자본 투자, 고급 인력 충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수산업을 고려했다. 한마디로 군수산업은 민간과 달리 고질의 제품을 생산할 유인을 지니고 있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항상적으로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한마디로 비합리와 비효율로 서서히 죽어가는 계획경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분야가 군수, 국방산업이었다.

---

249) Ed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s. Efficiency*, pp. 218~220.

나. 소련 정치과정의 특징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련 정치과정의 특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 방식과 비교·대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논의이다. 소비에트 군산복합체의 특징은 여타 국가의 군산복합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사 부분의 발전을 위해 복합적으로 연결된 정치, 경제, 군부, 과학기술 엘리트 집단이라는 군산복합체의 일반적 규정에서 소련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스탈린의 전체주의 개인 독재정권과 스탈린 사후 소련정치는 뚜렷이 구분된다. 스탈린 사후 소련정치는 당 독재이다.[250] 일종의 권력분담이 작동하는 집단지도체제와 유사하다. 당 독재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때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영향력과 소련 공산당의 군수산업 정책의 추이를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지배자의 개인독재권력의 정도를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치집단이 가지는 전체 권력은 독재자의 개인권력과 엘리트의 집단권력을 포함한다.[251] 아래 수식의 값은 0에서 1 사이로 움직인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독재자의 개인권력이 상당한 개인 독재에 가까운 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대로 전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집단지도체제에 가깝다. 즉 당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지배자의 선택과 행위를 제약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50) 연구자의 분류는 지배엘리트의 힘의 배분 상태에 주목한다. 지배엘리트와 대중의 관계에 주목할 경우 스탈린은 전체주의로 스탈린 사후 소련은 후기 전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Juan Linz, "Totalitarianism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III,* eds. Greenstein and Polsby (New York: Addison-Wesley, 1975), pp. 175~411.

251) 위의 공식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고 있는 연구서 Jack Hirschleifer, *The Dark Side of For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에서 착안하고 있다. 필자의 공식은 힘의 차이가 아닌 힘의 비율에 따라 투쟁에서 이길 확률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림 Ⅳ-1〉 개인독재권력의 정도에 대한 공식

독재자 개인권력

(독재자 개인권력 + 엘리트 집단권력)

출처: 필자 작성.

이러한 수식으로 소련의 정치질서를 대략적으로 추적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련 정치는 스탈린의 개인 독재에서 점차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군수산업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Ⅳ-2〉 소련 개인독재권력의 추이

스탈린 사후 소련 스탈린

0 1

출처: 필자 작성.

(1) 개인 독재의 후퇴와 당 독재의 복원

눈부신 혁명 영웅이나 분명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독재자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독재정권에서 권력투쟁은 불가피하다. 엘리트가 어디로 조정해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권력투쟁은 독재자가 개인독재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엘리트의 공유지식 형성에 결정적 계기로 작동한다.[252] 권력투쟁의 결과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독재자가 얼마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난다. 한마디로 독재자의

252) Michael Chew,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 3~16.

죽음으로 권력투쟁이 분출하면 독재정치질서가 변할 수 있다.

스탈린 사후 소련의 권력투쟁은 소련 정치질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스탈린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권력투쟁은 격화되었다. 스탈린 사망 직후 비밀경찰의 수장 베리아의 숙청과 비밀경찰 조직의 이원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스탈린식 개인독재는 불가하다는 엘리트의 합의가 공고해졌다.[253]

비밀경찰을 이원화하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제한과 함께 당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었다. 아마도 당치에 대한 기억이 아직 강렬했던 모양이다. 스탈린의 개인독재가 한 세대 만에 끝났기 때문에 독재자 출현 이전 공통의 기억인 당 독재로 엘리트가 쉽게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254]

1953년 스탈린의 죽음 직후 당과 정부 요직은 정치국 핵심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었고, 당, 국가행정, 군, 경찰 엘리트 중 누구도 압도적 힘의 우위를 누리지 않았다. 이는 강력한 2인자를 거부하는 절대적 개인독재의 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스탈린 사망에서 1955년까지 소련은 본질적으로 집단지도체제였다. 말렌코프 수상, 베리아 내무국 수장, 몰로토프 외상, 보로실로프 국회의장, 흐루시초프 당비서, 불가닌 국방상 등의 인사가 당과 정부를 집단적으로 운영했다. 스탈린 사후 초기 말렌코프 세력이 힘을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반대세력은 1953년 9월 흐루시초프를 당 제1비서로 옹립하였다. 말렌코프를 견제하면서 동시 흐루시초프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서기장이라는 직함은 유보되었다. 여기

253) 독재자와 엘리트의 정치질서의 선호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Bruce Bueno de Mesquita,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James and D. Morrow,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2005).

254) Jason Brownlee, "Heredit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2007), pp. 595~628.

서 말렌코프가 당의 수장 대신 국가 수장을 선택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이후 권력투쟁에서 당이 후계자를 뽑는 권리가 있다는 엘리트의 합의가 구체화되면서 당의 수장이 전략적으로 유리해진다.[255]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은 단계별로 엘리트의 새로운 조정을 형성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먼저 당의 복원이었다. 소련 지도부는 당을 복원해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고자 했다. 그 핵심에 바로 소련 공산당 중앙상임위원회가 있다.

흐루시초프는 당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 공산당 엘리트(공화국과 Oblast[256])를 자신의 충복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 스탈린이 보여주었듯이 당비서의 핵심 권한은 바로 공산당원에 대한 인사권이었다. 특별히 중앙상임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지방당 요원의 임명이 중요하다. 지방당 핵심 요원을 자신의 충복으로 선임하면 이들이 다시 민주집중제의 원리에 따라 상부 조직 구성원의 인선에 관여했다. 이러한 권력의 순환(circular flow of power)은 연방국가인 소련에서 지방당이 지니는 정치적 중요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산당 제 1비서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자신의 충성파로 서서히 재구성할 수 있었다.[257]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엘리트의 공유지식이 자리 잡는다. 첫째, 스탈린 격화운동과 개인우상화 반대이다. 둘째, 엘리트의 물리적(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합의이다. 이 두 공유지식은 독재자의 개인독재권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엘리트의 조정을 도왔다. 흐루시

255) Jerry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192~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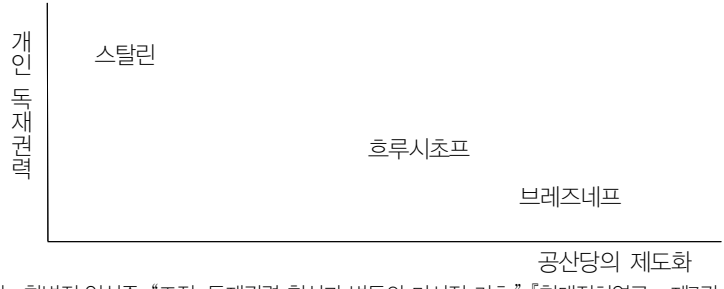
256) Oblast는 공화국 내 주(州).

257) Robert Daniels, *Russia's Transformation: Snapshots of a Crumbling System* (Boulder: Rowman and Littlefield, 1998), pp. 80~83.

초프는 당시 엘리트의 이러한 이해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공산당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누가 권력을 잡을지에 대한 물음만큼이나 개인 독재의 영향으로 소련 엘리트는 새로운 지배자를 어떻게 뽑을 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다. 말렌코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국이 총서기장을 뽑을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반대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을 긴급히 소집한 흐루시초프는 중앙상임위원회 투표를 통해 총서기장에 선출된다. 이 사건이 유명한 1957년 반당위기(anti-party crisis)이다.[258]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공산당 중앙상임위원회가 총서기장을 선출·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모두가 믿고 있다고 모두가 믿는 공유지식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공유지식의 위력은 이후 분명히 확인되었다. 집권 이후 수년에 걸친 흐루시초프의 전횡에 지친 공산당 엘리트는 1964년 중앙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투표로 총서기장의 해임이 결정되었고 이 결정에 따라 흐루시초프는 권좌에서 쫓겨난다.

〈그림 Ⅳ-3〉 소련의 당의 제도화와 개인독재권력의 추이



출처: 한병진·임석준,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 『현대정치연구』, 제7권 1호 (2014), p. 158.

258) Jerry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pp. 197~199.

(2) 정책결정 방식의 특징

당 독재가 복원되면서 총서기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개인적 신념과 함께 정치적 역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총서기장은 공산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실제적 권한을 가지지만 동시에 중앙상임위원회는 총서기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궁극적 권한을 보유한다. 이러한 상호적 견제로 인해 소련 경제정책, 특별히 군수산업 정책은 결정된다.

소련 정치에서 당 독재가 복원되면서 다양한 관료조직으로 뭉쳐 이익집단처럼 행동하는 공산엘리트의 갈등, 압력, 협상 등이 군수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사실상 브레즈네프 시기 의사결정 방식을 조합주의에 빗대기도 하는데, 조합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주요 이익집단의 수장들이 국가 최고의사결정에 대표되고 이들 대표자의 타협과 협상으로 정부정책이 결정되는 정치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흐루시초프의 실각 이후 소련은 정책결정에서 합의적 방식에 커다란 무게를 둔다. 총서기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금기시되고 각 기구의 대표자들이 각자가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일어났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 변화가 정치국 구성원의 확대였다. 1973년 소련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조직인 정치국에는 비밀경찰의 수장, 국방장관, 외무부장관을 포함하는 등 거의 모든 주요 관료조직의 수장이 참여했다.[259]

이렇듯 브레즈네프는 전임자와 달리 공산당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었다. 핵심 당직자의 교체비율은 낮아졌으며 새로

259) Valerie Bunce, "The Political Economy of Brezhnev Era: The Rise and Fall of Corporat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2 (1983), pp. 129~158.

운 업무가 갑작스럽게 부과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260]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제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유산이 소련의 주요 시설물들이 거대하다는 점이다. 각 이익집단은 정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크게 벌인다. 예를 들어 4차선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으로 8차선 다리의 반을 올해 만들어버려, 다음 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식이다.[261] 소련 경제가 19세기 산업화 시대의 거대 박물관이라고 명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배자의 카리스마와 명령 대신 관료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국 위원들 사이의 줄다리기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기에 다양한 권모술수가 동원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합종연횡과 다를 바가 없다.

요약하면 개인우상화의 스탈린 시대,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흐루시초프 시대, 정치적 안전과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합의가 자리 잡은 브레즈네프 시대를 거치면서 소련에서 지배자의 개인독재권력의 정도와 정치제도는 변했다. 이러한 개인독재권력의 변화와 함께 스탈린의 개인독재 전체주의, 흐루시초프의 과도기적 후기전체주의, 브레즈네프의 조합주의적 후기전체주의가 발생했다.[262]

---

260) George Breslauer, *Khrushchev and Brezhnev as Leaders: Building Authority in Soviet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2), pp. 269~292.

261) Gerard Rolan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pp. 5~11.

262) 한병진·임석준,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현대정치연구』, 제7권 1호 (2014), pp. 152~158.

〈표 Ⅳ-1〉 소련 엘리트의 조정과 정치변동

	엘리트 공동의 인식	엘리트 조정균형	개인독재화 정도	정권 형태
스탈린	개인 우상화	독재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공산당 붕괴	개인 독재 전체주의
흐루시초프	물리적 안전에 대한 요구, 무자비한 국가 폭력 사용 금지, 당 제도의 복원, 집단지도에 대한 뚜렷한 합의 부재	당중앙상임위원회를 통한 권력투쟁	당을 통한 일인 독재, 하지만 당 엘리트의 집단적 도전에 취약	과도기적 후기전체주의
브레즈네프	정치적 안전에 대한 요구, 집단지도에 대한 합의	당정치국을 통한 협의적 당 운영	공산당의 제도화	조합주의적 후기전체주의

출처: 한병진·임석준,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 p. 153.

다. 소련의 당군관계: 역사적 전개과정

소련 정치에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확고했다. 이는 소련 혁명의 역사를 반영한다. 혹독한 내전을 거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중국과 달리 소련은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내전을 경험했다. 이런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군부에 대한 스탈린의 깊은 불신은 1937년~1938년 사이의 무자비한 군 엘리트 숙청에서 정점을 찍었다. 군부 숙청의 심대한 영향은 핀란드와의 졸전, 독일군의 침략에 대한 초기 대패에서 확인되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군의 자율성은 크게 개선되었고, 전쟁 승리와 함께 군의 권위는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스탈린은 곧바로 전쟁 영웅 주코브 장군을 강등하면서 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263]

263) 소련의 군산복합체 연구자는 스탈린 시대는 전통적 의미의 군산복합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절대적 개인 독재정치에서 어떠한 엘리트 연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일맥상통하는 역사적 연구이다. Mark Harrison and Andrei Markevich, "Hierarchies and Markets: The Defense Industry Under

군의 정치적 입지는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핵무기의 등장 이후 흐루시초프는 지상군 병력과 "철을 먹어치우는" 국방산업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정책을 취했다. 동시에 그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분명히 했다. 국방위원회를 통해 당은 군을 통제했다. 위원회의 의장은 총서기장이 맡아, 외교, 군사, 군수산업에 대한 주요 결정에 관여했다. 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군정치행정(Main Political Administration of the Armed Forces)이 담당했다. 군의 명령체계와 횡적으로 일치하는 구조를 지니고 다양한 정치, 선전 지도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군관료는 대부분 당원이었다. 군 역시 소련의 일반적 당, 정관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264]

브레즈네프 집권을 시작으로 군부의 정치·경제적 이권이 확고하게 보장되기 시작했다. 전략 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지상군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주요 군인사가 정위원 자격으로 정치국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국민총생산의 최소 15%에서 약 30% 정도가 군예산으로 투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비 총액의 두 배 정도에 달하는 양이다. 군병력은 총 5백만(국내 보안 분야 종사 인력을 제외)에 달했다. 이 시기 전략 산업으로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군의 위상이 변하는 과정은 소련에서 일당독재가 공고히 하는 과정과 함께 했다. 집단지도체제로 작동하는 브레즈네프 시기 들어 군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정부의 외교 및 군사정책에

Stalin," in *Guns and Rubles: The Defense Industry in the Stalinist State*, ed. Mark Harris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pp. 50~77; Mark Harrison, "Soviet Industry and the Red Army Under Stalin: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Les Cahiers du Monde russe*, vol. 44 (2003), pp. 323~342.

264) Richard Sakwa, *Soviet Politics in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989), pp. 122~123.

큰 영향을 발휘했다. 소련이 제국의 야심을 키우고 무리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 선 세력이 바로 군이다. 아프리카에서 달성한 군사적 성공에 도취한 소련 군부는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과신하고 1979년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감행했다. 이기지 못하는 장기전이 지속되면서 군부의 권위 실추와 소련 정부의 심대한 재정적·정치적 위기가 초래되었다.[265]

마침내 일당독재를 타파하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 군부의 이해는 결정적 타격을 입는다.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여 소련 시민의 생활수준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총서기장의 계획은 급진적인 정치개혁과 군수산업의 축소로 이어졌다. 군부 엘리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군사쿠데타를 감행하여 소련 해체를 막고 공산당 일당독재를 복원하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쿠데타는 이미 폭발하기 시작한 엘리트의 이탈과 기회주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266]

라. 당 독재와 군산복합체의 영향력: 흐루시초프 사례

인사권의 집중과 집단적 의사결정의 제도화로 인해 당 독재는 지도자와 주요 엘리트 집단 사이에 정치적 긴장을 야기한다. 인사권과 제도개혁 등을 통해 지도자는 집권 이후 점차적으로 자신의 독재 권력을 확장해 간다. 개인독재권력이 강화되면서 주요 공산당 엘리트의 경제적 이해에 반해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역관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정책 변화를 소련 국방산업 정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

265) *Ibid.*, pp. 124~125.

266) Jerry Hough, *Democratization and Revolution in the USSR, 1985-1991*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pp. 449~489.

대표적인 예가 경공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닌 흐루시초프이다.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예산정책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군산복합체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포섭하면서 말렌코프와의 정치투쟁을 벌인다. 따라서 스탈린 사후 1955년까지 공산당 예산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1955년 말렌코프와의 일차적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예산배분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1955년 중공업에 대한 총지출이 3% 삭감되고, 1996년 국방비 역시 9.4% 삭감된다. 반당위기에서 승리한 1957년에 흐루시초프는 보다 과감한 개혁정책을 제안한다. 육류, 낙농 등 소비재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찬 정책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267]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정책 의지는 개인독재권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노골화된다. 반당위기의 승리 후 2년이 지난 1959년 그는 7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소비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급진적인 행정개혁과 예산변경을 시도한다. 중공업과 군수산업은 이 정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다음의 예는 소비재 중점 경제로의 개혁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1960년 11월 정치국 회의에서 코즐로프 정치국 위원은 "우리 모두는 철 생산이 조국의 경제력의 기본 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역설한다. 이는 총서기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이에 대해 흐루시초프는 경제력의 기본 지표는 시민들이 즐기고 먹는 생산물의 양에 있다고 받아치면서 아직도 몇몇 동지는 "철에 대한 식욕"을 줄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268]

---

267) Richard Sakwa, *Soviet Politics in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989), pp. 120~125.

268) Philip G. Roeder,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196~198.

하지만 총서기장의 급진적 지방분권화 개혁과 소비재 육성 산업이 엘리트 전체의 반감을 사면서 총서기장의 권력은 급속히 약해진다. 이를 반영하듯 1960년 말부터 1964년 흐루시초프의 실각까지 소련 정책은 정치적 역관계만큼이나 혼란스럽다.

특별히 흐루시초프의 국방산업정책과 그의 외교정책은 상당히 모순적이었다. 국방예산에 대한 삭감을 계속 주창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모험적 대결노선을 동시에 추진했다. 국방예산의 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의 반발로 인해 예산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1963년 2월 그는 한발 물러서서 생산재 산업과 국방산업을 위해 자신의 소비재 육성 하절기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소비재 중시 정책을 밀어붙였다. 1964년 재정계획 제안에서 국방 분야 예산이 4.2% 삭감되었다. 1964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생산재가 아닌 소비재 산업에 분명한 정책적 우선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다가오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우선 목표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며 이에 맞추어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의 고집은 결국 보다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269]

흐루시초프 시기 독재 권력의 변화와 정책 변화 사이의 연동에서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당 독재에서 지니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브레즈네프의 독재 권력은 전임자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었으며 당연히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해는 재정·행정적으로 보다 분명히 보장되었다.

269) *Ibid.*, pp. 198~201.

2. 소련 군수산업 정책과 발전

가. 소련 군수산업의 주요 발전과정

소련 군산복합체 발전과정에서 몇몇 주요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적인 소련 국방산업은 1930년대 모색기를 지나 2차 대전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냉전과 미소 군비경쟁을 거치면서 군산복합체가 소련 정치경제에서 핵심 행위자로 자리 잡는다.

스탈린은 권력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적 선호를 숨기고 소비재 산업을 통한 점진적 산업화를 주장하는 부하린의 편에 서서 트로츠키의 국가주도 급진적 중공업 정책을 반대한다. 최대 정적 트로츠키를 숙청하는 데 성공한 스탈린은 마지막으로 부하린을 숙청하고 중공업 우선정책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는 군수산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 소련 정부는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당해 기간 제1차와 제2차 「적군건설 5개년계획」을 동시에 시행했다.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당 정치국은 적군건설계획을 수립, 군을 현대화하고, 신형 무기개발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농민의 희생에 기초한 원시적 자본축적의 논리로 추출한 주요 전략자원을 군수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이러한 적군건설계획의 무자비한 수행의 결과, 소련군은 과거에 비교하여 보다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를 갖출 수 있었다. 국방산업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투자는 193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민 코미사리아트(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라는 국방을 총괄하는 공식 기구가 1936년 공식 출범하면서 국방산업은 전체 소련 경제의 주요 지위를 획득한다. 이

시기는 아직 직업군인들이 국방산업을 주도하는 형국이었다.[270]

1930년대 중반 소련 군사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전과 핀란드와의 전쟁에서 상당한 군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의 군사력이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핀란드와의 전쟁 실패는 뼈아팠다. 전쟁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소련 공산당은 군사분야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펼쳤다. 특히 군사 무기 및 군장비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수산업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소련 군수산업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상승했다.[271]

막대한 자본투자가 소련의 중공업 부문에 이루어지면서 군수산업은 여타 경제 분야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이에 비례하여 군수산업의 생산 지역이 크게 다양화되었다. 특별히 소련 지도부는 군수산업 기지로 동부지역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공중 폭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많은 수의 군수산업체가 포볼즈에(볼가), 우랄, 시베리아 등 동부지역으로 이전했다. 이 지역에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동시에 주요 군수산업 기지들을 유럽 쪽에 속하는 소련 북서부, 중부 및 남부 등 다양한 지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이 결과 당시 소련의 군수산업 투자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1938년부터 1941년 6월까지 군수산업에 대한 재정 공여는 국가 산업 전 부문자본 총액의 25%를 넘어섰다. 1939년의 경우 국민총생산이 16% 증가한 반면, 군수산업은 46.5% 성장하였다.[272]

한편 이 시기 소련 군수산업의 확장과 함께 군수산업 체계의 변화

---

270) Irina Bystora, *Russian Military-Industrial Complex*, pp. 1~12.

271) Mark Harrison, "Soviet Industry and the Red Army Under Stalin: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pp. 323~342.

272)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 1917-1991,"『외국군사사 연구; Ⅳ』(국방연구소, 1997), pp. 201~204.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39년 당중앙위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방위산업 인민위원회는 고도로 세분화되었다. 항공산업 인민위원회, 선박산업 인민위원회, 무기산업 인민위원회, 탄약산업 인민위원회 등 4개의 인민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군수산업을 기능별로 조직했다. 이는 소련계획경제의 일반적 경향과도 일치하는 변화이다. 군수산업 분야 역시 생산기능에 따라 조직화되고 세분화되었다.[273]

2차 대전 초반 후퇴를 거듭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략적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방지역의 군수지원 관련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소련 역사가들에 의하면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1942년 중반 이후 소련의 군수산업은 여타 경제 분야의 희생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군사기술 부문에서 이후 서서히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274] 여기서 우리는 특정 분야를 신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경제와 전체주의적 동원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군수산업의 투자와 발전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더욱 고도화된다. 사실 군사력 증강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하다.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양 진영 간의 연속적이고 점증적인 군사력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소련 군수산업은 발전하였다. 소비재 생산 증대를 선호했던 흐루시초프의 예외적 시기를 지나 브레즈네프에 들어서면서 군수산업은 더욱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소련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275]

1987년을 넘어서면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분명한 외교정책으

273) Mark Harrsion, "The Soviet Defense Industry Complex in World War Ⅱ," pp. 237~262.

274) 김정환, "소련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국방과 기술』, 제145권 3호 (1991), pp. 44~57.

275) Valerie Bunce, "The Political Economy of Brezhnev Era: The Rise and Fall of Corporatism," pp. 129~158.

로 자리 잡으면서 군수산업에 대한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미국과의 군비경쟁 대신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소련의 군수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린다. 군수산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군수산업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소련 말기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중공업에 대한 투자 역시 부분적 시장개혁으로 주요 경제적 자원이 훨씬 경제적 이윤을 발생시키는 시장경제로 대부분 흡수되면서 큰 타격을 입는다. 중공업은 기본 자재를 마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생산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었다.[276]

신사고 노선과 함께 제기된 정치개혁 노선은 보수적 공산당 엘리트의 미래를 흔들어 놓았는데, 그 중심에 군산복합체가 있었다.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대통령제로의 전환은 엘리트의 특권이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의 실질적 사용권과 수익권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구가하는 소련 엘리트의 미래가 갑작스럽게 불안해졌다. 그들의 특권을 지지하는 당 독재의 붕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최후의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277]

보수 엘리트의 반격과 자유주의 세력의 대결 속에서 군수산업의 전환 정책은 성공을 보지 못하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당, 정, 군에 포진한 다양한 군산복합체 정치세력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초기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 옐친과 각 지역 공화국 엘리트의 정치적 약진이 분명해 지면서 고르바초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의 궁극

276)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London: Collins, 1987), pp. 135~252.

277) Steven L. Solnick,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pp. 24~41; Kevin Murphy,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3 (1992), pp. 889~906.

적이 선택이 바로 3일 천하로 끝난 군사 쿠데타이다.[278]

나. 소련 군수산업 체제

소련 정부에서는 군수산업위원회가 군수산업 관련 조사, 설계, 개발, 시험, 생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군수품의 해외조달, 외국기술의 수입을 책임지고 관리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군수산업위원회의 책임 하에 항공공업부, 통신기계공업부, 국방공업부 등 중앙의 9개 경제부서가 소련 군수생산 활동을 직접 관리·감독하였다. 조립 특수건설사업부, 민간항공부 등을 포함하는 소련 군수공장의 수는 1980년대 130여 개에 이른다. 중앙의 군수산업관련 경제부서와 인적·제도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고스프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아카데미 등이 이 많은 군수공장의 활동을 계획 조정했다. 이 중 당연히 국가계획경제를 총괄하는 고스프랜이 핵심적이다.[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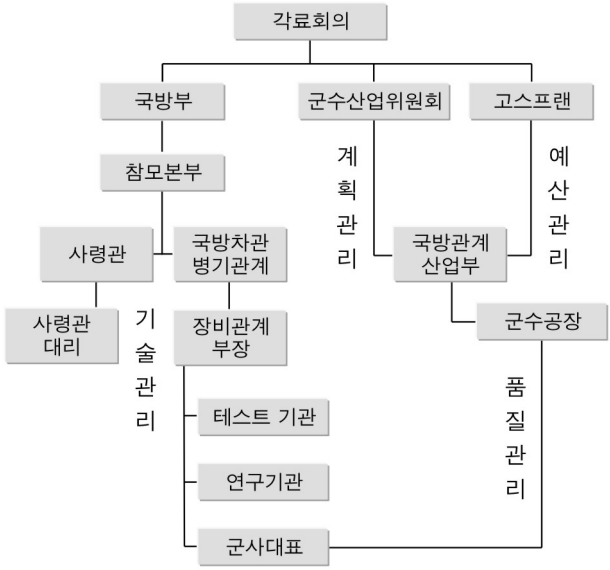
국방관련 산업생산에서 우리는 당, 정, 군의 밀접한 제도적 연결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경제운용의 최고 기관인 국가 계획위원회, 고스프랜의 지휘 하에 소련 경제의 핵심 자원이 군수산업에 투여되었다. 그리고 소비에트 국방 협의체(Soviet Defense Council)는 주요 무기 체계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소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직접 연결된 비서실 국방산업부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총서기장이 직접 관리하는 비서실의 국방 산업부의 지도와 함께 정부 내에서 명목상 최고 행정부 기관인 각료 평의회(Council of Ministries)의 부의장이 군수산업위

278) Jerry Hough, *Democratization and Revolution in the USSR, 1985-199*, pp. 450~455.

279) 김용환, "러시아 군수산업체제의 구조와 기능," 『과학기술정책』, 제81권 12호 (1995), pp. 9~12.

원회(Military Industrial Commission)를 주도했다. 1970년대 당시 브레즈네프의 협의적 의사결정 제도화에 힘입어 군수산업위원회는 소련 계획경제에서 수직적으로 분리된 각종 경제부처를 수평적으로 조율하면서 각 부로부터 군수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관료적 합의를 통해 동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 생산 부서만으로 군수산업에 필요한 중간재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국가생산 기구와 조직을 직접 동원하여 군수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280]

〈그림 Ⅳ-4〉 소련 군수산업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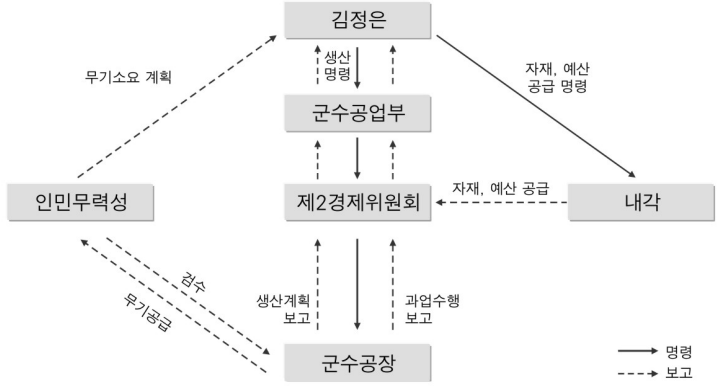


출처: 김용환, "러시아 군수산업체제의 구조와 기능," 『과학기술정책』, 제81권 12호 (1995), p. 12.

위의 그림과 함께 앞 장에서 소개된 개인독재체제인 북한의 군수산업 조직도를 살펴보자.

280) Ed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s. Efficiency*, pp. 218~220.

〈그림 Ⅲ-4〉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 핵심 구조와 작동



출처: 필자 작성.

이 두 그림에서 우리는 소련과 북한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소련의 군수산업을 지휘하고 있는 각료회의, 군수산업위원회와 이들 기구를 궁극적으로 감독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당중앙상임위원회는 주요 엘리트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앞서 우리가 분석하고 있듯이 수령의 직할 통치를 받는 제2경제위원회가 민간경제 부문과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자체 완결적으로 군수산업을 총괄한다. 소련과 북한의 군수산업의 핵심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의 원인과 함의는 본 장의 마지막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소련 군수산업에 대한 평가 및 북한과의 비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소련 정부는 민간경제보다 군수산업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경공업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둔 흐루시초프가 예외적이다. 군수산업은 계획경제의 위력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분야이기도 하다.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경제는 군수산업 발전에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최고의 인적·물적 자원이 군사부문으로 투입되면서 비군사부문의 질적 발전은 크게 방해받는다.

이 결과 소련은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신무기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컬러텔레비전을 만들지 못해 브라운관이 종종 터져 시청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생산품의 질을 무시하고 양에 집중하는 생산방식을 고집한 소비재 기술의 낙후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소련의 군사과학기술은 계획경제가 유일하게 성공한 분야이다.[281]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고르바초프 집권 말기 소련 중앙 정치의 혼란은 소련에서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이해와 힘을 증명하고 있다. 스탈린 사후 복원된 당 독재의 작동원리상, 총서기장이 공산당 엘리트를 무시할 경우 정치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흐루시초프는 경공업 우선정책과 지방분권화 정책을 통해 중앙의 군산복합체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 당 독재는 보수적 군산복합체에 반격할 힘을 부여했다. 7년 전 흐루시초프의 손을 들어준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64년 압도적 찬성으로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었다.[282]

---

281) Robert Tucker, *Political Culture and Leadership in Soviet Russia* (London: Norton and Company, 1987), pp. 108~139.

282) Jerry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pp. 230~239.

고르바초프의 공격은 더욱 과감했다. 신사고 노선에 입각해 미국과의 군축에 합의하면서 군수산업을 소비재 생산 기업으로 전화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힘의 기초인 당 독재의 기초를 허물어 버렸다. 공화국 차원에서 경쟁적 선거를 도입하여 주요 구성 공화국에서 비공산당 후보자가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고르바초프 자신은 신설된 소련 대통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을 폐기했다.[283] 초기 총서기장이라는 권위에 눌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군산복합체는 3일 천하로 끝난 쿠데타라는 최후의 일격을 날려 고르바초프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몰락했다.[284]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영향력은 총서기장의 정책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브레즈네프 총서기장은 흐루시초프를 몰아낸 이후 경쟁자와 권좌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중립적 정책을 지지했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중위자의 선호를 표방하는 정치인을 닮았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사이의 중간 정도에서 자신의 정책을 설정하여 엘리트 다수의 지지를 모색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정치권력을 공고히 한 다음에는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반영하여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국가자원을 집중하

283) 중국의 당 독재를 소련과 비교한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당의 제도화 정도가 떨어진 중국에서 덩샤오핑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었다고 평가한다. 덩샤오핑은 일당독재를 폐기하기 보다는 당중앙위원회의구성원을 확장시켜 개혁세력의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Susan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07~115.

284) 소련의 급진적 개혁 노선은 중국의 선택과 자주 대비된다.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시장개혁이 가능했던 중국의 경우 지배자는 개혁이 발생시키는 정치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지방당 서기장의 경제적 권한이 강한 분권적 계획경제 구조 역시 점진적 부분적 개혁을 가능케 했다. G. Roland, "The Role of Political Constraints in Transition Strategies," *Economics of Transition*, vol. 2, no. 1 (1994), pp. 27~41.

면서 소비재 및 농업생산을 소홀히 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285]

결론적으로 소련 군산복합체는 냉전이라는 대외적 상황, 공산주의의 생산력 및 생산수단 발전 우선 이데올로기, 총서기장과 당 엘리트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당 독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이러한 소련의 경험을 북한과 대비할 때 우리는 유사점과 함께 아주 중요한 차이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경제 구조가 유사하다. 생산 분야별 중앙경제부처를 따로 둘 정도로 집중화된 소련과 지방당 서기장의 경제적 자율성이 높은 중국은 계획경제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중국 대신 소련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북한의 기본 경제구조가 매우 중앙 집중적인 속성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은 계획경제를 운용한 역사적 경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소련에서는 중앙집중형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급진적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흐루시초프의 개혁이다. 지방당 엘리트의 도움으로 총서기장에 올라선 흐루시초프는 지방경제협의체(sovnarkhoz)를 창설하여 중앙정부에 대비해서 지방 공산당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했다. 탈집중화를 통해 지역의 단위 공장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중앙 경제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중당부처의 책임과 권한 대신 지방당 서기장의 책임을 높여주었다. 이는 중국의 계획경제 제도와 유사한 전개이다. 지방당 서기장이 지역경제를 수평적으로 조율함으로써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1962년 흐루시초프는 치명적인 정치적 실수를 저지른다. 탈집중화가 자신이 의도했던 경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그는 보다 급진적인 탈집중화 정책을 추진한

285) Philip G. Roeder,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p. 144~153.

다. 1962년 지방당 조직을 이분화하는 결정을 통해 지방당 서기장의 정치적 권위를 심각히 약화시켰다. 사실 이는 총서기장이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전통적 지방당 엘리트의 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엘리트를 충원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 마침내 1962년 중앙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방당 조직을 농업과 산업분야로 이원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원화된 조직 내에서 공산당원 각자는 어디에 속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기존 세력을 정책적으로 압박하고 동시에 확대된 지방조직으로 많은 수가 새롭게 지방당 조직의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286] 그의 이러한 지방당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조치는 결국 그의 실각으로 이어지면서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가 다시 복원되었다.

북한에는 위와 같은 급진적인 경제의 분권화 개혁은 없었다. 중국보다 소련에 훨씬 가까운 계획경제 시스템을 가진 북한이지만 이를 운용하는 능력 면에서 소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사실 계획경제의 효과적인 운용은 정보 취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근본적으로 계획경제는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와 별도로 북한은 불완전한 계획경제마저 효과적으로 운용할 정부 능력이 크게 모자랐다. 수차례에 걸친 북한경제 개혁은 운용능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대안의 사업체계 등으로 생산 분야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중간재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축소하는 조치는 없었다.[287]

---

286) *Ibid.*, pp. 170~172; George Breslauer, *Khrushchev and Brezhnev as Leaders: Building Authority in Soviet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2), pp. 61~80.

287) Byung-Yeon Kim,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41~70.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 하에서 소비재 산업과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된 군수산업의 고도화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작동 양상에서는 분명한 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소련과 북한 정치질서의 차이에서 핵심적으로 기인한다. 경제학자는 이를 정치질서의 집중화 정도라는 양적 차이로 묘사하는데[288] 보다 미시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소련과 북한 정치질서의 질적 차이를 인지하기 위해 우리는 당 독재와 개인 독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정치질서의 핵심 차이는 바로 당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지배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능력이 있는가에 있다. 마키아벨리는 독재정권에서 독재자와 엘리트의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엘리트가 가신인 경우와 귀족인 경우이다. 가신과 귀족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배자로부터의 독립성 정도에 있다. 가신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운명을 전적으로 지배자의 개인적 호의에 의탁한다. 지배자의 호의를 잃는 순간 모든 특권과 지위를 상실한다. 반대로 귀족은 전통의 힘으로 확립된 자신의 정치·경제적으로 독자적인 기반을 지니고 있다.[289]

소련 엘리트는 스탈린 사후 귀족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이는 당 독재의 정착과 함께 이루어졌다.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소련 정치는 개인 독재에서 당 독재로 분명히 전환했다. 흐루시초프가 총서기장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개인우상화 금지와 당 독재에 대한 분명한 공유지식이 발생했다. 공산당의 주요 결정, 총서기장의 선출과 신임을 포함한 핵심 정치적 결정은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는다는 공동의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 결과 소련 공산당 엘리트는 지배자의 자

288) *Ibid.*, pp. 88~90.

289)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8 [1513]), Translated by Harvey C. Mansfield, pp. 16~19.

의적 권력행사로부터 자신의 물리적 안전과 함께 정치적 지위를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290]

당 독재와 개인 독재의 차이가 일시적이지 않고 고정적인 성격임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게임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291] 이를 통해 두 정치질서는 질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표 Ⅳ-2〉 소련 당 독재와 북한 개인 독재의 조정게임

행위자 B

행위자 A	도전	순응
도전	5,5*(소련 당 독재)	0,4
순응	4,0	2,2*(북한 개인 독재)

출처: 필자 작성.

위의 게임은 독재정치에서 엘리트의 조정게임이다. 조정게임은 다수의 선택에 자신을 선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정의 이해가 작동하는 게임이다. 위의 게임에는 내쉬 균형점이 두 개 있다. 내쉬

290) 집단적 의사결정제도가 엘리트의 조정과 권력제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 Douglass North and Barry Weingast,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9, no. 4 (1989)를 참조.

291) 조정게임으로 정치권력의 속성을 파헤친 연구로 한병진·임석준,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를 참조.

균형이란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5,5)와 (2,2)가 게임의 균형점이다. 분명 (5,5)의 균형점이 (2,2)의 균형점을 압도한다. 하지만 조정의 딜레마로 인해 (2,2)에서 (5,5)로 쉽게 이동하지 못한다. 만약 (2,2)에서 누군가 단독으로 선택을 변경할 경우 그의 보상은 2에서 0으로 낮아진다.[292] 다른 행위자도 함께 도전을 선택한다는 공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상대의 공고한 믿음, 즉 공유지식이 강할 때 순응이 아닌 도전이 행위자의 선택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행위자는 열등한 균형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위의 표가 묘사하는 엘리트 사이의 상호작용에 반대하는 논의를 살펴보자. 엘리트 사이의 협력과 갈등은 조정이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를 닮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엘리트 대부분은 몇몇 동료와 협력하여 독재자에 대항하는 대신 동료와의 약속을 배신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출세를 꾀하려 한다. 사실상 이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음모와 반역의 어려움으로 거론한 부분이다. 반역을 공모하는 자들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대신 배신을 통해 군주의 호의를 구하기에 반역을 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293] 분명히 군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초기 단계에서는 배신의 유혹이 강하다. 위의 게임 표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2,2)에서 한 쪽이 독재자를 반대하고 자신은 충성할 경우 그의 보상 값은 2에서 4로 증가한다.[294] 충분한 수의 엘리트가 독재자에 도전한다고 믿지 못할 경우 다른 엘리트의 희생으로 자신의 출세를 도모한다.

---

292) Roger Myerson, "Learning from Schelling's Strategy of Conflict," (Unpublished Manuscript, 2009), pp. 3~13.

293)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pp. 71~82.

294) 이는 최소승리연합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William H. Riker,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 pp. 34~37.

그렇지만 독재자에 대한 다수의 도전이 모두에게 분명하다면 모든 엘리트는 배신하기 보다는 협력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개인 독재질서에서 불안한 영달보다는 협력을 통해 집단지도체제에서 안정적 지위를 오랫동안 확보하는 편이 낫다. 앞의 표는 이러한 선호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개인 독재에서 고위직 인사들이 주기적으로 숙청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선호도 구성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당 독재와 개인 독재의 차이에 대한 위의 논의는 소련 군산복합체의 행태에 대한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소련 군수산업 연구 전문가는 스탈린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의미의 군산복합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군산복합체는 스탈린 사후 소련 정치에 적용될 만하다고 평가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군사부문과 중공업부문이 스탈린의 독재로 인해 죄수의 딜레마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중공업부문과 군수산업부문이 주요 경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군수부문 경제가 매우 중요한 북한에서도 군산복합체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295]

엘리트의 이해에서 당 독재 균형이 개인 독재 균형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는 권력분담에 있다. 당 독재와 개인 독재는 권력분담의 정도에서 확연히 다르다. 당 독재의 경우 지배자와 엘리트 사이에 권력분담이 작동하지만 개인 독재에서는 어떠한 권력분담도 작동하지 않는다. 권력분담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배자는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당 독재는 개인 독재에서 출세

295) Mark Harrison, "Soviet Industry and the Red Army Under Stalin: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pp. 323~342.

하는 엘리트의 불안한 삶보다 낫다. 권력분담은 주요한 정치적 결정은 당의 집단적 의사결정 제도를 거쳐야 한다고 모두가 믿고 있다는 모두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엘리트는 지배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집단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지배자는 사전적으로 자신의 권력남용을 제어한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엘리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당 독재와 개인 독재의 질적 차이로 인해 군수산업을 수행하는 행정조직과 방식에서 소련과 북한의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소련의 당정에 설치된 군수산업관련 협의체는 말 그대로 관료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생산 분야별로 독립적인 경제부처가 있을 정도로 집중화되고 세분화된 소련 계획경제 구조는 경제활동을 조율하는 데 있어 커다란 약점을 보인다. 특별히 경제 부문별 자급자족 경제(departmental autarky)로 인해 중간재 공급과 수요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다.[296] 이로 인해 수평적 조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상해보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몇천 개에 달할 것이다. 만약 자동차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자 하면 자동차 생산에 부품을 제공하고 이 공장에 다시 부품을 공급하는 엄청난 수의 공장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계획 자체도 어렵지만 수평적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개혁과 혁신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소련의 군수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소련 정부의 시도이며 여기서는 총서기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기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수평적 조정을 달성했다.

---

296) Ed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s. Efficiency*, pp. 176~285.

북한에는 엘리트의 조정기구인 소련 군수산업위원회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2경제위원회가 있다. 이는 계획경제의 계획을 무시·압도하는 수령경제와 현지시찰과 일맥상통한다.[297] 수령의 직할 기구인 제2경제위원회를 매개로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통제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북한 군수산업은 작동한다.[298] 이는 북한의 공산정치질서가 수령의 직할통치로 엘리트와의 권력분담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계획경제 운영에서 제2경제위원회가 내각의 민간경제 계획부서를 압도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의 원천은 북한의 절대적 개인 독재에서 연유한다. 이로부터 북한이 군수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떠한 관료적 이해관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련과 북한의 차이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함의를 얻을 수 있는가? 군산복합체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고한 당 독재에서 군수산업 정책의 현상유지 편향이 강하다.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군축은 고르바초프의 위험한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했다. 이는 당 독재의 수정과 연결된다. 군수산업을 축소하고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위해 당 독재를 흔들 필요가 있었다. 소련에서 경제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당 독재에서 주요 이익집단인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99]

다음 그래프는 지배자의 개인독재권력 정도와 정책의 변동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자의 가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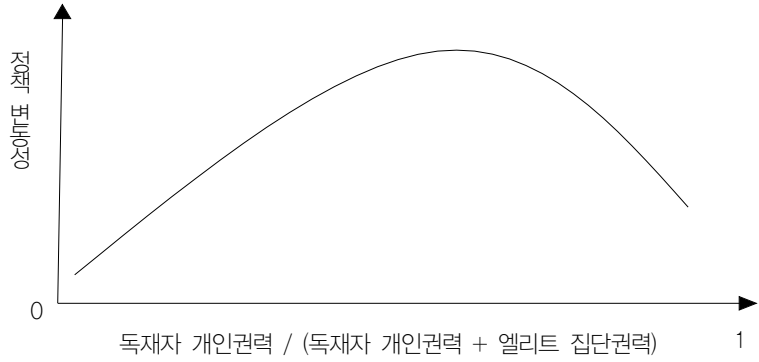
---

297) Byung-Yeon Kim,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pp. 88~90; 정상화, "북한비공식경제의 활성화가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보연구』, 제5권 2호 (2013), pp. 95~114.

298)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pp. 68~86.

299) Philip G. Roeder,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p. 210~245.

〈그림 Ⅳ-5〉 독재 권력과 정책 변동성의 관계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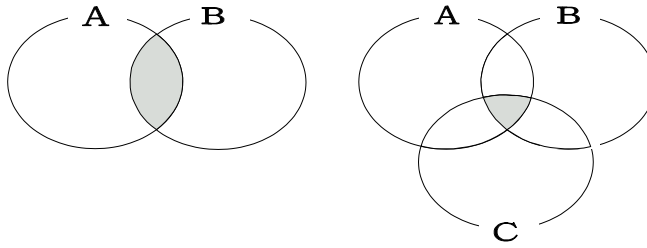
정책 변동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바로 불안정한 당 독재이다. 정책 불안정성의 정치적 원인은 바로 당을 중심으로 뭉친 보수적 엘리트와 개혁적인 지배자의 갈등으로 정책인 좌우를 순식간에 넘나드는 경우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붕괴 직전 소련의 개혁정책이다. 군비축소를 비롯해 과감한 개혁정책은 당 엘리트의 반발로 이어진다. 하지만 당 엘리트의 정치적 힘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민주개혁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치 엘리트가 공화국 단위의 선거를 통해 등장했다. 이 결과 1990년 한 해 동안 몇 달을 주기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좌와 우를 넘나드는 위험한 행보를 보였다.[300]

공고한 당 독재의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어렵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공산독재가 안정적이 되면서 의사결정 기구 내에서는 다수의 파벌 그룹이 발생한다. 이는 다수의 거부권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거부권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책은 변경이 어려워진다. 그

300) *Ibid.*

리고 변경 가능한 정책 공간 역시 협소해진다. 이를 밴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부권자가 A, B 둘인 경우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다. 그런데 거부권자 C가 더해지면 정책 변경이 가능한 공간은 더욱 협소해지면서 현상변경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림 Ⅳ-6〉 거부권자와 현상유지편향[301]



$(A \cap B) \geq (A \cap B \cap C)$

개인 독재의 경우 지배자 개인의 선호변경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 지배자의 개인독재권력이 막강한 까닭에 정책 변경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 지배자의 개인독재권력이 어중간한 불안정한 당 독재와 달리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된다.

당 독재와 개인 독재가 보이는 정책변동성에 대한 우리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이는 북한의 군수산업의 장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공산당 내에 자리 잡은 거부권자로서의 군산복합체가 없는 북한에서 군수산업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이 변하면 이는 바로 일

301) 이 밴다이어그램은 위의 거부권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George Tsebelis, *Veto Playe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의 논의에 기초하여 간략히 그린 그림이다.

관된 정책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소련에서 발생한 보수적 당 엘리트의 반발로 인한 정책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책변화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단 지배자의 선호가 일관된다는 전제에서만 타당하다.

V

군사경제 비대화의 영향과 군수산업 실태

박용한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오경섭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군사경제 비대화의 경제적 영향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통한 군사경제로의 자원집중이 인민경제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생각은 이미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있었다. 전쟁 후 북한은 노동력이 부족했지만 국방부문에 인력을 상당히 많이 배치하면서 노동력 부족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국방부문에 인적자원 배분을 늘려 일반경제부문과 경쟁관계가 되었다.[302] 군수분야 치중은 중공업 우선정책을 지속하게 한다. 중공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국방공업에 한정된 투자 재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경공업 중심의 소비재부문 자원은 줄어들게 된다. 이미 1960년대 경제국방병진노선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군사경제 비대화는 민수부문의 성장을 저해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한 군사경제 비대화가 경제건설에 어려움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북한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국방·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실행했다. 국방력 강화는 인민경제의 희생을 요구했다. 김일성은 "인민경제부문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모든 힘을 다하여 국방건설을 지원하는것"이고, "금속공장과 기계공장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국방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먼저 잘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303] 그러나 김일성은 1960년대부터 군수산업과 민수생산의 동시발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

302) 전후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다음을 참조.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303) 김일성,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8년 5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82.

물론 병기생산에 쓸 강재를 민수 생산에 돌린다면 그만큼 뜨락또르나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뜨락또르와 기계를 많이 생산해놓아도 적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써먹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해동안 힘을 넣어 적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방위력을 강화해놓아야 마음놓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304]

북한은 7개년경제발전계획 수행을 3년 동안 연기했다.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해 경제 건설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 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 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 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 인민 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하였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305]

군사경제는 민수부문으로 자원배분을 줄임으로써 인민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원배분 측면에서 군수부문과 민수부문은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례를 보더라도 상대적인 자원배분 편중 현상은 군수부문에 에너지를 우선 공급하는데서 나타난다. 전력 사정이 곤란하지만 군수공장에는 차질 없이 전력을 공급했다.[306]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서 경제총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304) 김일성,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병기공업부문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61년 5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36.

30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 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56~257.

군사비 지출이 늘었다면 민수부문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국방공업 우선 발전정책으로 궁정경제(당경제+군사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민수경제(인민경제)는 극도로 축소됐다. 1980년대 말을 기준으로 볼 때 민수경제 규모는 1990년대 말에 축소됐으나 특권경제는 규모가 증가했다.[307]

북한은 1990년대에도 군수산업 중심의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구조를 고수했다. 군수산업 우선정책은 비탄력적·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잠식했다.[308] 정유진은 군사경제 비대화로 인해 북한경제가 파탄했다고 지적한다. 군수산업 우선투자는 민수부문의 마비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 중공업 우선정책의 실패는 우선 투자한 중공업이 비생산적인 군수공업에 전용됨으로써 다른 경제부문의 마비를 불러왔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유독 군수공업만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309]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했다. 1989년 이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되고 체제 전환이 진행되면서 우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됐다. 북한은 시장과 연료공급지를 잃었고, 대외교역에서 경화결제가 시작되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 이러한 대외무역 환경의 악화는 북한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공장가동률이 20%~30% 수준으로 하락했다.[310] GDP를 기준으로 1987년에는 전

306) 군수공장에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은 수력발전소에서 24시간 전력을 공급해줬다고 증언했다.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8.7.25, 통일연구원).

307) 궁정경제는 특권경제, 민수경제 내각 경제로 표현됐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궁정경제와 민수경제로 치환했다. 김병욱, "선군경제운영과 민수산업 군수화," 『북한경제리뷰』, 6월호 (2011), p. 96.

308) 신용도·이상목·조성일, 『북한경제체제전환 분석』 (서울: 소화, 2002), pp. 215~218.

309)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90.

년대비 3.3%, 1988년에는 3.0%, 1989년의 2.4% 성장을 마지막으로 1990년부터 성장률 하락세로 돌아섰다.[311]

〈표 V-1〉 북한 경제성장과 국방예산 증가 비교

단위: 북한 원, 십억

	경제성장률	국방예산 증가율	국방예산
1990년	-0.37%	0%	1.99
1991년	-5.1%	0%	n/a
1992년	-7.7%	5%	2.1
1993년	-4.2%	2%	2.15
1994년	-1.8%	-10%	1.96
1995년	-4.6%	0%	n/a
1996년	-6.5%	0%	n/a
1997년	-6.5%	0%	n/a
1998년	-0.9%	-47%	1.33
1999년	6.1%	1%	1.35
2000년	0.4%	1%	1.37
2001년	3.8%	30%	1.41
2002년	1.2%	n/a	n/a
2003년	1.8%	n/a	n/a
2004년	2.1%	n/a	0.39
2005년	3.8%	15%	0.46
2006년	-1%	4%	0.48
2007년	-1.2%	6%	0.51
2008년	3.1%	7%	0.55
2009년	-0.9%	4%	0.57
2010년	-0.5%	30%	0.82
2011년	0.8%	11%	0.92
2012년	1.3%	6%	0.98
2013년	1.1%	9%	1.08
2014년	1%	4%	1.13
2015년	-1.1%	-4%	1.09
2016년	3.9%	6%	1.16
2017년	-3.5%	5%	1.22

출처: 한국은행,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http://www.bok.or.kr), 『조선중앙통신』.

310) 이영훈,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새인식-북한의 경제』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 115~116.

311) 한국은행,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http://www.bok.or.kr〉 (검색일: 2018.10.1.).

경제성장 둔화 효과는 국방예산 축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표군사비를 기준으로 볼 때 1980년에는 14.6%이었지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에는 12%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된 1992년에는 11.4%수준으로 감소했고, 1994년까지 감소추세가 지속됐다. 국방예산은 1995년 14.6%를 기록한 후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3년 이후에는 15.7% 이상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312]

〈표 Ⅴ-1〉은 경제성장률(GNI)과 국방예산(재정대비 국방비 비율)의 성장률을 비교했다.[313] 1990년대에는 경제 및 국방예산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고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화된 경향성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추세와 국방비 증가 추세가 유사하게 비교된다. 축소된 국가부문의 예산은 국방비의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무기체계에 나타난 군사력 증강, 전략무기 개발 동향을 보면 경제성장은 정체 수준인데 비해 군사력과 군사비 지출은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의 분석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경제난의 위기가 있었지만 군사비 지출규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여전히 북한의 군사비는 공표군사비와 실질 군사비 지출규모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현재 제2경제위원회 고용 인력은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생산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북한의 GNI 규모는 한국과 비교하면 1/32 수준이지만 군수산업은 1/6 수준으로 과대한 군수산업 분야 비중을 지속하고 있다. 유사시 생산

312) 한국은행,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313) 국방예산과 국방예산 증가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북한 재정 규모와 북한에서 발표한 군사비 예산 비율을 적용한 결과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인용했다. 한국은행 통계는 다음을 참조.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 (검색일: 2018.8.1.).

규모는 현재 보다 4배 이상 확장 가능한 수준이다.[314] 북한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며 인민경제에 부담을 준다.

2. 군사경제 지속가능성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군사경제의 활로를 비공식적·불법적 경제활동에서 찾는다. 군수산업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부품·전력·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수입·공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외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부족한 외화를 확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벌였다.[315] 불법적 경제활동은 무기수출, 마약, 위조담배, 위조약품, 위조화폐, 보험사기, 사이버해킹 등이다.[316]

마약거래는 심각하다. 북한은 1976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마약거래에 연루된 외교관과 공무원들이 체포됐다. 또 1999년에는 일본에서 압수된 필로폰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북한산이었다.[317]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서 공개한 보고

---

314) 탁성한, "북한 군수산업의 능력과 전망," p. 6.

315) 북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영역은 국가차원의 정보 공개가 유일한 단서로서 언론 및 일부 정부기관의 발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과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며 학술적인 연구보고서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 진척은 매우 부족하지만 외화수급 추정에 관한 접근은 장형수(2009),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현황은 전경주(2010)의 연구가 참조될 수 있다.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2009); 전경주, "북한의 불법 경제활동,"『주간국방논단』, 제1322호 (2010.8.23.).

316) Raphael Perl, Dick K. Nanto,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February, 2007), p. 1.

317) *Ibid.*, p. 4.

서 등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경제활동은 노동당의 중앙부서가 주도하고 내각 산하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18] 또한 정권기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다.

미사일 수출은 북한의 주된 외화 확보 수단이었다.[319] 북한은 이란·이라크·시리아·파키스탄 등을 비롯한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판매해서 상당한 외화를 벌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엔 대북제재와 기술력의 평준화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제약됐다. 북한은 이란·파키스탄과 포괄적인 군사기술 협력을 통한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북한에 핵 기술과 고체추진연료 기술들을 지원했고 북한은 액체추진연료 기술을 지원했다.

최근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해킹으로 눈을 돌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사이버 전사 현황' 자료에서 정찰총국이 출범했던 2009년 2월부터 북한 사이버테러 능력이 크게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주도한 해킹은 은행·방송사 등 19건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해외은행 해킹을 통해서 돈을 빼내고 있다. 북한 해킹조직 'APT38'은 미국을 비롯해 총 11개국에서 16개 은행을 해킹했다. 해킹으로 인출을 시도한 금액은 11억 달러다.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를 감염시켜 8천 100만 달러를 빼냈다. 2017년에는 대만 원동국제상업은행을 해킹해 6천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 코스모스 은행을 해킹해 1천 350만 달러를 가로챘다. 가상화폐가 확산

318)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을 참조. Raphael Perl, Dick K. Nanto,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February, 2007); 이대영·김인호, "국가안전보위부의 활동과 정치범수용소 실태 및 현황-보위부, 위폐 발행·유통, 문제되면 업무상 필요," 『통일한국』, 제26권 8호 (2008).

319) Dick K. Nanto, Emma Chanlett-Avery, *North Korea: Economic Leverage and Policy Analysis*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2010), pp. 48~49.

되는 추세도 반영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도 증가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약 3만 명 회원 정보를 해킹했다. 또 다른 거래소에서는 전자지갑을 해킹해 비트코인 55억 원을 탈취했다.[320] 사이버해킹은 '121부대'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에서 수행하며 중국 접경도시와 북한 지역에 광케이블을 연결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321] 이를 통해 북한 군대가 개입해 군사경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군사경제의 재원조달에 기여했다. 무기 수출 등 불법 경제활동은 제2경제위원회와 군부의 무역회사가 주도했다. 불법 경제활동에 군부 기관이 개입한 정황은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322] 제2경제위원회와 군부가 벌어들인 외화는 제2경제위원회에 투입됐고,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북한 당국이 흡수해서 일정 부분을 제2경제에 할당했다. 북한의 군사경제 운용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 제2경제위원회 등 군수생산 조직에 투입한다. 북한이 불법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궁정경제에서 흡수한 후 군수산업 등 군사경제에 사용한다.

최근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불법적 외화 획득을 어렵게 함으로써 군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합법적·불법적 외화획득을 제약한다. 유엔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북중 무역액이 크게 감소했다. 북중무역은 2000년 약 4억 9천만

320) ""北사이버테러 최근 5년간 19건"…은행·가상화폐거래소 표적," 『연합뉴스』, 2018.1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5/0200000000AKR20181005166300004.HTML?input=1195m〉 (검색일: 2018.10.9.).

321) 박용한·부형욱, "북한의 3.20 사이버 공격과 안보적 함의," 『2013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2013) 〈http://www1.kida.re.kr/nasa/report/detail.asp?idx=1034&cate=14&cyear=0&params=cate=14^page=3〉 (검색일: 2018.10.01.).

322)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달러에서 2013년 약 65억 5천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북중무역은 2016년 60억 5천만 달러에서 2017년 52억 5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2018년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323]

그중에서도 군부가 주도하는 석탄·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다. 군부가 주도했던 석탄·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이 유엔 대북제재에 막히면서 군사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수출에서 제2경제위원회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북중 전체 무역량에서 중앙당과 제2경제위원회 1급 무역회사들이 70%를 담당하고, 인민무력부·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내각 산하 2급 무역회사들이 20%를 담당한다.[324]

북한의 무기수출도 감소했다. 2000년대 북한의 9년간 무기거래를 통한 외화수지는 7.1억 달러였고,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은 10.1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러한 활동을 제외한 정상적인 교역으로 9.7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익을 포함한다면 외화수급 누적 흑자는 9년간 총 20억 달러 수준에 해당한다.[325] 이는 불법적인 수익이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326] 연간 수익 규모는 최소 2억,

---

323) KOTRA, 『2017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서울: KOTRA, 2018), p. 14.

324) 이장훈, "북한 조종하는 중국의 덫 밀수와 관광," 『주간조선』 2521호, 2018.8.2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21100012 8&ctcd=C03〉 (검색일: 2018.9.11.).

325)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pp. 38~39.

326) 해당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불법적 수익 규모에 대한 다양한 추정이 언급되어 있으나 북한의 무역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제약, 무기거래와 불법적 교역이라는 특성상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해 그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한계가 내포되어 있음이 당연하다. 다만 그 규모에 대한 출처가 재인용되고 있으며 최초의 출처도 대부분 정보 기관이 밝힌 비공식적인 추정 및 무명의 정부관리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불법 수익 규모를 5억~10억 달러로 추산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Raphael Perl, Dick K. Nanto,

최대 10억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무기거래 수익은 군사경제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정부는 북한 연간 군사비 지출 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밝혔다. 이와 비교하면 무기판매와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북한 외화 수익을 궁정경제로 투입하고 이를 모두 군사비로 할당할 경우 2%~10% 정도를 기여한다. 2010년 25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무기 수출이 군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해당하는 것인데, 최근 무기 수출은 2010년 25억 달러에서 2012년 1억~2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327]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 군사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발효된 이후 대북제재 압박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2270호는 'catch all'조항에 따라 재래식무기 수출을 통제한다. 미사일 뿐 아니라 소총과 기관총 등 무기 수출 감소도 크게 줄었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 검색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검색 수준이 낮았지만 북한 감시망이 강화됐다. 2270호에 따라 북한에서 출발한 선박 검색이 의무화되면서 무기 수출이 어려워졌다. 다만 이런 조치들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데 성패가 결정된다. 특히 화물검색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3월과 4월에 북한 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40여 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외화 소득도 막았다. 무기 수출 금지는 북한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북한 국방공업 가동률 저하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국내수요는 유지된다는 전망이다.[328]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p. 2.

327) 탁성한, "북한 군수산업의 능력과 전망," p. 11.

328) 조남훈,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북한경제리뷰』, 7월호 (2016), pp. 55~56.

대북제재는 수익 활동 제약 뿐 아니라 기술 획득도 어렵게 한다. 군사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본을 주요한 기술 획득 원천으로 활용했으나 일본의 대북제재로 기반을 상실했다. 광학 및 첨단 전자장비 등 군사용으로 사용할 장비 공급이 끊어졌다. 일본과 조총련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도 어려워 그 타격은 심각하다.[32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정권의 군사경제 운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성이 높다.

3. 군수산업 현황과 실태

이 연구는 고청송 수기,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국내외 언론보도, 북한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해서 군수산업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 연구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102개의 군수공장을 확인했다. 이중 52개는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했다.

군수산업은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들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각종 재래식무기를 생산한다. 제2경제위원회는 〈표 Ⅴ-2〉와 같이 산하에 7개 총국을 두고, 총국별로 전문 무기생산 분야를 정해서 군수공장을 운영한다. 각 총국별 전문 무기생산 분야는 정유진의 논문과 고청송의 수기에서 다르게 분류한다. 대체로 제2경제위원회 7개 총국별 전문 무기생산 분야는 탈북하기 전에 제2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정유진의 분류를 따른다. 이 연구도 국내외 연구자들과 같이 정유진의 분류를

329) 1998년 격침된 반잠수정 장비품은 85종 762점이었는데, 그중 일본제는 18종 70점으로 전체대비 21%를 차지했다. 대북제재에 따른 기술적 제약은 다음을 참조.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경제적 영향분석 및 전망," pp. 34~35.

따른다.

〈표 Ⅴ-2〉 제2경제위원회 총국별 전문 무기생산 분야

구성	정유진의 분류	고청송의 분류
제1총국	개인화기·경량무기	개인화기(소총·자동총·고사총·곡사포·기관포)
제2총국	기계화장비	포탄·로켓탄·미사일·폭탄·기뢰·어뢰
제3총국	포무기	각종 전투함정·잠수함
제4총국	각종 미사일	기계화무기
제5총국	화학무기·반화학장비	전자장비·통신장비
제6총국	각종 전투함정·잠수함	생화학무기·반화학장비
제7총국	통신장비·항공기	각종 미사일
제8총국	없음	유색금속·철강철

출처: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p. 99~104;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24~69.

북한 군수공장 실태는 1997년 발표된 정유진의 논문을 기초로 한다. 그 후 국내외에서는 북한 군수공장 현황과 실태에 대한 많은 정보가 생산됐다. 군수공장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었고, 북한 군수공장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가 증가했다. 북한은 김정일·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군수공장 현황과 실태 정리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 군수공장 현황을 정리한다.

가. 제1총국: 개인화기·경량무기 생산

제1총국은 북한 군수산업의 모체이고 가장 역사가 길다. 주요 생산 품목은 소총·탄약·기관총 등 다양한 개인화기와 이와 관련한 기타 군사장비, 60mm박격포·70mm발사관·수류탄·지뢰 등 경량무기이다.[330] 대표적인 공장은 2.8기계공장(제65호공장)·제62호공장·

제67호공장 등이 있다. 제1총국 산하 공장은 대부분 평양·강계·청진·신의주 등 주요 산업지역에 위치한다. 공병장비는 함흥·덕천 등 4개 공장에서 생산한다.[331] 제1총국 산하에 있는 대표적인 군수공장은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제1총국 산하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2·8기계공장* (제65호공장)	자강도 전천	1만 2천 명	5.45mm자동소총, 백두산권총, 투척기 자동보총, 7.62mmRPD경기관총, 7.62mm RP-46경기관총, KPV중기관총, SGM중기관총, 82mm박격포
제42호공장*	자강도 장강	1천 2백 명	소구경 탄약, 수류탄, 지뢰
제61호공장*	자강도 강계	–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제93호공장* (강계정밀기계공장)	자강도 강계	7천~ 1만 명	각종 소화기 목재가공품, 총 개머리판, 소화기 및 대구경 화포의 탄약
제95호공장*	평북 구성	–	각종 탄약, 소총탄(일 최대 200만발)
제81호공장*	자강도 전천	2천 5백 명	82mm박격포, 60mm박격포, 무반동포
제67호공장*	평양시 강동	7천 5백 명	145mm2신·4신 고사기관총, KPV중기관총(12.43mm), SGM중기관총(12.43mm)
제101호공장*	평양시 강동	3천 명	각종 개인화기 탄약(연간 300만 발), 수류탄(연간 50만 발), 대인지뢰
제17호공장*	함남 함흥	3천 명	다이나마이트, 각종 도화선, 화약, 고성능 화약
제62호공장*	함북 종성	3천 5백 명	수류탄, 대전차 수류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연간 각 100만 발)
강계탄약공장	자강도 강계	–	소화기·대포 탄약
제124호군수공장	자강도 전천	–	AK-74소총
별하리병기공장	자강도 성간	–	어뢰
대안전기공장**	평남 대안	–	어뢰
강계전기공장**	자강도 강계	–	어뢰

330)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99.

331) 문광건, "북한의 군수산업," 『국방과 기술』, 9월호 (1998), p. 35.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평남 남포	–	어뢰
청진기계공장**	함북 청진	–	어뢰
1.18종합기계공장**	평남 개천	–	어뢰
1월20일공장***	함북 은덕	3천 명	폭약 원료 생산(헥소겐)
7월7일공장***	함북 은덕	–	폭약 원료 생산(메탄올)
1월7일공장***	함북 은덕	–	폭약 제조
구월산 철재일용공장****	황남 삼천	–	탄알, 포탄

출처: *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p. 99~100.
** "북한 어뢰공장 최소 6곳," 『조선일보』, 2010.5.27,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0052700112〉 (검색일: 2018.8.8.).
*** 북한이탈주민 J1 인터뷰(2018.7.23, 통일연구원)
****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9.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군수공장은 어뢰를 생산하는 대안전기공장·강계전기공장·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청진기계공장·1.18종합기계공장과 폭약 원료 생산과 폭약 제조를 수행하는 1월20일공장·7월7일공장·1월7일공장 등이다. 1월20일공장·7월7일공장·1월7일공장은 1월20일공장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다.

(1) 제65호공장

65호공장은 북한 최초의 군수공장이다. 다른 명칭은 2.8기계공장이다. 65호공장은 자강도 전천군 화암리에 있고, 권총류·자동소총류, 각종 고사총, 소형포켓포 등을 생산한다. 종업원 수는 8천~1만 명으로 추정한다.[332] 김일성은 1949년 65호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65호공장을 기초로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밝혔으며, 65호

332)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24.

공장이 북한 군수산업의 모체공장·간부공장이 되어야한다고 지시했다. 김일성은 65호공장에서 개별적인 부품을 만드는 직장들을 독립적인 하나의 공장으로 발전시키고, 군수산업을 조직·지도할 수 있는 기술간부·숙련공·관리간부들을 양성해서 더 많은 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333] 이후 65호공장에서 62호·93호 등 여러 군수공장들이 분리되었다.

(2) 제124호군수공장

124호공장은 자동보총(AK-74소총)을 만드는 군수공장이다. 이 공장은 자강도 전천군에 있고, 깊은 산 속에 갱도 100개를 파서 만들었다. 1개 갱도는 보통 00호 직장으로 불린다. 한 개 직장에는 10여개의 작업반이 있다. 한 작업반 인원은 45~50명으로 구성한다. 공장 산하 직장은 총구·총탁·격발기·총신·탄창 등 공정별로 구성한다. 조립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하루에 소총 1,000정 정도를 생산했다고 증언했다.[334]

(3) 1월 20일공장(은덕화학공장)[335]

1월20일공장은 폭약을 생산한다. 모체 공장은 은덕화학공장이다. 은덕화학공장은 7월7일공장·1월20일공장·1월7일공장으로 분리되었다. 공장 위치는 함경북도 은덕군 은덕읍에 있다. 공장은 직장건물이 있는 반경을 재면 4k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종업원은 3천

333)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00.

334) "군수공장은 일단 들어가면 '말뚝 근무'," 『NKchosun』, 2001.10.23, 〈http://nk.chosun.com/news/articlePrint.html?idxno=1185〉 (검색일: 2018.8.8.).

335) 북한이탈주민 J1 인터뷰(2018.7.23, 통일연구원). 1월20일공장은 J1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명 정도고, 산하 직장은 17개다.

1월20일공장은 산을 끼고 있는데 1호부터 9호공정은 산을 넘어가기 전에 있고, 10호공정부터는 산 너머에 있다. 13·14공정은 두세 번 검수를 받고 들어갈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1호직장은 류산, 2호직장은 아류산, 3호직장은 질산, 4호직장은 포르말린, 5~7호직장은 헥소겐을 생산한다.

북한이탈주민 K1이 2000년~2002년 사이에 근무한 4호직장은 6개 작업반이 있었고, 포르말린을 생산한다. 한 작업반은 10명 이상으로 전체 70명이 넘어야한다. 그러나 한 작업반에 5~6명 정도가 일했고, 근무인원은 30~50명 정도였다. 여직원들은 포르말린을 생산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농도를 측정해서 합격·불합격을 판정한다.

7월7일공장·1월20일공장·1월7일공장은 6.13탄광(아오지탄광)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가동한다. 6.13탄광은 채취한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7월7일공장으로 보낸다. 7월7일공장은 석탄에서 메탄올을 추출해서 송수관을 통해 1월20일공장으로 보낸다. 1월20일공장은 메탄올을 연료로 포르말린으로 만들고 포르말린에서 헥소겐을 추출한다. 1월7일공장은 헥소겐으로 폭약을 제조한다.

(4) 제95호공장

95호공장(삼지연정밀기계공장)은 보총탄약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95호공장은 김일성 교시에 의해 월 600만 발 이상의 탄알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전력사정 악화로 월 200만 발 정도가 생산되고 일부는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336] 김정일

336) "北 "장군님 다치실라...95공장 이전하라"," 『DAILY NK』, 2009.3.4, 〈https://www.dailynk.com〉 (검색일: 2018.8.11.).

이 "95호공장에서 한 달에 200만 발의 자동보총탄알만 생산한다면 우리나라에 다른 탄알 생산기지가 필요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337]

95호공장은 원래 양강도 혜산시 검산리 왕덕골에 있었다. 2009년 2월 당군사위원회 명의로 '5월까지 95호공장 이전을 무조건 끝내라'는 최종 지시문이 떨어져서 평안북도 구성시 백운리 일대로 공장을 이전했다. 95호공장을 이전한 이유는 김정일의 전용역인 왕덕역과 약 8백 미터 거리에 있는데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95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할 것을 우려해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매년 한 번씩 양강도를 현지지도하는데, 95호공장 화학물질이 폭발할 것을 우려해서 1호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청진-대홍단-삼지연-혜산을 잇는 도로를 이용했다.[338]

(5) 제93호공장

93호공장(강계정밀기계공장)은 자강도 강계시 석조동에 위치한다. 이 공장은 26호공장에서 분리됐다. 주요 생산품목은 소총·탄약류·기관포탄류 등이다. 북한군 수요량의 60%를 생산한다.[339] 종업원 수는 7천~1만 명 정도다. 62호공장도 65호공장에서 분리됐다. 위치는 함북 종성에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각종 수류탄·대전차수류탄·지뢰·대전차지뢰 등이다. 종업원 수는 3,500명 정도이다.[340]

---

337) "[北美 긴장국면]①군·경에 실탄 지급하는 北, 전쟁준비 돌입?," 『아시아경제』, 2017.10.2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011263579073〉 (검색일: 2018.8.11.).

338) "北 "장군님 다치실라…95공장 이전하라"," 『DAILY NK』, 2009.3.4.

339) K3은 93호공장은 고사총, 자동보총, 권층 등 북한에서 생산하는 탄알의 70%~80% 정도를 생산한다고 증언했다(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340)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56~57. 62호공장은 위치,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목 등에 대한 정유진과 고청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이 연구는 정유진의 주장을 인용한다.

(6) 제17호공장

17호공장은 함남 함흥시에 위치한다. 종업원 수는 약 2,000명 정도이다. 주요 생산품목은 다이나마이트, 화약, 고성능 화약, 각종 도화선 등이다. 이 공장은 일본이 건설한 조선질소폭발물공장을 근간으로 확대한 시설이다. 이 공장은 화약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본 생산 공정들을 지하화하지 못했다. 이 공장은 1960년대에 연 5,500톤의 폭발물을 생산했으나 1990년대 이후 폭발물 생산량이 대폭 줄었다.[341] 17호공장은 2000년대 이후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42] 구월산 철재일용공장은 북한군 전연 전투부대들에 탄알과 포탄을 공급한다. 이 공장은 제일 전방에 나와 있는 전연공장으로 황해남도 삼천군에 있다.[343]

(7) 어뢰생산 공장

어뢰생산 공장은 대안전기공장·강계병기공장·별하리병기공장·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청진기계공장·1.18종합기계공장 등 최소 6곳이다. 북한은 1960년대 소련 등에서 수입한 어뢰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어뢰제작 기술을 익혀서 대안전기공장에서 어뢰를 생산했다.[344]

---

341)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8;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s Solid-propellant Rocket Engine Production Infrastructure: The No. 17 Factory in Hamhung," 『38 NORTH』, 2018.1.30, 〈https://www.38norht.org/2018/01/no17factory180130/〉 (검색일: 2018.8.24.).

342)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s Solid-propellant Rocket Engine Production Infrastructure: The No. 17 Factory in Hamhung."

343)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9.

344) "북한 어뢰공장 최소 6곳… 잠수함은 신포(함남 봉대 보일러 공장)서 만들어," 『조선일보』, 2010.5.27,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0052700112〉 (검색일: 2018.8.8.).

나. 제2총국: 기계화장비 생산

제2총국은 각종 전차·장갑차·수륙양용차 등 기계화 장비를 생산한다. 2총국 산하 군수공장에서는 북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T-62개량형 전차, T-63 수륙양용전차, PT-85수륙경형전차, BMP-1보병장갑전투차 등을 생산한다.[345]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장갑차 현황은 〈표 Ⅴ-4〉와 같다.

〈표 Ⅴ-4〉 북한군 전차·장갑차

구분	현황
전차	4,3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p. 236.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장갑차는 대부분 제2총국 산하 군수공장에서 생산한다. 제2총국 산하 군수공장은 〈표 Ⅴ-5〉와 같다.

〈표 Ⅴ-5〉 제2총국 산하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구성공작기계공장*	평북 구성	8천 명	각종 전차, T-62형 전차(연간 100대 생산능력)
제915호공장*	평남 순천	2천 명	각종 전차엔진, 엔진부속품
제81호공장** (성간강철공장)	자강도 성간	7천~ 1만 명	미사일발사대·대포·중장비
제118호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평남 개천	5천~ 8천 명	탱크·장갑차·수륙양용장갑차·주체포·대포·미사일발사대
제57호공장***	평북 대관	–	전차
제61호탱크공장****	함남 신흥	–	천마호, 폭풍호 탱크
제211호공장	함흥 사포	–	탱크
구성광산기계공장*****	평북 구성	–	탱크, 장갑차

345)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1.

출처: *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1.
**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25~58.
*** 북한이탈주민 J1 인터뷰(2018.7.23, 통일연구원).
**** "북, '폭풍호' 생산 신흥탱크공장도 침수," 『RFA』, 2010.8.2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tank-08242010111228.html?searchterm:utf8:ustring=+%EC%83%9D%EC%82%B0+%EC%8B%A0%ED%9D%A5%ED%83%B1%ED%81%AC%EA%B3%B5%EC%9E%A5%EB%8F%84+%EC%B9%A8%EC%88%98〉 (검색일: 2018.8.9.).
*****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7.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군수공장은 제81호공장·제118호공장·제57호공장·제61호탱크공장·제211호공장 등이다. 제118호공장은 어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1총국 산하로도 분류되었다. 향후 이 공장이 1총국 산하인지 2총국 산하인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 제81호공장·제118호공장은 미사일 발사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 생산은 2총국에서 관리하는지, 미사일 생산을 담당하는 4총국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1) 제61호탱크공장

61호탱크공장은 함경남도 신흥군에 있다. 이 공장은 북한 최신형 탱크인 폭풍호와 주력탱크인 천마호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탱크공장은 가평리에 기본공장이 있고, 동흥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다. 신흥탱크공장에서 제작한 탱크 본체는 함흥시 사포구역 초운리에 위치한 211호공장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생산한 포탑을 얹어 완제품을 조립한다. 61호공장은 2010년 7월 집중호우로 중국산 탱크엔진 230여 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시 61호공장에는 신흥탱크공장을 최단기일 내에 복구할 데 대한 김정일의 특별지시가 하달됐다.[346]

346) "북, '폭풍호' 생산 신흥탱크공장도 침수," 『RFA』, 2010.8.24.

(2) 기타

구성광산기계공장은 1970년대에 구성광산기계수리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 공장은 탱크·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특급공장이다.[347] 고청송은 81호공장(성간강철공장)·118호공장·17호공장 등에 대해서 증언했다. 81호공장은 자강도 성간군 중성간로동자지구에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미사일 발사대·대포·중장비이다. 종업원 수는 7천~1만 명으로 추정되는 1급공장이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상업위성 사진과 고청송 증언을 토대로 81호공장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지목했다.[348]

118호공장은 평남 개천시 각암리와 용원리 사이에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탱크·장갑차·수륙양용장갑차·주체포·대포·미사일발사대 등이다. 종업원 수는 5천~8천 명 선이다.[349] 북한이탈주민 K1은 비행기 부품을 조립하는 58호공장 부근에 제57호공장이 있다고 증언했다. 57호공장은 평북 대관군 대관읍에 있고, 탱크를 제조한다.[350]

다. 제3총국: 각종 포무기 생산

제3총국은 대공포·야포·자주포 등 각종 포 무기를 개발·생산한다. 제3총국은 가장 규모가 크고 생산하는 민간기업·기업소와 협동생산량도 많은 복잡한 총국이다.[351] 북한군이 보유한 야포·다련장·방사

---

347)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7.

348)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60~61; Jeffrey Lewis, "That Ain't My Truck: Where North Korea Assembled Its Chinese Transporter-Erector-Launchers," 『38NORTH』, 2014.2.3, 〈http://www.38north.org/2014/02/jlewis020314/〉 (검색일: 2018.8.13.).

349)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60~61.

350)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8.7.19, 통일연구원).

포 현황은 〈표 Ⅴ-6〉과 같다.

〈표 Ⅴ-6〉 북한군 야포·다련장·방사포

구분	현황
야포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 기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 236.

북한 대구경자주포나 방사포 포신은 대안중기계공장, 주행장치는 금성트랙터공장, 승리자동차공장, 316공장 등 인민무력부 소속 공장과 내각 산하 공장들에서 협동·생산한다. 북한은 23mm·37mm 자주대공포 M-1992, 120mm 자주혼성포 M-1992, 122mm 자주포 M-1981, 122mm 자주평/곡사포 M-1977, 122mm 자주곡사포 M-1991, 130mm 자주포 M-1975, 130mm 자주포 M-1992, 152mm 자주평/곡사포 M-1989, 152mm 평/곡사포 M-1985, 170mm 자주포(곡산) M-1978, 170mm 자주포 M-1989, 122mm 자주방사포 BM-11, 240mm 자주방사포 M-1985, 240mm 자주방사포 M-1991 등 자주포·방사포를 생산한다.[352] 제3총국 산하 군수공장은 〈표 Ⅴ-7〉과 같다.

351)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1.

352) 문광건, "북한의 군수산업," pp. 35~36.

〈표 Ⅴ-7〉 제3총국 산하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강계트랙터공장* (제26호공장)	자강도 강계	1만 2천 명	박격포탄, 방사포탄, 대전차포탄
제32호공장*	자강도 강계	1천 명	각종 야포탄, 자주포탄
삭주병기공장*	평북도 삭주	5천 명	122mm 곡사포, 155mm 곡사포
곽산포수리공장*	평북도 곽산	–	각종 야포 수리
용성기계공장*	함남도 함흥	1만 5천 명	각종 포신 가공, 야포·자주포 기계장치
만경대보석가공공장* (1329호 공장)	평양시 만경대	2천 명	화포 조준경, 유도장치, 레이저 탐지기
금성트랙터공장 일용분공장*	평남도 남포	5천 명	각종 자주포의 무한궤도장치, 자주포 주행장치
제96호공장** (만포시멘트공장)	자강도 만포	7천~ 1만 명	대공로켓, 방사포탄
제67호공장**	평남 성천	5천~ 7천 명	각종 포탄류, 미사일 부품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	–	4천 명	120mm·240mm 포탄
5월10일공장*** (라북천기계공장)	–	3천 명	각종 포
가림천정밀기계공장****	–	6백 명	60mm·82mm·120mm 박격포탄몸체

출처: *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p. 101~102.
**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25~58.
***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8.7.25, 통일연구원).
**** "북, 95호 군수공장 왜 옮겼나?," 『RFA』, 2015.1.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munitions-01292015085737.html?searchterm:utf8:ustring=+95%ED%98%B8+%EA%B5%B0%EC%88%98%EA%B3%B5%EC%9E%A5+%EC%99%9C+%EC%98%AE%EA%B2%BC%EB%82%98〉 (검색일: 2018.8.10.).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군수공장은 제96호공장·제67호공장·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5월10일공장·가림천정밀기계공장 등이다.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5월10일공장은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

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1) 제26호공장(강계뜨락또르공장)

26호공장은 각종 포탄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제3총국 산하의 대표적인 군수공장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다양한 포탄·폭탄, 방사포탄(80·120·200mm), 58호 방사탄, 화성 1·2호 미사일, 로동 1·2호 미사일 기본 부품, 기뢰·폭뢰·어뢰탄 등이다. 종업원 수는 1만 2천 명으로 추정된다. 26호공장은 북한 무력의 45%가 나온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26호공장은 북한 군수공업의 모체공장으로 1945년 10월 설립한 평양 평천리 병기공장으로 출발했다. 26호공장은 자강도 강계시 남천동에 있다. 위장명칭은 강계 트랙터 종합공장이다. 생산된 무기는 각 부대와 병기저장고로, 수출용은 송림항으로 이송한다.[353]

(2)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354]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은 3총국 산하 공장으로 120mm·240mm 포탄을 생산한다. 공장 위치는 청진시 라남구역 회향리이다. 종업원 수는 4천 명 정도다. 산하 직장은 22개다. 공장 정문에서 22호 직장까지는 여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30~40분 정도 걸어야한다. 산하 직장들은 포탄 제작을 위해 각자 전문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공장에는 각 직장들과 노동과, 기술과, 생산과, 자재과, 건설과, 운수과, 실험실, 검사과, 부기과 등 행정부서가 있다.

353)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25~28;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1;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7.

354)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8.7.25, 통일연구원).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은 K2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1호 직장은 기본 강을 3천도 이상 익히는 공정, 2호 직장은 빨갛게 익은 쇠를 1.2미터로 늘이는 프레스 공정, 3호 직장은 1.3미터 앞뒤로 볼트자리를 잡는 곳, 4호 직장은 포신관을 닦아내는 공정, 5~7호 라인은 갱도, 8호 직장은 도금인걸로 알고 있어요. 9호 직장은 마지막 공정 라인, 10~11호는 주물 직장, 13호는 볼트·너트 만드는 공장, 14호 갱도로 그 안에서 뭘 만드는지는 잘 모릅니다. 15호~16호 라인은 무엇을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17호 직장은 전기 직장, 18호는 포탄상자 걸개 만드는 직장, 21호는 포탄 적재 상자 만드는 직장, 22호는 목공직장입니다.[355]

전기는 주로 청진수성천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일부 자체 발전기로도 충당한다. 전기는 24시간 끊기지 않는다. 주요 자재인 강은 성강·희천에서 받고, 볼트·너트 등 소부품은 공장에서 생산한다. 일부 직장들은 지하갱도에 있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

한 개 건물에 4호 라인까지 있고 기본 부품 만드는 데는 갱도에 5호·6호·7호·14호 등이 있고 부분별로 따로 있어요. 갱도에 들어가 있는 공정은 좀 더 보안을 지켜야할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4호 라인은 강을 1~2미터로 늘리는 공정이고 하기 때문에 정보를 훔쳐 갈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갱도 같은 경우는 완전 비밀 엄수이기 때문에 출입증에 백두산이라고 찍은 도장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요. 백두산이라는 출입증이 없으면 그 누구도 출입금지이고 당비서나 조직비서 등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356]

북한이탈주민 K2는 2006년까지 건설과 회계를 담당했다. 건설과 예산은 연간 3천만 원 정도였다. 기본자재는 공장 자재과에서 80%~90%

355)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8.7.25, 통일연구원).
356)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8.7.25, 통일연구원).

정도를 공급한다. 건설과 예산은 종업원 급여, 운행비, 공장 미공급 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다. K2는 청진관모봉군수기계공장 주변에 있는 5월10일공장(라북천기계공장)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이 공장은 청진시 라남구역에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각종 포무기이다. 종업원 수는 약 3천 명이다.

(3) 기타

만포96호공장은 만포시에 있고, 만포시멘트공장이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한다. 주요 생산 품목은 대공 로켓과 방사포탄이다. 종업원 수는 7천~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공장은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 집안현과 마주하고 있다. 96호공장에 대한 다른 정보는, 종업원이 9천 명이고, 주요 생산 품목은 화약류와 화학제품이라는 것이다.[357]

67호공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백암리에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각종 포탄류와 미사일 부품을 생산한다. 종업원 수는 5천~7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 공장도 65호공장과 26호공장에서 분리되어 나온 공장이다.[358]

북한은 95호공장 터에 가림천공장(가림천정밀기계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은 60mm·82mm·120mm 등 박격포탄의 몸체를 생산한다. 가림천공장은 혜산시에 있던 5월8일임업기계공장 생필직장, 갑산광산 생필직장, 대봉광산 생필직장 등에 있던 박격포탄 작업반들을 하나로 합쳐서 2013년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종업원 수는 대략 6백 명 정도다. 이 공장 노동자들은 매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한다.[359]

---

357) "北韓 환경오염 상태 심각," 『연합뉴스』, 1993.9.27,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1&aid=0003698747〉 (검색일: 2018.8.9.).

358)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56~58.

359) "북, 95호 군수공장 왜 옮겼나?," 『RFA』, 2015.1.29.

라. 제4총국: 각종 미사일 생산

제4총국은 역사가 짧지만 모든 미사일시스템의 조달·개발·생산을 담당한다. 미사일 개발은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조직이 세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360] 북한은 구소련제 지대지미사일 SCUD-B를 모방해서 1987년부터 중거리 지대지미사일을 시작으로 각종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한다.[361] 북한은 스커드 B 생산 능력은 월 8~12발로 연간 100여 발을 생산할 수 있고, 스커드 C도 월 4~8발을 생산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약 1천 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단거리에 속하는 스커드 계열을 5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362] 제4총국 산하 군수공장은 〈표 Ⅴ-8〉과 같다.

〈표 Ⅴ-8〉 제4총국 산하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제26호공장*	자강도 강계	1만 명	대전차 유도탄, SAM-7지대공미사일, 대구경 방사포탄
만경대약전기계공장* (평양비둘기공장)	평양시 용성	6천 명	지대지미사일(노동1·2·3호), 실크웜대함미사일
평양1월25일기계공장* (평양돼지공장, 제125호공장)	평양 용성	5천 명	지대공미사일, 실크웜대함미사일
동해약전공장*	함북 청진	4천 명	SAM-7지대공미사일, 대전차유도탄(유선·무선)
제67호공장**	–	–	–
만경대공작기계공장**	–	–	–
로동리공장**	함북 길주	–	–
대포동공장**	함북 화대	–	–

360) 문광건, "북한의 군수산업," p. 36.

361)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2.

362) 김민석, "[심층해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대응책은?," 『월간중앙』, 201610호, 2016.9.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3264#self〉 (검색일: 2018.8.11.).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태성기계공장[*****] (잠진미사일공장)	평남 남포	–	스커드 미사일, 대포동 2호 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형), 장거리미사일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제118호공장)	평남 개천	1만 명	로켓, 미사일, 어뢰, 전차용 엔진, 탄도미사일 엔진
제301호공장[******]	평북 대관	–	지대공미사일
제38호공장[******] (청년전기연합기업소)	자강도 희천	1만 5천 명	미사일 제어기기, 각종 계기류, 탐지기
산음동병기연구소[******]	평양시	–	탄도미사일 예비조립
평양반도체공장[*******]	–	–	2극소자직장, 조업식전자일용품, 집적소자, 반도체소자, 각종 미사일 전자부품
제56호공장[***]	평북 대관	–	로켓
평양약전기계공장[****]	평양 만경대	–	미사일 폭약과 관련 부품

출처: *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p. 101~102.
**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67.
***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8.7.19, 통일연구원).
**** "김정은 미사일공장 시찰 "기술문헌에도 없는 것 개발하라"," 『노컷뉴스』, 2014.3.3, 〈http://www.nocutnews.co.kr/common/popprint.aspz?index=1195090〉 (검색일: 2018.8.9.).
***** "北 김정은, 안보리 결의 채택 앞두고 '태성기계공장' 시찰," 『news1』, 2016.3.2, 〈http://news1.kr/articles/?2589670〉 (검색일: 2018.8.13.); "2차 현대화 공사 마친 미사일 부품공장," 『RFA』, 2016.1.7, 〈https://www.fra.org/korean/weekly_program/c704c131c0acc9c4-d558b298c5d0c11c-bcf8-bd81d55c/satellitenk-01072016095232.html〉 (검색일: 2018.8.13.).
****** "화성-15형 만든 北ICBM 개발 본산," 『dongA.com』, 2018.8.1, 〈https://news.donga.com/home/3/all/20180731/91327560/1〉 (검색일:2018.9.18.).
******* 부형욱 외,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p. 236; 김두승 외,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7), p. 227 재인용.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시설은 강계·용성·잠진·함주 등 4~8곳 정도로 추정한다. 미사일 생산 조직은 시스템 종류에 따라 세분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강도 강계시 제26호공장은 미사일 부품을, 평남 개천군 가감리 118호공장은 발사체 엔진을, 평양시 형제산 구역 제125호

공장은 미사일 조립을 담당한다. 만경대약전기계공장에서는 미사일 탄두 폭약을 생산한다. 그 외에 남포시 강서구역에도 미사일공장이 있다. 미사일 기지는 양강도 중강진, 강원도 옥평, 함경남도 마양도, 평안남도 강감찬산, 함경남도 덕성군 등에서 확인됐다.[363]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군수공장은 평양산음미사일공장, 67호 공장,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리공장, 대포동공장, 56호공장, 평양약전기계공장, 태성기계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 등이다.

(1) 제26호공장

26호공장은 제2총국과 제4총국 산하로 나누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종업원수는 1만 명 정도다. 2총국 산하 26공장은 박격포탄, 방사포탄, 대전차포탄 등을 생산한다. 4총국 산하 26호공장은 미사일 부품과 SAM-7 지대공미사일 등을 생산한다. 그 밑에 공임분공장, 58호공장 등을 두고 있다.[364] 26호공장은 다른 군수공장과 마찬가지로 핵심 생산시설이 지하터널 속에 있다.

26호공장 공인분공장은 본 공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장자강 유역에 있다. 공인분공장 조직체계는 〈그림 Ⅴ-1〉과 같다. 산하공장은 40호부터 49호까지 10개 직장이 있다. 이 공장은 자체 행정부서를 가지고 있다. 종업원 수는 3천 명에서 3천 5백 명으로 추정한다. 이 공장은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 핵심부품을 제작해서 평양 산음군수공장의 미사일조립공장과 함북 길주 로동리 등 전국 각지로 보낸다.[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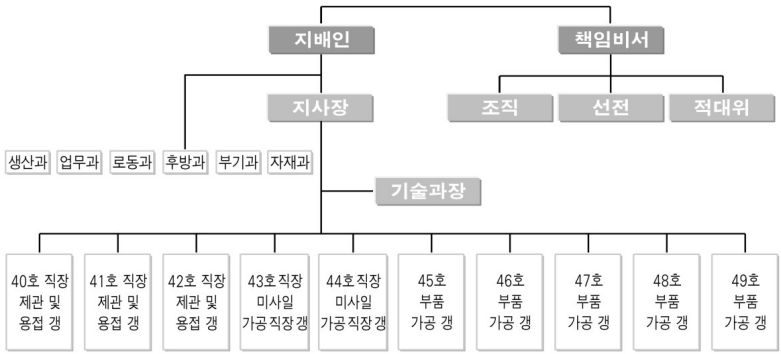
---

363) 김민석, "[심층해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대응책은?"; 문광건, "북한의 군수산업," p. 36.

364)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2.

365)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47~48.

〈그림 Ⅴ-1〉 공인분공장 조직체계



출처: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48.

(2) 태성기계공장(잠진미사일공장)

태성기계공장은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리에 있고, 일명 잠진미사일공장으로 불린다. 주요 생산품목은 대규모 스커드 미사일, 대포동 2호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형), 장거리미사일 등을 생산한다.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탄도미사일 제작 시설이다. 김정은은 2016년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태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은 태성기계공장은 나라의 맏아들 공장, 핵심공장이라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공장 현대화를 지시하면서 "태성기계공장의 생산 및 기술관리공정을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366]

이 공장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2016년 6월 9일 과학자·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

366) "北 김정은, 안보리 결의 채택 앞두고 '태성기계공장' 시찰," 『news1』, 2016.3.2.

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말한 현지지도 장소가 태성기계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367]

(3) 1월18일기계종합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은 평남 개천에 있다. 이 공장은 군수분야에서 유일한 엔진종합공장으로 미사일 부품, 탱크 부품, 함선엔진, 비행기 엔진, 윤전기재 엔진 등 주요 동력장치를 생산한다. 김일성이 이 공장을 "공화국에서 제일 멋쟁이 공장"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설비 현대화와 공장 갱도화를 실현했다. 1990년대에는 북한군 육전대 수송용 〈안-2〉 비행기 엔진을 양산해서 김정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368]

김정일·김정은은 매년 이 공장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은 2013년부터 매년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이 공장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공장 개·보수와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고, 2014년 5월 김정은 지시로 2차 현대화 공사를 진행해서 로봇, CNC화(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 무인창고 등 자동화와 무인화 공장을 준공했다.[369] 이 공장은, 광명성 1단에 장착하는 27톤급 엔진을 생산했고,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18일 공개한 80톤급 고출력 신형 로켓엔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엔진 측과 틀은 남포직할시 강서구역에 있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한다.[370]

---

367) 김만용, "'核탄두 소형화' 남포 태성기계공장 주목," 『문화일보』, 2016.6.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2401070530124001〉 (검색일: 2018.8.9.).

368)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8.

369) "2차 현대화 공사 마친 미사일 부품공장," 『RFA』, 2016.1.7.

370) "[단독] 북한 신형 로켓엔진 개발 막후 조력자 찾았다," 『일요신문』, 2017.3.23, 〈http://ilyo.co.kr/?ac=print&entry_id=238720〉 (검색일: 2018.8.9.).

(4) 평양1월25일기계공장

평양1월25일기계공장은 일명 평양돼지공장으로, 만경대약전기계공장은 평양비둘기공장으로 불린다. 이 두 공장은 평양시 용성구역에 있다. 1월25일기계공장은 종업원 수가 5천 명 정도고, 지대공미사일과 실크웜대함미사일 등을 생산한다. 만경대약전기계공장은 자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의 미사일 조립까지 진행한다. 종업원 수는 6천 명 정도고, 지대지미사일(노동1·2·3호)과 실크웜대함미사일을 생산한다.[371] 만경대약전기계공장은 1980년대 초에 조업했고, 미사일 생산에서 유일한 종합공장이다. 과거 중동에 수출한 스커드미사일은 이 공장에서 생산했다.[372]

(5) 평양약전기계공장

평양약전기계공장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있다. 이 공장은 적외선 유도무기 종합공장이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미사일부품의 약 25%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73] 김정은은 2014년 3월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은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기성 기술문헌에도 없는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374]

---

371)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p. 101~102.

372)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9.

373) 위의 글, p. 79.

374) "김정은 미사일공장 시찰 "기술문헌에도 없는 것 개발하라"," 『노컷뉴스』, 2014.3.3, 〈http://www.nocutnews.co.kr/common/popprint.aspz?index=11950 90〉 (검색일: 2018.8.9.).

(6) 산음동병기연구소

산음동병기연구소는 평양시 외곽 산음동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험 발사한 대포동 계열 장거리미사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제작했다. 연구소 내에는 대규모 조립라인과 연구동 등 10여 개 시설에서 수백 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군수공장에서 협동 생산한 엔진, 항법장비 등 미사일 주요부품과 동체가 이곳에서 최종 조립된다.[375]

마. 제5총국: 생화학무기 생산

제5총국은 생화학무기와 반화학장비를 생산한다. 제5총국은 화학무기 개발·생산과 중간재·원자재 생산을 관리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함흥·흥남·청진·아오지·신의주·만포·안주·순천 등 8곳이다. 화학공장에서는 화학무기, 화학무기 중간재·원자재, 반화학장비 등을 생산한다. 화학무기 연구·개발 시설은 제2자연과학원 함흥분원, 신의주·강계 등 4개 연구소가 있다. 생산된 화학무기는 7곳의 저장 시설에 보관한다. 생물학무기는 정주 등 3곳의 생산시설과 6곳의 연구시설을 갖췄다.[376] 제5총국 산하 군수공장은 〈표 Ⅴ-9〉와 같다.

375) "화성-15형 만든 北ICBM 개발 본산," 『dongA.com』, 2018.8.1, 〈https://news.donga.com/home/3/all/20180731/91327560/1〉 (검색일: 2018.9.18.).

376)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3; 박선도, "한반도 통일시 북한 군수산업 활용 및 처리 방안," p. 50.

〈표 Ⅴ-9〉 제5총국 산하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제361호공장* (강계화학공장)	자강도 강계	–	신경계, 피부계 화학무기
삭주화학공장*	평북 삭주	–	벤졸, 페놀 등 화학무기 중간재
2.8비날론공장 일용분공장*	함북 함흥	–	화학무기 제조용 원자재,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순천비날론공장 일용분공장*	평북 순천	–	화학무기 제조용 원자재
제279호공장*	평남 평원	–	해독제, 방독면, 방독복
본궁화학공장*	함남 함흥	–	–
혜산화학공장*	양강도 혜산	–	–
강계화학공장*	자장도 강계	–	–
제77호공장** (은덕화학공장)	함북 은덕	6천~ 8천 명	화학시약, 화학제품 무기,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
강계알코올공장**	자강도 강계	1천 5백 명	알코올, 화학시약
화성화학공장**	함북 명간	–	–
청진화학섬유공장**	함북 청진	–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평남 안주	–	–
중앙유전자연구소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평양시	–	생물무기
398연구소***	평남 평원	–	–
함흥비료공장****	함남 함흥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 (UDMH)
선천화학공장기업소****	평북 선천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 (UDMH)
봉화화학공장****	평북 피현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 (UDMH)
선천인산비료공장****	평북 선천	–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 (UDMH)
만포시멘트공장*****	자강도 만포	–	화약

출처: *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3.
**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65;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s Chemical Warfare Capabilities," 『38NORTH』, 2013.10.1, 〈http://www.38north.org/2013/10/jbermudez101013〉 (검색일: 2018.8.11.).
**** Joseph S. Bermudez Jr., Michael Elleman, Curtis Melvin, "UDMH Production in North Korea: Additional Facilities Likely," 『38NORTH』, 2017.10.25, 〈https://www.38north.org/2017/10/udmh102517/〉 (검색일: 2018.8.13.).
*****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군수공장은 727호공장, 강계알코올공장, 화성화학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398연구소, 함흥비료공장, 선천화학공장기업소, 봉화화학공장, 선천인산비료공장 등이다. 특히 미사일 연료인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은 함흥비료공장, 선천화학공장기업소, 봉화화학공장, 선천인산비료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제279공장·398연구소

북한은 10여 개의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평시에는 연간 4천 5백 톤을 생산하고, 전시에는 연간 1만 2천 톤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했다. 북한은 전국 18개 시설에서 20여 가지의 다양한 화학무기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고, 설파머스타드, 염소, 포스겐, 사린, V계열 작용제 등을 생산한다. 297공장·398연구소는 모두 평남 평원군 석암리에 있다. 297공장은 화학작용제와 해독제 등 관련 장비를 생산한다. 398연구소는 주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신경가스, 미란발포성 가스, 수포작용제 등을 생산한다.[377]

(2) 제77호공장

77호공장은 함경북도 은덕군에 있다. 일명 은덕화학공장으로 불린다. 주요 생산 제품은 여러 가지 화학시약들과 화학제품 무기들을 개발한다. 공장규모는 1급이고, 종업원 수는 6천~8천 명으로 추정된다.[378]

---

377)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s Chemical Warfare Capabilities," 『38NORTH』, 2013.10.1, 〈https://www.38north.org/2013/10/jbermudez101013〉 (검색일: 2018.8.11.).

378)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66.

(3) 강계알코올공장

강계알코올공장은 2급 기업소고, 자강도 강계시 래룡동에 위치한다. 주요 생산 품목은 여러 가지 알코올과 화학시약을 생산한다. 공장 규모는 약 4천 평 정도고, 종업원 수는 1,500명 정도다. 이 공장은 자강도 군수공장들과 평북 내 관련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다.[379] 이 공장은 화약을 생산하는 만포시멘트공장에 알콜을 공급한다.[380]

바. 제6총국: 각종 전투함정·잠수함 생산

제6총국은 각종 전투함정·잠수함·해군장비 생산을 담당한다. 해군 함선건조는 주로 소형 위주다. 북한은 어뢰정, 방사포정, 공기부양정, 소형 참수함인 유고급·상어급 경비함 등을 건조한다. 주요 군수공장은 신포·나진·청진 등에 있다.[381] 〈표 Ⅴ-10〉와 같이 북한이 보유한 각종 전투함정·잠수함정은 제6총국 산하 군수공장들에서 제작했다.

〈표 Ⅴ-10〉 북한의 수상함정·잠수함정

구분		현황
수상함정	전투함정	43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p. 236.

379) 위의 책, p. 66.

380)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381)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3.

북한은 1970년 4월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잠수함 건조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김일성의 경제·군사 원조요청을 받고 로미오급 잠수함(1,800톤) 4척을 북한에 넘겨주었고, 잠수함 건조 조선설비를 통째로 북한에 옮겨주었으며, 건조기술을 지원했다.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1989년~1990년에 상어급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경제침체 이전인 1990년대 이전까지 매년 4~5척의 잠수함을 건조했다. 1996년에는 1천 톤급 정찰용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다.[382] 현재 북한은 잠수함을 70여 척 보유하고 있다.

제6총국 산하 군수공장은 〈표 Ⅴ-11〉과 같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봉대보일러공장, 신포조선소, 마양도조선소 등 3곳이다. 잠수정·어뢰정·상륙정·구축함 등은 나진에 있는 전문공장에서 생산하고, 남포에는 관련 수리 부품공장이 있다.[383]

〈표 Ⅴ-11〉 제6총국 산하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봉대보일러공장*	함남 신포	3천~4천 명	1,000톤급 수색용 잠수함
나진조선소*	함북 나진	–	방사포정, 어뢰정, 잠수함
남포조선소 일용분공장*	평남 남포	–	공기부양정
청진조선소 일용분공장*	함북 청진	–	어뢰정
원산조선소 일용분공장*	강원도 원산	–	어뢰정
평양1월9일공장*	평양시	–	잠수함 및 소형함정 계기류, 잠만경, 어뢰
흥남조선소**	–	–	–
해주조선소**	–	–	–

출처: *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3.
**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p. 58~59.

382) 박성준, "북한 잠수함 생산 능력, 어제와 오늘," 『북한 해양수산 리뷰』, 제15호 (2010.6), p. 6.

383) 박선도, "한반도 통일시 북한 군수산업 활용 및 처리 방안," p. 80.

북한은 6총국 산하 공장에서 생산한 잠수함을 해외에 판매하기도 하고, 잠수함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한다. 북한이탈주민 L1은 중국에서 군 대외무역부문에 근무할 때, 군수부문에서 잠수함 5척을 판매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5척 가격이 2천 7백만 유로였다. 당시 계약금을 50% 받고, 39미터 길이의 잠수함을 절단해서 파철로 가져가고 현지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조립한다.[384]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된 조선소는 흥남조선소와 해주조선소다.

(1) 봉대보일러공장

최근 잠수함은 신포에 있는 전문공장인 봉대보일러공장에서 독점 생산한다. 봉대보일러공장은 위장 명칭이다. 이 공장은 과거 주소지인 신포시 륙대리를 붙여서 일명 륙대리조선소라고 불렀다. 건조 선박은 반잠함·잠수정·어뢰정·반상어급 잠수함, 경비함·경구축함 등이다. 종업원 수는 약 3천~4천 명이다.[385]

공장시설은 1970년 4월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방북 이후 중국에 있던 잠수함 조선소 설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공장은 100톤 이상의 잠수함을 전문 생산한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중에서 대형인 로미오급(1,800톤)·상어급(325톤)·연어급(130톤) 잠수함도 이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건조능력은 4~5척이다.[386] 이 공장에는 8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과 중국 기술자들이 상주해서 군선박건조 기술을 지원했다.

---

384) 북한이탈주민 L1 인터뷰(2018.7.18, 통일연구원).

385)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8;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59.

386) "북한 어뢰공장 최소 6곳… 잠수함은 신포(함남 봉대 보일러 공장)서 만들어," 『조선일보』, 2010.5.27.

사. 제7총국: 통신장비·항공기 생산

제7총국은 통신장비 조달·개발·생산과 항공기 생산을 담당한다. 항공기 생산은 방현 항공기공장을 인민무력부로부터 이관 받으면서 관할하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야전용 전화기, 모르스 전신기, 단파 무전기, 각종 지휘관용 무전기, 전기·전자부품 및 건전지 등 통신장비와 소형헬기 제작, 비행기 수리 등 항공기 등이다.[387]

〈표 V-12〉 제7총국 산하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남포통신기계공장*	평남 남포	–	무전기, 기타 통신장비
안주통신기계공장*	평남 안주	–	무전기, 기타 통신장비
제89호공장*	평남 성천	–	전자직접회로
제33호공장*	자강도 희천	–	통신장비 부품
제24호공장*	평남 성천	–	배터리, 건전지
의주건전지공장*	평북 의주	–	–
청천강전기공장*	평남 안주	–	지휘용 무전기 생산
방현항공기공장*	평북 구성	–	–
제33호공장** (희천전기기계공장)	자강도 희천	8천~1만 명	무선기
제11호공장** (천리길공장)	자강도 성간	8천~1만 명	무선기
제58호공장*** (대관유리공장)	평북 대관	–	회로판, 비행기 부품

출처: *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4.
** 북한이탈주민 L3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8.7.19, 통일연구원).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된 군수공장은 제33호공장, 제11호공장, 제58호공장 등이다.

387) 정유진, "북한 제2경제권에 대하여," p. 104.

(1) 방현항공기공장

방현항공기공장은 1979년경 구소련 기술자들에 의해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노동자구에 만들어진 비행기 공장이다. 이 공장은 여러 가지 헬리콥터·경비행기·미그21전투기까지 엔진을 들여와서 조립한다. 종업원 수는 3천 명 정도인 1급기업소다.[388]

(2) 제58호공장(대관유리공장)[389]

58호공장은 7총국 산하 공장으로 비행기 부품을 조립·생산한다. 민수공장으로 위장한 명칭은 대관유리공장이다. 이 공장은 평안북도 대관군 대관읍에 있다. 주요 업무는 비행기에 사용하는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이다. 공장규모는 공장 끝까지 가려면 40분 정도 걸어야할 정도로 넓다. 산하 직장은 31개가 있다.

김정은은 대관유리공장을 수차례 현지 지도했다. 김정은은 2011년 처음 대관유리공장을 방문했고, 2012년 5월·6월, 2014년 5월에도 방문했다. 2014년 5월 현지지도 당시 황병서(총정치국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변인선(총참모부 작전국장), 윤동현(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포병사령관), 홍영칠(기계공업부 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공장을 광학유리생산기지로 선전하면서 우리 식의 첨단광학측정기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K1의 증언에 따르면, 대관유리공장은 항공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명칭은 대관유리공장이고, 사회적인 기업소 명칭이에요. 진짜

388)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p. 61.

389)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8.7.19, 통일연구원). 제58호공장은 K1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제2경제 산하 명칭은 제58호공장이에요. 군수공장이에요. 제가 일했던 6호직장은 조립직장이거든요. 저희가 부분품들을 만들어서 조립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뤘던게 비행기로 알고 있어요. 비행기부품을 조립해서 제가 근무할 때 당시는 그걸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략) 디지털기기랑 보면 단자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6호직장에 배치되서 납땜을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흰가운을 입고 위생장갑을 끼고 깨끗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390]

K1은 6호직장 9작업반 소속이었다. 6호직장은 9개 작업반에 300여 명이 근무했다. 9작업반 인원은 30명 정도였고, 2003~2005년 사이에 각 작업반마다 출근인원은 20~25명 정도였다. K1은 회로판 조립을 담당했다. 직장의 생산 조직체계는 직장장, 부직장장, 기술행정업무담당, 작업반장, 경리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직장은 지하갱도에 있고, 대부분 선반기계들을 보유했다. K1은 지하갱도 직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갱도는 대부분 선반기들이 많아요. 선반기계들이 들어가면 CNC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날로그식으로 기계들을 수동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면 컴퓨터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기계들을 많이 사들여 와요. 어디서 들여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계들을 장착시켜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갱도라고 보이지 않고요. 산처럼 보이거든요. 일반 산더미처럼 보여요. 갱도를 들어가면 거기도 근무성원이 달라요. 3호가 갱도였어요. 3호 직장에 친구가 있어서 갔어요. 거기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대로 들어가면 꼭 문의를 하고 체크를 하고 누가 왔다는 걸 꼭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저도 직장장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니 무사통과시켰어요. 그래서

390)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8.7.19, 통일연구원).

들어갔는데 그 범위가 엄청 컸어요. 갱도는 제 느낌으로 3개·4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깐 이제 그 1호부터 31호까지 하면 직장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3호 직장, 몇 호 직장은 어느 갱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갱도가 파진 건 하나로 파졌는데 나올 땐 한 문으로 나오는데 여러 갈래로 들어가서 여러 갱도로 빠져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엄청 화려한데도 있고요. 엄청 깨끗하고 그런 갱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 들어가니깐 선반기계들이 많았어요.[391]

아. 기타

제2경제위원회 소속 총국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군수공장들이 있다. 이 군수공장들은 국내외 언론보도나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표 Ⅴ-13〉은 소속 총국이 불명확한 군수공장들이다.

〈표 Ⅴ-13〉 소속 총국이 불명확한 군수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제351호공장* (독로강공작기계공장, 조선평양124호공장)	자강도 강계	4천 7백 명	공구, 절삭공구, 측정공구, 통로개척기, 자동화조준발사장치
9월방직공장*	자강도 강계	–	군수용 피복 천
평양방직공장*	평양	–	군수용 피복 천
총가목공장(이름 불명)*	자강도 만포	–	총가목
8호제강소**	자강도	–	특수강

출처: *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8.

391)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8.7.19, 통일연구원).

(1) 제351호공장[392]

북한이탈주민 K3은 2급기업소인 351공장에 대해서 증언했다. 351공장은 자강도 강계시 연석동에 있다. 이 공장은 독로강공작기계공장, 조선평양124호공장 등으로도 불렸다. 종업원 수는 4,700명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공구·절삭공구·측정공구 등 군수공장에 필요한 공구를 생산하고, 군사분계선을 뚫고 나갈 때 지뢰·장애물 제거에 사용하는 통로개척기를 생산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자동고사포에 필요한 자동화조준발사장치를 생산했다.

351호공장은 건물이 9개동이고, 갱도는 하나인데 1·2·3호로 나뉜다. 직장은 1호부터 홀수로 17호 직장까지 있다. 행정조직은 지배인 밑에 부지배인들, 기사장, 행정부서들이 있고, 기사장이 작업반들을 관리한다.[393]

(2) 8호제강소

군수공장들 중에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총국 소속인지 밝혀지지 않은 공장들이 있다. 8호제강소는 자강도에 있고, 1978년경에 준공됐다. 이 공장에서는 구성광산기계공장, 만포시멘트공장, 26호공장 등에 특수강재를 공급한다. 이 공장은 북한 군수산업에 필요한 특수강 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한다.[394]

(3) 기타

북한이탈주민 K3은 9월방직공장, 평양방직공장, 총가목생산 공

392)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393) 행정조직은 〈그림 Ⅲ-16〉 참조.

394) 김길선,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p. 78.

장 등에 대해서 증언했다. 9월방직공장은 자강동 강계 신문동에 있는 군수용피복천 생산공장이다. 이 공장은 모든 시설이 지하갱도에 있다. 평양방직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큰 군수용피복천 생산공장이다. 총가목 생산공장은 만포와 강계 사이 시중군에 있다.[395]

395) 북한이탈주민 K3 인터뷰(2018.8.21, 통일연구원).

Ⅵ

결론

오경섭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 연구는 북한의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운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 경제적 결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명했다.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정부는 북한 군사비 규모를 구매력 평가 환율(PPP) 기준으로 102억 달러(한화 1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북한 군사비 규모는 북한 국민총소득(GNI) 36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30%를 넘는다. 북한은 작은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양적 유지 및 질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한 국민총소득 대비 30%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군사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군사경제를 운영한다. 북한정권은 강력한 국방건설을 목표로 군수산업 우선주의를 고수하면서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했고 투자를 집중했다. 북한은 군사경제를 내각경제에서 분리해서 제2경제로 명명했다. 군사경제는 수령의 지시를 받는 군수공업부의 관리 하에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할했다. 북한은 공식 국방비 외에도 민수경제를 통한 군수생산, 궁정경제의 무기구입 예산지원 등을 통해 군사비를 확충했다.

군사경제 비대화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군사경제 비대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재래식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였거나 군수산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늘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은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전형적인 경로의존형 제도화 때문이다. 김일성과 만주파는 국제적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경로의존적인 제도화를 이용해서 국내정치적으로 권력집중을 추진했다. 즉, 김일성 중

심의 만주파는 6·25전쟁 결정과 냉전심화, 국제 스탈린격하운동의 전개, 쿠바 미사일 위기, 중국문화대혁명 및 중소분쟁의 악화, 1989 혁명과 국제사회주의 블록 해체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계기마다 적절히 활용하여 권력분점체제를 6·25전쟁 책임 전가를 통한 국내파(남로당) 주류세력 제거를 통해 허물고, 8월 종파투쟁과 연안파·소련파 대숙청과 만주파 권력독점, 갑산파 제거와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 등을 거쳐 김일성 가문의 유일독재체제를 확립했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강화는 각 단계에서 권력집중을 견인하는 매개물로 기능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경로의존성은 시기를 거치며 강화됐다. 결국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경로의존적인 확대재생산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버린 군사경제는 북한 권위주의체제의 권력집중화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북한이 군사경제 비대화를 구조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구축하면서 군수산업 비대화가 심화됐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수령의 수직적 권위에 의존해서 지배하는 행정적 통치체계다. 수령과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은 수직적 논의를 통해 군수생산을 진행한다. 수령의 명령과 지시는 수직적 논의를 통해 조정된다. 군수생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들은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조정하기 위한 수평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유관기관 간 수평적 논의의 부재는 수령의 군수생산 명령과 지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없앤다. 유관기관은 수령과 수직적 논의를 통해 기관이기주의를 관철하기에 골몰한다. 북한은 군사경제로의 과도한 자원집중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가 군사경제 비대화를 심화시키면서 군사경제 비효율이 커졌다.

북한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군수공업부의 지도를 받는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구축했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수령이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군수산업을 직접 지도하는 체계이므로 군수산업으로의 자원집중을 초래했다. 수령은 제2경제 부문을 제2의 정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자원과 재정의 우선적 배분 원칙을 확립했다. 내각은 인민경제보다 군수산업 부문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고, 수령이 군수산업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면서 군수산업 부문에 대한 자원 쏠림이 고착됐다. 군수산업은 비대해졌고, 인민경제는 자원부족이 심화됐다.

소련과 북한의 군수산업을 비교한 결과 당 독재와 개인 독재의 질적 차이가 핵심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당 독재 질서를 반영하여 소련의 당정에 설치된 군수산업 관련 협의체는 말 그대로 관료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엘리트의 조정기구인 소련 군수산업위원회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2경제위원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공산정치질서가 수령의 직할통치로 엘리트와의 권력분담이 작동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소련과 북한의 차이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당 독재가 정착되는 초기에는 군수산업 정책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이후 당 독재가 보다 공고해지고 군산복합체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 군수산업의 정책적 우선성이 확고히 보장된다. 소련 말 총서기장이 군수산업 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당 독재 하에서 주요 이익집단인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산당 내에 자리 잡은 거부권자로서의 군산복합체가 없는 북한은 수령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군수산업의 고도화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령이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수령의 정책적·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당-국가의 동요와 반발은 소련의 당 독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노선이 야기한 소련의 보수적 당 엘리트의 반발과 정책혼란이 북한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군사경제 비대화는 북한 경제발전에 부담을 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 한정된 자원을 군수산업에 우선 배분하는 정책은 한계를 보였다.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정책은 비탄력적·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잠식했다. 군사경제 비대화의 지속가능성은 비관적이다. 북한정권은 전체 경제에서 군수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제재는 지하자원, 임가공, 농수산물 수출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군사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줄일 것이다. 북한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군사경제 비대화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경제 비대화가 지속되면서 군수산업이 확장했다. 북한 군수산업은 약 131개의 군수공장, 60여 개의 병기수리 및 부속품 제조창, 100여 개의 유사시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 가능한 민수품 공장 등 약 300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다. 민간공장에 설치한 '일용분공장·일용직장'을 포함하면 군수공장은 더 늘어난다. 이 연구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7개 총국에서 운영하는 102개 군수공장을 확인했다. 이중 50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졌고, 52개는 이 연구에서 새롭게 파악했다.

북한이 군사경제 비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해체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민수전환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고청송.『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서울: 두솔, 2002.

국방기술품질원.『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부.『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_____.『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권양주.『북한군사의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지 지음. 차문석·박정진 옮김.『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서울: 미지북스, 2009.

김민·한봉서.『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일성.『김일성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1960.

_____.『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김일성 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김일성 저작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정일.『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백과사전출판사.『광명백과사전 5-경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성채기.『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서울: KIDA출판부, 2003.

신용도·이상목·조성일.『북한경제체제전환 분석』. 서울: 소화, 2002.

이영훈.『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파주: 살림, 201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7.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전정환 외. 『김정은시대의 북한인물 따라가 보기』. 서울: 선인, 201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최성빈·유재문·곽시우. 『북한 군수산업 개황』. 서울: KIDA출판사, 2005.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2』. 서울: 통일교육원, 2012.
한국은행.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한국은행, 2017.
홍성범 외. 『북한의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 현황 조사』.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KOTRA. 『2017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서울: KOTRA, 2018.

Bratton, Michael and Nich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Breslauer, George. *Khrushchev and Brezhnev as Leaders: Building Authority in Soviet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2.
Buzo, Adrian. *Politics and Leadership in North Korea: The Guerilla Dynasty,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2017.
Chew, Michael.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Christensen, Thomas J. "Chapter 2: Growing Pains: Alliance Formation and the Road to Conflict in Korea." In *Worse than a Monolith: Alliance Politics and Problems of Coercive Diplomacy in Asia*. edited by Thomas J. Christens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Daniels, Robert V. *Russia's Transformation: Snapshots of a Crumbling System*. Boulder: Rowman and Littlefield, 1998.

De Mesquita, Bruce Bueno,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2005.

Debs, Alexandre and Nuno P. Monterio. *Nuclear Politics: The Strategic Causes of Prolife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North, Dougla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_____.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Glaser, Charles L. *Analyzing Strategic Nuclear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Gorbachev, Mikhail.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London: Collins, 1987.

Grief, Avner.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s from Medieval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Hacker, Jacob S. *The Divided Welfare State: The Battle over Public and Private Social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Harrison, Mark. "The Soviet Defense Industry Complex in World War Ⅱ." In *World War Ⅱ and the Transformation of Business Systems*. edited by Jun Sakudo and Takao Shiba.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94.

Harrison, Mark and Andrei Markevich. "Hierarchies and Markets:

The Defense Industry Under Stalin." In *Guns and Rubles: The Defense Industry in the Stalinist State*. edited by Mark Harri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Hewett, Edward A.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ersus Efficien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88.

Hirshleifer, Jack. *The Dark Side of Force: Economic Foundations of Conflict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Hough, Jerry F. *Democratization and Revolution in the USSR, 1985–1991*.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Hough, Jerry F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Lankov, Andrei.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_____.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Levi, Magaret.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In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edited by Mark I. Lichbach and Alan S. Zucker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Levitsky, Steven and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Linz, Juan. "Totalitarianism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edited by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New York: Addison-Wesley, 1975.

Lobell, Steven E. "Threat Assessment, the Sate, and Foreign Policy: A Neoclassical Realist Model." In *Neoclassical Realism, the State, and the Foreign Policy*. edited by Steven E. Lobell, et 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Machiavelli, Niccolo. *The Prince*. translated by Harvey C. Mansfiel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8.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4.

Person, James F.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5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6.

Pierson, Paul.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ress, Daryl. *Calculating Credibility: How Leaders Assess Military Threa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Roeder, Philip G.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oland, Gerar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Cambridge: MIT Press, 2000.

Sakwa, Richard. *Soviet Politics in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989.

Schaefer, Bernd.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4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4.

Schweller, Randall L. *Unanswered Threat: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Shen, Zhihua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rking Paper* no. 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12.

Shirk, Susan L.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Riker, William H.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

Solingen, Etel. *Nuclear Logics: Contrasting Paths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Solnick, Steven L.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Svo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Tsebelis, George. *Veto Playe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Tucker, Robert C. *Political Culture and Leadership in Soviet*

Russia: From Lenin to Gorbachev. London: Norton and Company, 1987.

Urban, Michael. *The Rebirth of Politics in Rus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Van Evera, Stephen.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_____.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 *Offense, Defense, and War*. edited by Michael E. Brown, et al. Cambridge: MIT Press, 2004.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Addison-Wesley, 1979.

Weathersby, Kathryn. "'Should We Fear This?'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2.

_____.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8.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1993.

2. 논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경제연구』. 제2호, 2004. 재인용: 김경원 외. "제5장 군수공업."『북한의 산업』. 서울: KDB산업은행, 2015.

김경원 외. "제5장 군수공업."『북한의 산업』. 서울: KDB산업은행, 2015.

김길선.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지: 제2자연과학원.”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편.『북한조사연구(제3권 1호)』. 서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1999.

_____. “북한의 국방산업 개관.”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편.『북한조사연구(제5권 2호)』. 서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2001.

김병욱. “선군경제운영과 민수산업 군수화.”『북한경제리뷰』. 6월호, 2011.

김영규. “북한의 군수산업과 무기체계.”『북한』. 8월호, 1990.

김용환. “러시아 군수산업체제의 구조와 기능.”『과학기술정책』. 제81권 12호, 1995.

김정환. “소련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국방과 기술』. 제145권 3호, 1991.

김진하·송문희. “북한의 리더십 구조와 경제개혁: 베트남 및 루마니아 사례와의 비교 분석.”『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11.

문광건. “북한의 군수산업.”『국방과 기술』. 9월호, 1998.

박선도. “한반도 통일시 북한 군수산업 활용 및 처리 방안.” 한남대학교 안보국방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박성준. “북한 잠수함 생산 능력, 어제와 오늘.”『북한 해양수산 리뷰』. 제15호, 2010.

박용한.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합의 함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박용한·부형욱. “북한의 3.20 사이버 공격과 안보적 함의.”『2013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3.

백환기. “북한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북한학보』. 제4집, 1980.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경제적 영향분석 및 전망.”『국방정책연구』. 제86호, 2010.

_____. “북한 공표군사비 실체에 대한 정밀 재분석.”『국방정책연구』. 제70호, 2005.

_____. “북한 군사력의 경제적 기초: ‘군사경제’실체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분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_____.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평가: 의도와 지속가능성.”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3.
_____.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군사논단』. 제39권, 2004.
이달희.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의 진실 게임.” 『국방정책연구』. 제70호, 2005.
_____. “북한경제와 군사비.” 정상훈 외 공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이대영·김인호. “국가안전보위부의 활동과 정치범수용소 실태 및 현황-보위부, 위폐발행·유통, 문제되면 업무상 필요.” 『통일한국』. 제26권 8호, 2008.
이영훈.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새인식-북한의 경제』.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 1917~1991.” 『외국군사사 연구; Ⅳ』. 국방연구소, 1997.
이점호. “북한의 특구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2009.
전경주. “북한의 불법 경제활동.” 『주간국방논단』. 제1322호, 2010.
정광민.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경제시스템의 변동.” 『국방정책연구』. 제86호, 2010.
정상화. “북한 비공식경제의 활성화가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보연구』. 제5권 2호, 2013.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월간 통일경제』. 8월호, 1995.

정유진. “북한 제2경제원에 대하여.”『통일연구』. 창간호, 1997.
조남훈.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북한경제리뷰』. 7월호, 2016.
탁성한. “북한의 군수산업: 북한 경제에의 영향과 향후 전망.”『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12.
하주희.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실체.”『월간조선』. 5월호, 2013.
한병진·임석준.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현대정치연구』. 제7권 1호, 2014.

Abbott, Andrew. “On the Concept of Turning Point.” *Comparative Social Research*. vol. 16, 1997.
Bennett, Andrew and Colin Elman. “Complex Causal Relations and Case Study Methods: The Example of Path Dependence.” *Political Analysis*. vol. 14, no. 3, Summer, 2006.
Brownlee, Jason. “Heredit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2007.
Bunce, Valerie. “The Political Economy of Brezhnev Era: The Rise and Fall of Corporat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2, 1983.
Cha, Victor D.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2010.
Doner, Richard, Bryan Ritchie, and Dan Slater. “Systemic Vulnerability and the Origins of Developmental States: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no. 2, Spring, 2005.
Gaddis, John L.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4, Spring, 1986.

Geddess, Barbara.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merican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June, 1999.

Habib, Benjamin. "North Korea's Parallel Economies: Systemic Disaggregation Following the Soviet Collaps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4, 2011.

Harrison, Mark. "Soviet Industry and the Red Army Under Stalin: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Les Cahiers du Monde russe*. vol. 44, no. 2-3, 2003.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January, 1978.

Kim, Jin-Ha. "Rethinking the Sunshine Promise: Structural Impediments to South Korea's Positive Inducement Policies for the North Korean Problem."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8, no. 3, September, 2016.

Lambert, Alan J., John P. Schott, and Laura Scherer. "Threat, Politics, and Attitudes: Toward a Greater Understanding of Rally-'Round-the-Flag Effect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0, no. 6, 2011.

Lankov, Andrei N. "Kim II Sung's Campaign against the Soviet Faction in Late 1955 and the Birth of Chuch'e." *Korean Studies*. vol. 23, 1999.

_____. "Kim Takes Control: The "Great Purge" in North Korea, 1956-1960." *Korean Studies*. vol. 26, no. 1, 2002.

Magaloni, Beatriz. "Credible Power-Sharing and the Longevity

of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1, Issue 4-5, April/May, 2008.

Mahoney, James.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vol. 29, no. 4, August, 2000.

Malesky, Edmund, Regina Abrami, and Yu Zheng. "Institutions and Inequality in Single-Party Regimes: A Comparative Analysis of Vietnam and China." *Comparative Politics*. vol. 43, no. 4, 2011.

Mearsheimer, John J.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3, 1992.

North, Douglas C. "A Transaction Cost Theory of Transact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2, no. 4, 1990.

North, Douglass C. and Barry Weingast.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9, no. 4, 1989.

Oberschall, Anthony and Eric M. Leifer. "Efficiency and Social Institutions: Uses and Misuses of Economic Reasoning i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2, 1986.

Porat, Roni, et al. "Motivated Emotion and the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Liberals Are Motivated to Feel Collective Angst (like Conservatives) when Faced with Existential Threat." *Cognition and Emotion*. Published Online, April

18, 2018.

Posen, Barry. "Emerging Multipolarity: Why Should We Care?." *Current History*. November, 2009.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ummer, 1988.

Qian, Yingyi and Barry R. Weingast. "China's Transition to Market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Chinese Style." *Journal of Policy Reform*. vol. 1, no. 2, 1996.

Qian, Yingyi, Gerard Roland, and Chenggang Xu. "Why Is China Different from Eastern Europe? Perspectives from Organization Theory."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3, no. 4-6, 1999.

Roland, Gerard. "The Role of Political Constraints in Transition Strategies." *Economics of Transition*. vol. 2, no. 1, 1994.

Sewell, William H. "Historical Events as Transformations of Structures: Inventing Revolution at the Bastille." *Theory and Society*. vol. 25, no. 6, 1996.

Snyder, Glenn.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July, 1984.

Svolik, Milan W.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April, 2009.

Woo, Wing Thye.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no. 3, 1994.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d.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Origins of North Korea's

Policy of Self-Reliance in National Defens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No. 1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12.

_____. "The 1967 Purge of the Gapsan Fa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No. 15,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13.

3. 기타

『로동신문』.
『노컷뉴스』.
『데일리안』.
『미디어펜』.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일요신문』.
『월간조선』.
『월간중앙』.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주간조선』.
『중앙일보』.
『DAILY NK』.
『dongA.com』.
『NKchosun』.

『NEWSIS』.
『news1』.
『RFA』.
『38 NORTH』.

한국은행 〈www.bok.or.kr〉.
Woodrow Wilson Center 〈www.wilsoncenter.org〉.

안드레이 구빈. "조선반도: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위기와 도전." 서종원. "투먼쟝 포럼 2016 참석 및 북중러 접경지역 자료수집." 한국교통연구원. 2016.
안진수. 『북핵 검증, 폐기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6.18.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규약." 2010.9.28.
탁성한. "북한 군수산업의 능력과 전망."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발표자료. 2012.
L1.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18.7.18.

Bystora, Irina. *Russian Military-Industrial Complex*. Aleksanteri Papers, 2011.
CIA. "Evolution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Soviet Industry 1917~57." CIA Historical Review Program Release in Full, 1999.
Fischer, Hannah.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RL 30004. April 20, 2007.
Myerson, Roger. "Learning from Schelling's Strategy of Conflict." Unpublished Manuscript, 2009.

Nanto, Dick K. and Emma Chanlett-Avery. *North Korea: Economic Leverage and Policy Analysis*.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2010.

Nanto, Dick K. and Raphael Perl.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February, 2007.

Office of the Korean Chair. "Record of North Korea's Major Conventional Provocations since 1960s." CSI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7.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연구보고서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기태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2 (2018)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KINU 통일연구원

값 12,000원
93340
9 788984 799493
ISBN 978-89-8479-949-3